

#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國內學術會議 發表論文集

1994. 12.

民族統一研究院

## 序 文

우리정부는 지난 8월 15일 경축사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하는데 이어, 그 동안 핵문제로 인해 교착상태에 있던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經協 활성화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時代的인 발전방향인 민족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또한 향후 같은 민족경제공동체로서의 활발한 교류·협력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선 분단으로 이질화된 跛行的 사회문화구조를 민족문화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체계와 부합되는 방향으로 재창조하려는 노력도 시급히 要望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은 구체적으로 統一文化에 대한 體系的이고 綜合的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바,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남북한 문화교류의 실천과 북한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또한 문화적 동질성을 확대하고 이질화를 최소화하여 이른바 文化共同體를 형성함으로써 원만한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當연구원은 그동안 통일문화를 연구해왔고, 그간의 研究結果를 바탕으로 통일문화의 概念과 바람직한 統一文化像을 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금번 94년 11월 29일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건설」이라는 주제로 제14회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보고서는 금번 국내학술회의에서 발표된 論文들과 討論내용요지를 수록한 것인 바,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統一文化 研究의 重要性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의 확산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대안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4. 12.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조정실

— 目 次 —

序 文

|                                   |        |     |
|-----------------------------------|--------|-----|
| 開 會 辭 .....                       | 李秉龍... | 1   |
| I. 會 議 .....                      |        | 3   |
| 1. 통일문화의 개념정립과 형성방향 .....         | 윤덕희... | 5   |
| 2. 남북문화교류의 현황과 문제점 .....          | 이헌경... | 50  |
| 3. 독일사례를 통해 본 문화적 이질성 극복 방향 ..... | 김학성... | 97  |
| II. 綜 合 討 論 .....                 |        | 145 |
| 〈附錄〉 會議日程 .....                   |        | 185 |

## 開 會 辭

분단 반세기를 눈 앞에 둔 오늘의 시점에서 한반도 정세는 轉換期를 맞고 있습니다. 共產體制의 붕괴로 민족분단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동서냉전체제가 와해되었고, 自由民主體制를 지향하는 통일조국의 未來像은 역사적인 흐름에서 그 당위성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민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난을 강요하였던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經濟破綻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 金正日體制의 전도는 결코 樂觀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북한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政策의 폭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合意事項의 성실한 이행여부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습시다만 북한이 마침내 제네바 미·북한 고위급 회담에서 核問題의 妥結에 원칙적으로 合意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일단 새로운 局面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8·15 경축사에서 自由民主統一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한데 이어, 그동안 核問題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남북한 經濟交流·協力の 길을 트기 위하여 「南北經協 活性化 措置」를 단행하였습니다.

북한이 拒否態度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만, 民族經濟共同體를 형성해가기 위해서는 南北經濟協力の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민족경제공동체가 궁극적으로 民族統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분단으로 인하여 야기된 남북의 이질화

된 社會文化構造를 民族文化와 인류의 普遍的 價値體系와 부합되는 방향으로 재창조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推進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당연구원은 그동안 「統一文化」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研究結果를 바탕으로 「통일문화」의 概念과 바람직한 統一文化像을 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國內學術會議를 마련하여 各계各층의 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學術會議가 「통일문화」의 形成·發展을 통하여 民族共同體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유익하고 알찬 學術討論의 場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 사계의 전문가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간단하나마 開會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 12.

民族統一研究院

院 長 李秉龍

# I. 會議

빈 면

# 統一文化의 概念定立과 形成方向

윤 덕 희  
(민족통일연구원)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
| II. 통일문화의 개념         | V. 맺음말               |
| III. 남북한 문화에 대한 비교인식 |                      |

## I. 머리말

통일문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 및 정책의 중심적인 접근 시각은 군사·정치적 해결을 통한 영토분단의 극복이라는 통일의 외형에 맞추어져 왔다. 즉, 제도통합 중심의 통일방안 제시와 이의 실현을 위한 남북협상 및 기능주의적 남북 접근전략에 집중해 온 경향이 있다.<sup>1)</sup>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일에 관련한 문화분야의 연구는 다음과

1) 현재 남한의 통일정책은 기능주의 또는 신기능주의적 통일방법론에 의존하고 있다. 기능주의론은 비정치적 국가통합 방법으로서, 여러 나라 사이에 격증하는 생산의 분업화와 상품 및 사람들의 광범위한 교류가 상호의 협력과 공동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창출하게 되며, 이와 같은 필요성이 자연발생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가져온다는 이론이다. 신기능주의론은 국가통합에 있어서 현존 정치기구의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책



같은 문제점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첫째, 통일연구나 통일정책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는 쉽게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통일을 전략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나머지 문화를 정치, 군사에 대해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여겨왔기 때문이었다.<sup>2)</sup> 그 결과 남북대화나 국제정세에 따라 문화에 대한 관심도와 논의가 좌우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기존의 통일 관련 문화분야의 연구는 주로 민족사적 정통성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북한문화의 이질화 규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sup>3)</sup> 즉, 문화적 전통성에 기반한 남한의 민족적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북한문화의 이질화 및 왜곡현상을 강조하는데 주력해왔다.

---

적으로 이해집단간의 교류를 촉진하면 이들 이해집단들은 그들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하게 되고, 결국 정치적 동맹관계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구영록 임용순 편, 「한국의 통일정책」 나남, 1993, pp. 179-180.

2) 여기에서 문화의 '상대적 독자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재의 남북한 체제와 같이 정치화 군사화의 정도가 높고, 국가권력의 통치행위로부터 독립적인 시민사회영역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문화영역의 상대적인 독자성은 확보되기 어렵다.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체제의 속성상 문화의 자율성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남북한간 대치상황과 냉전이데올로기가 지속되는 한 통일문제에 있어서 문화의 상대적 독자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남을 것이다.

3) '민족사적 정통성' 문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집중적으로 논의 연구되었으며, 이는 당시 남북한 두 체제 사이의 치열한 체제경쟁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예로서 『통일정책』에 개제된 다음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최창규, "민족사적 정통성 연구방법론", 1권2호: 1975.6; 이성근, "한국의 평화통일과 정통성 개념", 1권2호; 이병엽, "민족사적으로 본 우리의 정통성", 1권3호: 1975.10; 이병용, "민족사적 정통성 이론 체계화", 2권1호: 1976.4 등이 있다. 이들 논의에서 다루어진 민족사적 정통성 개념은 문화적 전통성, 국가의 법통성, 정치적 내지 사회체제의 정당성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셋째, 문화분야의 연구는 문화예술의 기능적 교류증진을 통한 문화통합에 중점을 두어왔다. 문화적 차원에서 남북한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 방향이나 목적 설정에 대한 고려없이 남북 문화교류 방안 등에 대한 단기적·전술적 차원의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남북 대치관계 속에서 문화분야의 연구나 논의가 북한을 이해하고 남북한간의 문화적 이질화를 해소해나가는 입장에서 장기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사회적·학문적 분위기는 별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넷째, ‘문화’개념의 복잡성과 추상성으로 인하여 연구자별로 개념정의 및 연구의 초점이 다양하다. 우선 통일문제에 있어서 문화분야의 연구는 문화예술계 내지 인문학계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이들은 문화의 개념과 연구의 초점을 구체적인 표현양식의 부문별 연구(예컨대, 문학, 언어, 예술, 또는 가치관, 종교 등)에 두고 보다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사회과학계에서는 문화의 개념을 부문별 행동양식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가치관, 삶의 양식 등에 초점을 맞추어 조망하려는 노력을 보여왔다. 따라서 통일연구에 있어서도 문화개념의 혼란이라든가 개념적 차이로 인한 접근법의 이질성이 심각히 초래되었으며, 이러한 두 가지 접근태도를 연결시켜 보려는 노력도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통일문제와 관련된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힘입어 통일문제를 보다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의 중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첫째, 탈냉전의 국제정세 변화와 더불어 독일통일 이후 야기된

사회적 혼란의 교훈은 실질적인 민족통합이 주민들간의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통한 내적통합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둘째, 1980년대 중반 이후 남한사회내의 변화로 통일논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문화예술계는 물론 그동안 통일문제를 비교적 등한시해왔던 인류학, 심리학, 교육학, 철학 등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자연과학 분야도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의 총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통일논의를 상호 연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독일통일, 북한경제의 악화 등의 요인이 작용하여 통일의 실현가능성이 점차 높게 인식되면서, 통일연구에 있어 기존의 현상유지 차원의 통합방안을 초월하여 남북통일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를 구상해보는 통일미래상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sup>4)</sup> 통일 미래상에 관한 논의는 기존 남북한체제의 내부적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고, 각 체제의 변화는 정치성과 이념성이 배제된 문화구조의 개혁과 상호 수렴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통일문화’를 통해 통일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토적 통합이나 국가기구의 통합과 같은 통일의 외형보다는 그것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민족통합의 기반이 되는 사회내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는 넓은 의미에서 통일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를 구상해보는 통일의 내용과 본

---

4) 그러나 아직까지 미래상에 관한 연구는 방법론적 고려가 결여된 당위론적 차원에서 추상적인 미래상 제시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질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의 개념을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의 체계로서의 가치관, 철학, 세계관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칙체계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난 행동자체를 모두 포함한 생활양식의 총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sup>5)</sup>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통일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 및 의미를 재정립함으로써 통일문화의 체계적 개념화를 시도한다. 둘째, 통일한국의 이념과 사회·경제구조에 상응하고 민족동질성 회복과 민족문화의 성숙을 지향할 문화체계를 제시한다. 셋째, 남북한 문화통합과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실천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구성은, 우선 민족공동체의 의미를 통해 통일문화의 개념과 통일문화 형성의 기본목표를 설정해보고, 이어서 남북한 문화구조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 및 공유가능성을 규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통일문화 형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실천적인 정책수립의 골격을 제시하고자 한다.

---

5) 문화의 개념정의에 대해서는, 전경수, 「문화의 이해」, 일지사, 1994, pp. 54-87 참고. 또한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인류학자 E. Taylor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에 의하면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및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하여 획득된 기타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 총체”로서 인간들이 사회생활을 통해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모든 생활양식으로 이해된다. John B. Thompson, *Ideology and Modern Cultur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p. 128. 문화의 개념에 관해서도 같은 책, pp. 122-162 참고.

## II. 통일문화의 개념

### 1. 민족공동체와 통일문화

통일문화가 궁극적으로 민족통합의 달성을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민족공동체의 개념과 의미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민족공동체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서서히 형성된 '민족성'이라는 추상적인 결속력과, 이를 바탕으로 현실상황에서 기능적으로 형성된 '국가목표'라는 구체적인 결속력으로 이루어진 민족국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sup>6)</sup> 즉, 민족공동체 형성은 구성원들이 민족의식과 국가목표의 추구에 있어 공감대적 가치관을 형성할 때 가능해진다.

민족을 동일한 언어, 영토, 혈통, 역사성, 종교 등의 객관적 보편성과 상호애,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독립성, 귀속의지 등의 주관적 특수성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집단<sup>7)</sup>으로 인식할 때, 민족의식은 역사성 속에서 민족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성립된다. 반면에 국가의지는 공동체의 현실적 조건 아래 구성원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이다. 국가의지가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공동체의 환경

---

6) 이러한 개념은 공동체의 사회심리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문화적 공동체론과 도이치와 하스로 대표되는 통합이론가들의 기능적 공동체론을 결합시킴으로써 도출될 수 있는 개념이다. 한홍수, "민족주의와 민족공동체 형성", 「민족의식의 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p. 217.

7) Karl Deutsch,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cation*, Boston: MIT Press, 1966, p. 17.

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영토적 통일, 국가적 번영의 달성,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더불어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구조의 확립,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위상의 보장 등이 그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의식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역사적 생성물인 반면에, 국가의지는 공동체가 추구하여야 할 현실적 지향을 제시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족공동체란 하나의 민족이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고 강한 동질감에 의거하여 사회기능을 수행하는 문화, 기능적 동류집단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민족공동체는 구성원들의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각 기능을 국가차원의 통합된 수준으로 유지시키며, 민족번영의 공동체적 목표 아래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강력한 통합의 수준을 유지한다.<sup>8)</sup>

통일은 궁극적으로 민족동질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현실적 목적을 지향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뜻한다. 남북한의 경우 민족공동체 형성은 민족적 동질성을 재창조하는 일과 정치, 경제, 사회적 지향에 대한 공통된 가치관을 추구해야 하는 미래적 과제를 포함한다.

## 2. 통일문화의 개념화

‘통일문화’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85년 남북한간 고향방문단과 예술단의 교환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문화예술을

---

8) 민족국가라는 일반적인 용어보다 민족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민족적 동질성에 기초한 통일지향성을 보다 뚜렷이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며, 민족공동체 개념이 한국적 상황에 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롯한 비정치적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정책적 관심사로 부각된 것이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sup>9)</sup> 이후 학계, 문화계 내에서 통일문화에 관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있어왔지만 이에 관한 체계적 연구나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통일문화’의 개념자체에 대한 혼란에서 찾을 수 있다. ‘문화’라는 개념 자체도 추상적이고 다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문화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상태에서 ‘통일문화’라는 용어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문화에 관한 논의에서 개념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를 논하는 경우가 많았고, 구체적으로 논할 경우에도 입장에 따라 다양한 개념을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되어온 ‘통일문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문화개념의 범주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된다. 사회과학계열 전공자들은 대부분 총체론적 전망에 의거해서, ‘통일에 대한 가치관, 행동양식’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문화성향을 남북한 사회구조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구체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문화예술계의 연구자들은 주로 ‘통일을 지향하는 문학, 예술, 언어, 도덕’ 등 문화 개별부문에서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

9) 당시 분단문화 극복의 분위기를 조성을 위하여 문학, 문화예술, 언론, 교육 등의 분야에 걸쳐 통일문화 지향이라는 주제로 국토통일원의 지원 하에 남한 학계 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된 적이 있다. 국토통일원 주최의 통일문화 심포지움으로 「통일문화 지향과 문화예술」(1985 11.25), 「통일문화 지향과 언론계의 역할」(1986.6), 「통일문화 지향과 교육계의 역할」(1986.10) 등이 개최되었다.

그나마 ‘통일문화’의 개념정의를 시도한 것은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sup>10)</sup> 그러나 기존 논의에 나타난 ‘통일문화’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초점이 목표/과정, 기능/당위, 현재적 차원/미래적 차원, 과거(전통)중심/미래지향적, 실천적/규범적, 현상타파/현실계승, 등의 서로 다른 분석 차원이 상호 연계성 없이 개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통일문화의 구성요소의 다양함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통일문화의 개념화는 통일문화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시도할 수밖에 없다. 또한 통일문화의 내용은 ‘통일’의 의미를 재정립함으로써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1) 통일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및 가치관과 생활방식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단절적이고 대립적인 분단체제를 총체적으로 극복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그러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 바로 통일이기

---

10) 예를 들면, “통일을 지향하고 민족통일체를 열망하는 가치체계와 행동양식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문화” (조민,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제2권 2호); “남북동포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통일에 관한 이념, 지식, 법률, 정치와 경제제도, 예술, 도덕 등의 총체적인 생활양식이며, 기존문화와 달리 새로이 형성되거나 창조되는 성격”을 가진다 (양홍모, “통일문화형성론 서설”, 국토통일원, 「통일논총」, 제5권 제1호, 1985. p. 6); “통일문화란 40년동안 남북한 분단생활을 통하여 각자성을 갖게 된 이질화한 생활양식 및 그 속에 들어 있는 법률, 도덕, 신앙, 지식, 예술, 관습 등의 각자성을 민족사적 정통성 전개에 맞게 민족적 단원으로 통합해 나가는 능력과 의지 및 관습의 복합적 총칭이다” (김창순, “통일문화의 창조운동에 논한다” 북한, 1984. 3월호); “통일문화라는 말 속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문화라는 뜻과 아울러 통일 후에 마땅히 이 땅에 자리잡아야 할 문화의 뜻까지도 포함된다” (정세현, “통일문화 창조의 전망” 한국공연예술평가협회 주최 통일문화 심포지엄, 「통일문화 지향과 오늘의 공연예술」, 1985.2)



도 하다.

2) 통일은 ‘현재적’ 관점에서는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왜곡된 현실의 타파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미래적’ 관점에서는 새로운 통일국가의 미래상 창조를 내포한다.

3) 통일은 ‘실천적’인 운동인 동시에 그 자체가 실천적 운동을 규율하는 ‘이념 및 규범’을 내포하고 있다.

4) 통일은 민족사적 정통성을 ‘계승’하는 작업인 동시에 민족의 ‘발전’을 통하여 세계사적 조류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통일’의 복합적 의미는 ‘통일문화’ 개념의 내용적 복합성을 설명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통일문화는 ‘목표’와 ‘과정’을 연결하는 개념으로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지향해야 할 문화체계인 동시에 남북한 이질적 문화의 극복과정에서 제기되는 문화적 현상을 지칭한다.

2) ‘규범’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을 연결시키는 개념으로서, 통일문화는 통일국가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문화체계인 동시에, 이를 실천하는 운동으로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확산하고 남북한 문화의 공통기반을 확인 확산시키며, 나아가 문화개혁을 추진하는 실천적인 사회, 문화운동의 성격을 지닌다.

3) 실천적인 측면에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개념으로서, 분단에 의해 왜곡된 문화구조의 극복을 현재적 과제로 삼되, 이를 분단현실의 틀 안에서만 한정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통합과 민족문화의 창조라는 미래적 시각에서 조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동원’적 기능과 정책지도 ‘이념’의 기능

을 동시에 수행하는 개념으로서,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국민들의 의지와 동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사회적 동원의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정책을 통일지향적인 방향으로 수립하는 정책 지도이념의 기능도 지니고 있다.<sup>11)</sup>

5) ‘전통’적인 것과 ‘발전’적인 것, 민족 ‘특수성’과 인류 ‘보편성’을 연결하는 개념으로서, 통일문화의 개념은 인류의 보편적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문화적 번영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에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보완하고 재구성하는 의미에서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복원·계승·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통일문화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포괄한다. 첫째, 통일한국의 사회구성원이 다 같이 지향해야 할 신념, 가치체계, 행동양식으로서 통일한국의 이념에 부합되는 민족문화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의미한다. 둘째, 통일과정을 통해 분단된 사회·문화구조에서 파생되는 남북한간 이질화 및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통합을 이루게 하는 실천적 기능을 지닌 문화체계를 의미한다. 통일문화의 개념은 결국 통일국가의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와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간 문화적 이질화 극복이라는 두 측면을 연결시키는 문화규범 및 그 실천정책의 창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11) 문홍주, “통일문화 지향과 교육계의 역할,” 국토통일원, 통일문화심포지움 「통일문화 지향과 교육계의 역할」 1986.10. pp. 16-17.

### 3. 통일문화 형성의 기본방향

민족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는 통일문화는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본원칙과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하에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새로운 민족공동체는 남북한간의 대립·경쟁을 극복하고 조화점을 찾음으로써 통일이전 남북한 체제가 지향하였던 이념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남한과 북한의 기존체제하에서 나타났던 상극성을 해소하고 서로의 장점들을 부각함으로써 민족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제를 통일한국의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민족공동체의 내용은 국제사회의 발전추세 및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체계와 부합되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이 각기 체제 대립에서 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폐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 민주화, 개방 등으로 요약되는 세계적 조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통일한국의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민족공동체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는 사회내 특정집단이 나 계급, 혹은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사회내의 다양한 계층, 다양한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체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사회의 변화방향을 고려해서 다양한 논의가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민족공동체의 지향성과 부합되는 방향에서 통일문화의 형성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문화가 통일국가의 바람직한 문화상이라는 점에서 당

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통일문화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지닐 때만이 통일과정과 민족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까지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문화의 형성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파행적 사회·문화구조의 극복을 전제로 하는 만큼 내부개혁을 통한 기존 남북한 문화의 일정한 변화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남북분단과 적대상황에 의해 왜곡된 각 문화가 각 체제의 틀 내에서 각자의 문화적 전통을 회복하고 정치·경제적 수준에 맞는 사회·문화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주민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문화적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통일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민족전통을 확산시킴으로써 통일문화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족적 정체성은 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 특수성, 즉 '환경과 역사 속에서 축적된 생활양식의 총체'로서의 문화적 전통에 기인하기 때문이다.<sup>12)</sup>

넷째, 남북한의 사회구조적 특성과 변화방향에 대한 명확한 인식

---

12) 민족정체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전통문화 traditional culture'와 '문화전통 cultural tradition'을 구별해야 한다. '전통문화'는 과거 전통사회의 문화라는 뜻이며, '문화전통'은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축적되어진 문화양식으로서, 현재의 사회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행위양식이 되고 있는 문화를 뜻하는 것이다. 물론 전통문화를 빼놓고서 문화전통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모든 전통문화가 계승해야 될 문화적 전통은 아닌 것이다. 민족정체성을 위해 전통을 계승한다고 말하는 것은 현재의 환경에 적합한 전통문화의 유형을 창조적으로 재조정하고 그것을 더욱 개발해 나아가겠다는 것을 뜻한다. 임희섭, 「한국의 사회변동과 문화변동」 현암사, 1985, p. 19.

을 바탕으로, 그와 같은 미래의 사회구조에 대한 높은 적합성(relevancy)을 갖는 문화유형을 통일문화로 형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남북한 통일과정은 물론 새로운 통일국가의 문화상 수립에 있어서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통일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장해줌으로써 전체사회의 다양한 하위문화(sub-culture)의 내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데 기여해야 한다. 즉, 남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계층, 직업, 성별, 세대, 지역간의 격차를 초월하여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문화유형을 개발함으로써 문화적 통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남북한의 이질화된 문화구조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다른 문화의 융합이 가져오는 역동성을 긍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갈등을 점진적으로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

여섯째, 통일문화가 추구하는 민족문화의 발전은 국제사회의 문화적 변화추세 및 인류의 보편적 가치체계와 부합되는 방향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 III. 남북한 문화에 대한 비교인식

통일문화 연구에 있어서 남북한 문화에 대한 비교분석이 갖는 의의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 및 공유점을 규명함으로써 이질화 극복과 공유점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에 기여한다. 둘째, 남북한 문화구조의 특수성 및 변화방향을 이해함으로써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통일국가의 문화상

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한 문화가 분단으로 인해 어떻게 왜곡되어 왔는가를 규명함으로써<sup>13)</sup> 분단문화의 극복을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전제로 삼을 수 있다.

남북한은 분단이래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정치·경제체제를 형성시켜 옴에 따라 그 문화의 성격도 달리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남한문화의 변화과정은 남한 자본주의의 발전·정착과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온 것으로 보아야 하며, 반면에 북한 문화체제의 변화과정은 북한 사회주의 발달과정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문화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자본주의문화와 사회주의문화의 일반적 특성을 대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남북한 문화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커다란 범주 내에서 각기 특수한 역사적, 정치경제적, 문화적 상황에 의해 다른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국가들의 문화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수성을

---

13) 1970년대 이후 사회과학계에서는 분단과 남북한 사회구조와의 상관성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변형윤,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사, 1986, p. 397; 이호재, “분단시대의 사회학,” 「창작과 비평」 제14권 1호, 1976, pp. 250-268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백낙청 교수는 분단이 남북한 사회구조에 규정성을 갖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명제하에 ‘분단체제론’을 다시 제기하고 나왔다. 즉, 남북한은 분단체제로 인하여 사회발전이나 민주화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이러한 분단체제는 독자적인 재생산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이를 극복하지 않는 한 남북한 주민들의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학술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백낙청의 ‘분단체제론’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글을 참고할 것. 백낙청,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 「창작과 비평」 1992, 가을; 이종오, “분단과 통일을 다시 생각해보며: 백낙청교수의 분단체제론을 중심으로,” 「창작과 비평」 1993, 여름; 손호철, “‘분단체제론’의 비판적 고찰: 백낙청교수의 논의를 중심으로,” 「창작과 비평」 1994년 여름; 정대화,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체제’의 탐구,” 「창작과 비평」 1993 가을.

키워 왔기 때문이다.

문화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인으로서 남북한 사회의 특수성은, 체제의 근본성격, 근대화, 분단 등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sup>14)</sup> 이러한 정치, 경제, 역사적 요인이 남북한 사회의 문화적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가를 비교분석하는데 있어서 1/체제의 상이성에서 비롯된 문화적 차이, 2/근대화로 인한 문화변동의 방향, 3/전통문화의 변화·유지 현황, 4/분단으로 인한 문화적 왜곡현상 등의 네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 1. 체제의 상이성에서 비롯된 이질화

남북한은 각기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인민주의를 지향하면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상극성을 지닌 체제로 사회변동을 경험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화는 상당한 이질화를 겪어 왔다.

첫째, 북한문화에서는 집단주의를 중요시하는 반면에 남한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문화를 지향하면서 모든 문화활동에 있어서 자아의식이나 개인적인 행위를 지양하고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집단에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남한에서 자본주의 문화가 개인의 자발성, 개인적 욕구에 의거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둘째, 남한 문화의 다양성과 북한 문화의 획일성을 들 수 있다.

---

14) 이는 '통일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남북한 문화의 성격을 비교한다고 할 때, 남북한 문화가 각기 또는 공히 지양해야 할 문화적 요소와 지향해야 될 문화적 요소를 가려내기 위하여 현 분단상황에서의 남북한 문화의 주요 부문을 범주화해 본 것이다.

남한은 자유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지향한다. 생활방식과 가치관에서부터 여가 활동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욕구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성이 보장된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문화의 내용이 획일적으로 혁명사상 고취와 김일성 유일사상의 확산으로 채워져 있으며,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셋째, 남한 문화의 개방성과 북한 문화의 폐쇄성을 들 수 있다. 남한은 해방 이후 계속 이질적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문화 변용<sup>15)</sup>에 따른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외부 사조의 유입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북한은 조선의 봉건사회, 일제하의 군국주의를 거쳐 곧바로 폐쇄적 공산정권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타문화와의 접촉을 통한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sup>16)</sup>

넷째, 남한은 이질문화에 대한 포용력과 적응력이 크며 이질적인 문화와의 공존을 당연시하는 반면, 북한의 경우 사회의 폐쇄성과 유일사상 및 문화적 순수성의 강조로 인해 이질적인 것

---

15) 문화변용(Acculturation)이란,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쌍방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문화적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문화변용에 대해서는, Bruce P. Dohrenwend and Robert J. Smith, "Toward a Theory of Acculturation," *South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vol. 18, 1968, pp. 30-39 참고.

16) 외부사조의 변화에 둔감할 수 밖에 없는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왕조사회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문화예술에서 전통적인 요소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도 북한사회의 폐쇄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사회내의 전통문화적 요소에 대해서는, 김영수, 「북한의 정치문화: 「주체문화」와 전통정치문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1 참고.



에 대한 허용범위가 적으며, 타문화에 대한 적응력도 약하다.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체계가 외래적인 문화요소에 대한 면역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은 통일이후 남북한 문화통합의 관점에서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에서 통일 이전에 북한사회의 개방이 어떠한 형태로든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다섯째, 남한에서는 문화가 독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통제역량을 과시할 수 있으나, 북한에서는 문화가 국가권력에 종속되어 있다. 북한의 문화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다양하고 독자적인 민간 문화조직체 및 생활 문화운동이 널리 확산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영역도 확보하고 있어서, 국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을 유도하기도 한다. 나아가 개인이 다양한 방법과 채널에 기초한 일상적인 문화활동이나 생활 패턴을 통해 한 시대의 문화적 흐름을 유도해 나갈 수 있다.

여섯째, 이러한 문화의 상이성에 따라 남북한의 가치지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북한의 가치지향은 주체사상으로, 김일성 유일사상에 귀착하는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으로 특징 지워진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인성은 타율적이고 수동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지닌다.<sup>17)</sup> 반면에 남한의 가치지향은 다원적인 가치

---

17) 북한주민의 인성에 대해서는, 서재진, 김태일, 「북한주민의 인성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2 참고.

를 인정하고 개인의 창의와 자율성을 신봉하며, 개방적이고 물질추구적인 가치지향을 가지고 있다.

## 2. 근대화로 인한 문화변동 비교

남한과 북한은 체제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본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근대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근대적 사회구조에로의 사회변동을 겪어 왔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근대화 전략으로 사회발전 과정에서도 차이를 겪어 왔으며, 이에 따라 사회·문화적 성격도 서로 달라졌다.

남한에서는 1960년대이래 본격화된 산업화의 결과로 전통적인 생활형태와 가치체계에서 벗어나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보여지는 문화변동의 일반적인 정향을 보여주었다. 즉, 남한의 문화는 사회의 다원화, 개인의 자율성 증진과 함께 합리성의 증대, 전통적 도덕성의 붕괴, 실용주의와 개인주의의 확산 등과 관련된 현대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북한의 경우 공산주의적 동원체제에 의해 근대화가 추진됨으로써 산업화에 따른 사회변동의 일반적인 정향에서 크게 벗어났다. 근대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이고 집단주의적 사회가 유지되었으며, 주체사상으로 김일성주의 지향의 획일적 문화가 자리잡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북한에서도 사회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화체계의 변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첫째,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도시화, 교육수준의 상승, 사회분화의 발달과 사회통제의 이완, 혁명 후기세대의 등장 등의 사회구조 변화

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적 가치 규범과 괴리된 주민들의 가치관과 행위를 유발시킴으로써 문화변동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1980년대 들어서 북한정권은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부자세습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경공업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와 함께 시장경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예컨대, 획일화된 생활규제의 완화, 능력별 임금제도 실시, 상설자유시장의 부분적 허용, 개인부업의 허용, 외화상품의 등장, 종교활동의 외면적 활성화 등의 정책 변화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치체계에도 변화 조짐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들어 북한주민들 사이에 물질과 문화에 대한 개인적인 욕구가 상승되고, 나아가 개인주의적 성향이 증대하고 있으며,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사고의 틀에서 실용주의적이고 비교의식을 지닌 가치관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는 조짐이 엿보인다. 이는 북한의 문화도 결국은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변동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대화 전략과 과정의 상이성으로 인한 사회변동 및 문화구조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모두 산업화에 의한 문화변화의 정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전통문화의 비교

분단이래 남북한 양쪽에서 전통문화가 많이 파괴되었다. 남한에서는 산업화와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이 초래한 상업주의적 대중문화의 폐해로 인하여 전통문화가 급속히 해체됨으로써 생활문화나 의식구조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북한에서는 사회주의문

화의 도입으로 전통문화가 정치적·계획적으로 파괴되었다.<sup>18)</sup>

그러나 남한과 북한사회에서 전통적 가치체계에 근거한 규범관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며, 전통문화의 뿌리는 잔존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1970-80년대 정부가 추진해온 민족문화정책이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의 맥을 유지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sup>19)</sup> 이와 병행해서 1970년대 이래 민간부문에서 민족문화를 되살리려는 문화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함으로써 전통예술, 전래생활 풍습 등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민족문화운동의 추진이 결과적으로 민족문화에 관한 관심을 지속시키는데 공헌하였다.

북한에서도 정권에 의한 전통문화의 정치적 이용이 주민들 사이에 뿌리 깊은 전통적 가치체계를 유지·부활시키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발전과 주체사상의 확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의 사회주의화를 지향하면서도, 이를 현실화하는 데서 야기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를 수용 또는 복구하는 정책을 동시에 실행하였다. 특히 1980년대의 국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통적 문화유산을 대거 회복하고 있다.<sup>20)</sup>

---

18) 북한은 전통문화를 봉건적 잔재로 규정하여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친족의 개념을 말살시켰으며, 세시풍속과 종교생활에서도 전통문화를 단절시켜버렸다. 부남철, “북한의 유교적 전통윤리 정책: 가족법윤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행정사연구회, 「행정사 연구」 제1호, 1993, pp. 173-187.

19) 정갑영,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 문화발전연구소, 「연구논문집」 제1집, 1993, pp.77-78.

20) 외부적으로는 소련 동구권의 몰락과 이에 따른 국제적 고립, 국내적으로는 경제적 위기와 김정일 세습체제 확립을 위한 사회통제 강화의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의 강조와 국가권력의 의인화는 사회 내에 유교이념에 기초한 가부장적 권위주의 및 운정주의를 강화시켰다. 1980년대 중반이후에는 사회정치생명체론, 조선민족제일주의 등의 강조를 통해 전통과 민족이 통치수단을 강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다.<sup>21)</sup> 제도적 측면에서도 추석이나 단오, 설날 같은 전통 명절 및 전래 생활풍습을 부활시키고 있으며, 단군릉 발굴 등을 통해 민족문화 유산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도 가부장적 권위주의, 남녀간의 불평등, 혈연주의, 상속제의 부활 등과 같은 전통문화 요소가 다시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22)</sup>

최근에 들어 통일에 관련해서도 남북한이 민족주의를 이념적 근거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1993년 4월에 발표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통해 민족주의적 공세를 강화했으며, 남한에서는 1993년 2월 25일 김영삼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올 수 없습니다”라는 말로 ‘민족우선주의’를 내세움으로써 통일과정에서 남북한간의 이념적 공통분모가 재확인되었다.

#### 4. 분단문화

남북한 사회를 공히 지배하고 있는 분단의 논리가 존재하며, 이것이 남북한간 이질화를 심화시키고 통일을 지체시키고 있는 요인

21)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과정 및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전상인 「북한 민족주의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를 참고할 것.

22) 이은죽,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법문사, 1993, pp. 170-202 참고.

이기도 하다. 분단문화의 핵심적 내용은 민족간의 대결의식과 적대감으로 표출되는 냉전적 문화이다. 남한에서는 동족상잔의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적개심과 혐오증이 일반국민들의 의식세계에 뿌리내려 있다. 이러한 적색혐오증은 반공 이외에 별다른 통치이념을 찾지 못했던 남한의 역대 정권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장되어 온 측면이 있다. 북한에서도 남한정권과 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과 혐오증은 대단히 극렬하다. 북한정권은 상징조작을 통하여 주민들의 적개심을 극대화시켰으며 이를 정권유지 및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냉전적 문화는 다음과 같은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첫째, 권위주의체제와 권위주의적 문화를 유지·확산시켰다.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에 외세 의존적인 권위주의적 정권이 등장하였으나 그것을 유지·강화시킨 것은 민족분단에서 오는 대립의식이였다.<sup>23)</sup> 즉, 민족분단이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는 강한 구심력과 생존을 보장해주는 카리스마의 존속을 가능케 한 것이다. 분단으로 인해 적대적으로 대치하게 된 남북한 정권은 표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앞세웠으나 실제로는 ‘반동제거’와 ‘반공노선’에서 정통성의 근거를 찾으려 하였다. 남한에서는 반공이념이 건국이래 국가목표의 최우선 순위로 강조되어 왔으며 국민의 정치생활을 지배하고 감정적 차원의 무조건적인 반공 정치문화를 형성시켜 왔다. 북한에서도 김일성의 혁명사상은

---

23) 고영복, “민족통일을 위한 선결과제,”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편, 「현대자본주의와 공동체 이론」, 한길사, 1987, p. 369.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조성하였으며 온 국민을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배타적 민족의식을 조성하였다.

둘째로 다원주의의 약화를 들 수 있다. 분단은 남한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내의 다양한 이념과 다원적 정치활동의 영역을 축소시켜 왔다. 또한 분단상황에 대한 인식을 둘러싼 사회내 갈등의 첨예화는 의식의 양극화 현상 및 흑백논리의 횡행을 초래하여 남한에서 건전하고 다양한 중간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였다. 북한에서는 분단상황이 김일성 우상화와 유일사상을 모든 주민에게 주입하는데 효율적으로 이용됨으로써 공산주의 역사상 가장 획일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장하였다.

셋째, 남북한의 대립과 냉전문화는 남한과 북한에 민족주의의 왜곡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본질적인 성격의 민족주의는 민족구성원 사이의 통합과 전통에 바탕을 둔 발전의 모색과 민족성원간의 대등성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분단된 남북 양체제는 대립적인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서로 민족주의를 이용하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민족국가를 이룩하여야 할 당면과제로서의 민족주의는 밀려났으며 정권의 정당성을 논리화시켜 주는 이념적 도구로 활용되었다.<sup>24)</sup>

---

24) 진덕규, “분단사회의 민족주의 형성에 관한 고찰,” 변형윤 외,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사, 1986, 21-24.

#### IV.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남북한 문화의 성격과 특수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규명할 수 있었다. 첫째, 남북한 문화의 공유점으로는 근대화 지향으로 인한 문화변화의 방향, 민족성 유지 및 전통문화의 강조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는 통일문화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남북한 문화는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심각한 이질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갈등을 예측하여 해소하는 것이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우선과제로 제기된다. 셋째, 남북한은 공히 분단으로 인한 문화적 왜곡화 현상을 경험하였으며, 통일문화 형성은 이러한 분단문화를 극복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은 통일 이전이라도 현대사회의 성숙한 시민문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각자의 문화구조를 재조정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민족 또는 전통문화를 확인·확산함으로써 민족적 동질성을 높인다.

셋째, 통일 이후 공동생활을 통해 겪게 될 남북한 주민간의 문화적·심리적 갈등을 예측하여 이를 사전에 해소한다.

##### 1. 남북한 문화구조의 개조

남북한 문화구조는 남북한 각 문화의 변화방향과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정향에 부합하도록 다원주의, 시민사회의 활성화, 합리주의,



인간중심의 사회를 추구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남한사회는 북한사회에 비하여 이러한 방향으로 상당히 진전되어 있으나 통일국가의 문화적 성숙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혁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가. 다원주의

남북한은 기존의 권위주의 문화와 획일성에 바탕을 둔 냉전문화에서 벗어나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내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남한사회는 북한사회와 비교해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특히 80년대 중반이후 민주화와 더불어 사회 여러 방면이 다원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원주의 문화는 광범한 신념, 사상 또는 태도들이 자유롭게 공존하고 그러한 신념, 사상, 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상호 연대할 수 있는 문화이다.<sup>25)</sup> 다원주의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오류에 빠지기 쉬운 존재로 보기 때문에 어떤 단일한 신념이나 조직세력이 오랫동안 사회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을 위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다원주의는 다층적이고 균형 잡힌 여러 정치적 형태와 과정, 여러 가지 소유형태, 다양한 결사체들이나 공개적인 토론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과오를 범하기 쉬운 인간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는 데 관심을 둔다.

다원주의가 추구하는 문화체계는 신념이나 종교, 이익이 다른 개

---

25) 다원주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Gale Stokes, "Lessons of the East European Revolutions of 1989," *Problems of Communism*, vol.XL Sept.-Oct. 1991 pp. 17-22.

인이나 집단 사이에 문명적인 관계가 지배하는 다원주의적 문화만 아니라, 자유주의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계급적 불평등과 편견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평등 지향적 사회운동에 의한 평등주의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 나. 시민사회의 활성화

시민사회의 발달은 보편적 의미에서 한 사회의 문화적 성숙을 가늠한다. ‘시민사회’의 개념을 단순화해 보면 “사람들이 사적 시민으로서 서로 상호작용을 가질 수 있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들 자신의 여러 가지 조직을 창조하는 사회생활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26)</sup>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sup>27)</sup> 시민사회란 개인적 권리, 자유, 자원단체들이 제각기 사적 관심, 이해 그리고 의도에 따라 정치적으로 방해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영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시민사회의 국가로부터의 보호와 아울러 자율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첫째, 남한에서는 기존 시

---

26) 한배호 “정치변동과 국가-시민사회의 긴장관계,”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1992, p. 66.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로크, 몬테스큐, 루소 등의 고전적 자유주의사상가로부터 헤겔, 뒤르켐, 그리고 맑스와 그람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아직도 그 의미는 부정확하다.

27) ‘시민사회’ 개념에 대해 만족할 만한 외연적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으며, ‘이상적’인 시민사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보다 성숙하거나 덜 성숙한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자본주의의 등장 및 공고화, 부르주아 문명,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불가분하게 연계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개념의 본질은 ‘자유주의적 부르주아문명’이 최고봉에 도달했던 특정의 역사적 시기를 통해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민사회가 국가로부터 보다 많은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북한에서는 전체주의적 체제에 의하여 소멸된 시민사회를 회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강력한 국가와 기술관료의 통제를 통해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억압해온 권위주의적 지배를 해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민사회의 재생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시민사회의 불완전한 생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다. 남한의 경우 권위주의지배가 해체됨으로써 자원적 집단들이 번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그것들이 다원주의적 문화를 갖추지 못한 속에서 서로 비타협적이고 때로는 폭력에까지 의존하는 비문명적 경쟁을 벌이거나 서로 심각한 갈등을 조성하게 될 때, 진정한 시민사회가 등장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원주의와 시민사회가 중국적으로 추구하는 민주화란 국가가 사회의 자율성을 진정으로 존중할 때, 그리고 사회는 사회내의 자원적 결사체들이 자유로운 형태를 형성할 뿐 아니라 저들 사이에 서로 자율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적 문화가 내면화될 때 구축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시민사회는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의식과 문화의 통합을 주도함으로써 통일문화의 주요 요소로 기능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통일문화의 주체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회복한 시민사회가 되어야 한다. 국가와 같은 공적기구가 통일문화의 형성을 주도할 경우 이념적 통합이라는 명분하에 획일화되고 전체주의화된 의식을 재창조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sup>28)</sup>

---

28)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수준의 차이는 각각이 처해 있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에 의한 획일적인 통합노력은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

#### 다. 합리주의

민주적 사회질서를 성숙시켜 나아갈 통일국가는 남한과 북한에 잔존해 있는 ‘힘의 문화’<sup>29)</sup>를 극복하는 새로운 문화적 대안으로서 합리주의 문화를 지향해야 한다. 1960년대 이래 남한과 북한은 각기 근대화와 산업화를 지향해오면서도 이러한 산업사회의 구조에 적합성을 가지는 합리주의적 문화를 키워오지 못했다. 남한에서 60년대 이후의 공업화와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각 사회에 있어서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를 파괴하였다. 그 대신 남한에서는 재력, 권력, 학력과 사회망이 인간관계의 주요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북한에서는 관료주의의 병폐<sup>30)</sup>와 새로운 불평등 사회구조<sup>31)</sup>가 발생하게 되었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는 지배-피지배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발생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

남한과 북한에 잔존해 있는 힘의 지배와 힘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적 대안은 무엇보다도 합리주의가 적합하다. 즉, 사회통합의 원리로서 더 이상 전통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현대사회구조에서는 합리주의가 중요한 통합 원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리성 가운데 도구적 합리성보다는 비판적 이성과 창조적 이성에 기초하는 합리성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32)</sup> 비판적 이성은 어떠

---

29) 임희섭 편,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화」 나남, 1988. p. 25.

30) 북한 관료사회의 부패와 부조리에 대해서는,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고.

31) 이에 대해서는,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 377-390 참고.

32) 임희섭 편, 앞의 책, pp. 27-28.

한 가치나 유형도 그것이 절대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비판을 통해 창조와 개혁의 영역을 넓혀준다. 이와 같이 비판적 이성과 창조적 이성에 기초한 합리주의 문화는 절대화된 가치, 권위주의적인 가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다원적인 가치가 대립하지 않고 공존하는 질서를 지향한다.

#### 라. 인간주의적 문화의식

산업사회를 특징짓는 문화의식의 중요한 요소는 성취동기, 경쟁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등이라 할 수 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대중화 등의 사회구조적 변동은 인간을 규격화·획일화하는 대중문화,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적 생활양식의 범람, 타자지향형과 시장지향형의 퍼스낼리티 증가, 가족해체의 가속화, 가치관의 혼란 등의 현상을 수반하여 결과적으로 대중의 소외와 비인간화 현상을 증대시키고 있다.<sup>33)</sup>

이러한 산업화 사회의 문화현상은 경제성장에 의해 정당화되어 온 측면도 있으나, 근래에 들어 현대사회가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간을 회복하고 인간적 삶의 질을 강조하는 인간주의적 문화의식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인간주의 문화의식은 산업화 사회에서 강조되던 합리주의, 근면, 개인의 희생 등의 가치를 초월하여 평등, 자유, 소외의 극복, 환경보존, 대규모 사회조직과 획일화·표

---

33) 또한 산업화사회에서는 대중들이 기대상승의 혁명을 경험하게 되고 이와 같은 상승기대는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주의와 성공지향의 가치관은 기대와 현실의 격차로 인한 상대적 빈곤의식과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간의 격차로 인한 아노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임희섭 편, 앞의 책, pp. 240-243.

준화 경향의 거부 등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sup>34)</sup>

인간주의적 문화의식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은 특히 서구의 ‘신사회운동-의 틀 내에서 전개되어 왔다.<sup>35)</sup> 신사회운동은 사회내의 새로운 생활양식과 가치의 창출, 문화혁신 등을 목표로하는 대중운동이다.<sup>36)</sup> 인간주의적 문화의식은 예술, 종교, 인문·사회과학의 이론과 사회운동을 통해서 강화되어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선도해나가야 한다.

#### 마. 상업주의문화와 외래문화 수용에 따른 폐해 제거

남북한 문화는 일제의 식민정책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고유의 전통을 거의 말살 당했으며, 해방이후 이질적인 왜래문화의 도입으로 자생적인 발전능력을 더욱 상실해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경우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는 낯선 사회주의적 문화가 주입됨으로써 전통문화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었으며, 남한에서는 해방후 왜래문화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그 자생력은 더욱 허약해지면서 자발적으로 왜래문화를 수용하는 편향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편향적인 외래문화의 수용은 기존 문화의 통합력을 약화시키고, 세대, 계층, 지역간의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데 까지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의 통합력 약화는 그 주체적인 발전능력을 저해함으로써 문화의 연속성을 크게

---

34) 위의 책, pp. 242-243.

35) 신사회운동의 이론에 대해서는, 김호기, “포스트 맑스주의와 신사회운동,” 「경제와 사회」 1992년 여름호, pp. 116-143을 참고할 것.

36) 사회문화연구소 편, 「사회운동론」, 사회문화연구소, 1993, p. 162.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남한에서 1970년대 이후 매스미디어가 초래한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침투와 상업주의적 문화는 대중문화의 저질화·규격화·획일화 현상을 가져왔고 나아가서는 민족 전통문화의 해체현상을 가속화하였다.<sup>37)</sup> 남한의 상업주의적 대중문화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질만능의 풍조를 제거하고, 대중문화가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시민문화, 민족문화로 발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향락주의와 상업주의 문화는 북한에 급속히 파급될 것이며, 이는 결코 남북한간의 이질화를 해소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북한주민의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상품의 구매력이 약한 북한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심화시킬 위험도 적지 않다.<sup>38)</sup>

## 2. 전통문화를 통한 남북한 문화의 공유점 확대

전통문화는 통일문화 형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이 여전히 공유하고 있는 민족과 전통의 원형을 바탕으로 문화적 동질성과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근간을 삼을 수 있다. 둘째, 인류 보편적인 문화체계를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전통문화의 특수성

---

37) 매스미디어에 의한 문화의 중앙집중현상은 지방문화와 농민문화, 계층문화 등을 주체적·조화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저지하였다. 따라서 대중문화는 자연히 저급한 상업주의적 오락문화로 전락하게 되었다.

38) 사회주의가 몰락한 러시아 및 동유럽국가들에서는 물론, 개방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자본주의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퇴폐문화와 향락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표출되고 있다.

으로 보완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우리의 것으로 토착화해 갈 수 있다.

### 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전통’이란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나, 가장 본원적인 입장에서 볼 때 ‘과거로부터 전래된 사상(事象) 일체’<sup>39)</sup>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전통문화는 세대적으로 계승·존속되어 오면서 우리 사회로 부터 어떤 식으로든지 정당성을 획득한, 영속적이면서 변화가능한 일련의 문화체계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sup>40)</sup>

남북한이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통일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첫째,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긍지는 역사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역

---

39) 전통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적 속성은 ‘통시성’으로서 대인접촉 또는 간접적 의사교환을 통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계승된다고 하는 점’이다. 두번째 속성은 ‘영속성’으로서 인간사회에 장기간 존속해왔다는 사실로서 가치를 획득하며 사람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전통이란 그 형식성이 규정하듯 초시간적인 연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나 그 구체적 내용은 시대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경, 조정 또는 재창조될 수 있는 ‘형성성’(constitutive character)을 지닌다는 점이다. 형성성에 관한 인식은 우선 ‘전통이란 불변한다’라는 정태적 전통관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준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현대사회와 전통윤리: 미래사회의 질서를 위한 모색」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6. pp. 245-256.

40) 남한과 북한은 전통문화의 개념을 달리 사용하고 있다. 남한은 지배문화였던 유교문화와 피지배문화인 민중문화 등 선조들의 모든 문화유산을 포함하는 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계급혁명에 관련한 문화유산만을 전통문화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북한에서도 전통문화 해석에 있어 유연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사에 대한 그릇된 시각과 왜곡된 이해를 바로잡음으로써 전통문화를 정당하게 평가하면서 역사와 전통에 대한 국민의 내면적 긍지를 북돋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왜곡현상은 국민들의 민족적 긍지에 적지 않은 상처를 주어진 것이 사실이다.

둘째로, 전통문화를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것은 전통문화를 재현 복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통일문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전통에의 복귀가 아니라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전향적인 발전이다. 문화란 본래 역사적 과정에서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역사적 산물이며, 문화의 발전은 그와 같이 기존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끊임없는 재창조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재해석을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구조에서 필요한 기존문화의 적합성을 찾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전통문화를 회복한다는 것이 결코 외래문화의 수용을 배격하는 문화적 폐쇄주의를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생적인 요인과 외생적인 요인을 다 같이 필요로 한다.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외래문화를 능동적으로 그리고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한은 미국문화와 일본문화를 주축으로 하는 외래문화에 대한 지나친 편향성으로 인한 문화적 정체성 상실 현상과 시대 역행적인 외래문화에 대한 쇼비니즘적 배타성을 동시에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넷째, 전통문화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해야 한다. 남북한은 체제경

쟁에서 정치적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각기 전통문화를 강조한 경향이 있다. 또한 권력의 독점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이용하기도 했다. 권력에 의한 전통적 가치의 활용은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민족적 긍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올바른 계승을 저해할 수 있다.

다섯째, 남북한은 전통문화 속에서 탈이념적인 문화요소를 찾아내어 공통의 문화로서 발전시킴으로써 민족동질성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에서 한민족 고유의 전통문화가 정치·사회적 이유로 각기 변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민족의 전통 문화에는 민족의 문화심성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문화소(文化素)가 있다”<sup>41)</sup>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기층의 생활상이나 기층민들의 의식구조에서 이러한 탈 이념적인 전통문화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공동체 문화의 재조명

공동체란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해 주는 사람들의 집단이며, 또한 공동체주의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 속에 오랫동안 담겨져 온 상부상조의 생활원리라 할 수 있다. 공동체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결속력을 지닌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 의식은 원래 그것의 업적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공속성 내지 귀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찾아 볼 수 있

---

41) 김한초, “남북한의 사회적 이질성 극복의 과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 152.

다.<sup>42)</sup>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통합의 근간이 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사회관계의 비인격화와 개인의 소외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위기를 공동체적 관계의 재추구를 통하여 극복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친족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던 전통적인 공동체문화<sup>43)</sup>를 재발견하고 재해석하여 새로운 사회구조에 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선도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우리의 전통적 공동체주의가 갖는 부정적 요소(예컨대 강한 배타성과 폐쇄성)를 현대 시민사회에 맞는 생활원리로 어떻게 변용 시키느냐 하는 것과, 지금 붕괴 일로에 있는 각종 공동체를 어떻게 재건 강화시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다.

공동체 의식 가운데 현재까지도 남한과 북한에서 공히 구조적 원리의 하나로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연고주의적 집합주의일 것이다. 연고주의는 그것이 지닌 배타성, 비합리성, 파쟁성 등으로 인하여 슬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고주의가 하나의 사회 문화적 규범으로서 그 생명력이 유지·강화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급

---

42) Harold D. Laswell and Abfaham Kaplan, *Power and Socie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5, p. 30 참조.

43) 한국인의 공동체의 근간은 가족과 촌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진교훈, “사회공동체와 시민윤리 - 한국인의 공동체의를 중심으로 -,” 「도덕적 삶과 공동체 윤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년 제2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4. 10. 24. p. 86.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농촌사회의 대표적인 공동체 조직체로서 두레를 찾아볼 수 있다. 두레에 대해서는, 김택주,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pp. 380-382 참고.

격하고 전면적인 사회 변화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과거의 농촌공동체적 질서 아래서 누렸던 안정감과 정체성을 연고주의적 집단 의식을 통해서나마 되찾아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sup>44)</sup>

그러므로 만약 연고주의적 사회조직이 이처럼 이익추구성을 억제하고, 감정 및 의사소통체계로서 작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 사회의 비인격화 내지 소외화를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집단들이 친목단체의 성격을 벗어나서 공익을 위한 봉사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연고주의는 사회적 분열과 파쟁의 원천이라는 역기능 대신에 시민적 연대와 통합이라는 순기능을 행사할 것이다.<sup>45)</sup> 따라서 연고주의와 가족주의가 갖는 긍정적 잠재력을 개발한다면 새로운 공동체 문화의 창조가 불가능하지 않은 않을 것이다.

#### 다. 민족주의의 정립

통일문화는 무엇보다도 민족적 정통성과 이에 근거한 민족주의를 주요 요소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의 정치·경제체제를 초월하여 이념적으로 연결시켜주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

44) 연고주의는 성원들에게 물질적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속성상 감정공동체로서의 기능이 보다 중요하다. 특히 불신풍조와 이기주의, 끊임없는 경쟁관계로 특징 지워지는 인간성 부재의 시대에서 연고주의적 인간관계는 인정과 격려의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미 서구나 일본에서는 합리적 조직 내에 온정주의나 가족주의 문화와 같은 비합리적인 요소를 결합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45) 김성국,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시민사회 성격: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1992, pp. 160-161 참고.

공통의 이념으로서 민족주의를 적극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족국가 형성의 실패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sup>46)</sup> 남북한 양체제에서 민족주의는 1940년 중반 기이래 체제의 이질화를 통해서 각기 민족주의의 본질적 가치에서 이탈된 ‘변형 민족주의’의 성격으로 나아갔다.<sup>47)</sup> 남북한에서 민족국가 형성의 실패는 사회·문화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문화적으로는 전통문화의 근대화를 이룰 수 없게 되었으며, 오히려 전통문화와 근대문화의 대립을 조장시키는 문화적 식민화의 종속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격의 민족주의는 민족성원의 통합이나 전체 민족의 발전과는 직접 연관이 적은 지배세력의 공고화와 민족분단을 고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질화된 민족주의를 정상화시키고 그것에 바탕을 두는 통일국가의 형성을 시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역사상 민족전체의 통합이나 발전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특정 분파를 전제로 하는 분열의 성격을 강하게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통합의 이념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설정해야 한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포괄해야 한다. 첫째, 민족주의는 새로운 가치정향과 공동의 신념체계를 제공함으

---

46) 진덕규, “한국 민족주의의 미래구도,” 『통일연구논총』, 제2권 1호, 1993, pp. 106-107.

47) 민족주의는 한편에서는 ‘권위주의적 민족주의’로, 다른 한편에서는 ‘혁명적 민족주의’로 변형되었다. 남한과 북한에서 민족주의의 변형과정에 대해서는, 위의 글, pp. 113-115 참고.

로써 이념과 계급을 초월한 사회적 가치의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민족주의는 민족문화와 전통성에 의거하여 민족의 공통기반을 재구성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민족주의는 정치사회의 현실적인 정책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 3. 통일 이후 문화갈등의 해소

통일은 서로 다른 삶의 양식과 이념을 지닌 채 살아오던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섞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통일이전에 남북한이 상호 이해와 접근의 노력을 통해 대비를 철저히 한다해도, 기존의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 정도를 감안할 때 통일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화적 갈등이 발생하리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통일이후 예상되는 문화갈등의 양상을 예측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문화통합과정에서 남북한 주민간의 문화적 접촉에 의한 문화충격을 들 수 있다. 통일과정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은 상대방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접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접촉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 및 편견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서로의 편견이 확인되고 분단상태에서의 막연한 이질감이 공동생활의 어려움을 통해 구체적인 갈등 및 적대감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한의 자율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획일화되고 이념성이 짙은 문화를 접함으로써 북한문화에 대한 거부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폐쇄적 사회에서 외부문화

에 접할 기회가 적었던 북한 사람들은 남한의 자극적이고 상업적인 문화를 새로이 접함으로써 일종의 문화충격을 겪게 될 수 있다. 특히 세계적 추세나 남북한 변화방향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통일국가의 사회체제가 시장경제체제에 기반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지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주민들이 자본주의적 경쟁 문화나 개방적 성문화 등과의 접촉을 통해 가치관의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남북주민간 문화적, 심리적 불평등이 예상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남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제각기 독자적으로 정치적, 문화적 경험세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남한이 우세한 경제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지배적 위치에서 통일과정을 주도할 경우, 새로운 사회 문화체제 내에서 북한주민들이 지향해왔던 지식 능력, 사회적 문화적 자본, 가치는 평가절하되고 그들 특유의 심성과 생활형태의 기반이 무너짐으로써 새로운 사회에서 집합적 정체성은 물론 개인적인 자기정체성까지도 동요될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그들에게 생소한 법체계와 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들의 생활세계와 가치관, 행동패턴을 파격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입장에 서게 됨으로써 ‘기능적 문맹’ 또는 ‘2등시민’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남한주민은 일방적인 우월의식을 가짐으로써 북한주민에게 심리적 상처를 입히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문화통합에 역행하는 저항문화를 양산할 수 있다.

셋째, 세대간의 갈등도 예상할 수 있다. 남한의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해 상당한 융통성이나 적응력을 발휘하여 통일된 체제의 이념이나 제도에 비교적 빨리 적응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통일 후 초기단계에서는 민족의 공동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회주의 교육만을 받아온 젊은 세대들이 더 경직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sup>48)</sup> 그러나 이들도 곧 새로운 교육제도하에서 체계적인 사회화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장년이상의 세대들은 기존체제에 익숙하고 재사회화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므로 기존의 이념체계와 문화성향을 고수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세대는 새로운 체제에서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 적대감을 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49)</sup>

넷째, 통일후 남북한 주민들이 겪게 될 문화갈등은 통일 이후 경제적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남한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통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져왔다. 통일이 가져올 국제적 위상강화, 남북한의 보완적 경제통합으로 인한 경제부흥,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남한주민들은 통일이 민족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해왔다. 그러나 통일로 인해 정치사회적 안정이 일시적으로 저해되거나 통일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불만도 동시에 높아질 것이다. 또한 북한지역주민들도 통일이전의 생

---

48)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한의 경우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 출생자의 비중이 70.6%에 달하고 있는데 인구구성은 북한의 경우도 비슷하여 6·25를 경험하지 못한 전후세대가 남북인구의 2/3를 육박하고 있다. 이는 남북인구의 대다수가 각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전혀 다른 가치체계하에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최협, “더불어 사는 사회로 이념의 벽을 극복,”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2000년대에 열리는 통일시대」, 동아일보사, 1993, pp.105-6.

49) 그러나 분단이전 시대의 경험이 있는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활수준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영위할수 있다 하더라도 남한지역 주민들과의 격차 때문에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sup>50)</sup>

다섯째, 통일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지역감정이 증폭될 수 있다. 남한에는 동서간의 지역감정이 존재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평양과 그 이외의 지역간의 생활격차로 인하여 부분적인 지역감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후 남북한 주민이 모두 단일생활경제권에 살게 될 때,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거나 정치·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역감정이 증폭될 수도 있다.<sup>51)</sup>

여섯째, 통일 후에는 사회적 과도기적 현상인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신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집단들의 갈등도 예상할 수 있다.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집단적 갈등 및 청소년 범죄 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성운리의 혼란과 빈부의 격차로 인해 성의 상업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곱째,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여타 사회주의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한에 비해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높으며 사회활동에서 남녀차별이 상대적으로

---

50) 또한 통일과정에서 산업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과정에서 새로운 빈부의 격차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회계급도 재편될 것이며, 통일에서 수혜를 입은 계급과 피해를 입은 계급간의 갈등도 야기될 수 있다. 이우영, “통일의 사회·심리적 후유증 해소를 위한 체계적 방안 연구,” 강광식 외,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386.

51) 통일이후의 지역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강명구, “통일한국의 지역 격차 문제: 공존의 지역정책을 위한 제언,”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한국정치학회, 1993, pp. 237-262 참고.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2)</sup> 따라서 통일 후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 성적 가치관에 대한 차이로 인한 여성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또한 남북한간 여성의 근로조건, 탁아정책, 가족정책 등 여성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으로 통일정부의 이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녀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도표〉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                  |   |  |
|------------------|---|--|
| 통<br>일<br>이<br>전 | 시민문화의 정립  | 전통문화의 재창조                              |
|                  | 다원주의<br>시민사회의 활성화<br>합리주의<br>인간주의적 문화의식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br>공동체 문화의 재발견<br>민족주의의 정립 |
| 통<br>일<br>이<br>후 | 문화갈등의 해소  |  |
|                  | 접촉에 의한 문화충격<br>심리적 불평등<br>가치관의 혼란<br>세대·계층·지역 갈등<br>여성문제로 인한 갈등 |  |

52) 남북한 여성의 사회적 위상 비교에 관한 연구로는, 기사연 통일연구위원회, 「분단 50년의 구조와 현실」, 민중사, 1994, pp. 323-393 참고.

## V. 맺음말

‘통일문화’ 연구는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새로운 인식과 방법론의 필요성을 요구하는데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통일문화는 통일성취의 외향적 측면보다는 그것의 실질적 기반이 되는 내면적 측면에서 민족통합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통합의 차원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문화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국가의 바람직한 문화체계를 창조한다는 미래적 관점에서 통일의 본질과 내용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의 내용과 본질에 대한 탐구를 통해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분단을 타개하는가에 대한 답을 도출해 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통일문화 형성에 있어 남북정책의 차원을 넘어서서, 남한이 먼저 통일문화 형성을 위해 능동적으로 앞장서는 것을 강조하는 남한의 자기 개혁적 관점을 제기하고 있다. 통일문화 형성에 있어서 남한 문화구조 개혁의 중요성이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은 통일문화 형성을 통하여 남북관계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나아가 북한에게 통일문화상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사회·문화적 변화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문화에 대한 남한의 포용력을 키움으로써 남북한간의 갈등을 완화하며, 민족융합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통일문화 형성을 통해 특정한 통일방법이나 과정에 관계없이 능동적인 통일지향성을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통일문화의 개념과 형성방향을 수립함으로써 통일문화에 관한 인식의 틀을 총체적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통일

문화는 미래지향적 제의나 요청이므로, 비록 그것이 남북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규범적·당위적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문화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실증적 구체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통일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본 논문이 제시한 정책방향의 틀이 구체화되어 실천적인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실천정책으로는 예컨대 통일교육<sup>53)</sup> 및 재사회화 정책<sup>54)</sup>, 문화교류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동시에 민간부문의 ‘통일문화운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의식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전체의 변화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sup>55)</sup>

---

53)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이우영, “평화통일에 대비하는 민주시민교육,” 한국도덕정치교육연구소 학술세미나, 「개혁의 과제와 민주시민교육」, 1994, pp. 58-74 참고.

54)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재사회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이념과 가치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는 학교정기교육, 사회교육, 정치교육, 대중매체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55) 이것은 통일문화운동이 과거의 문화예술 부문에 한정되어 있던 문화운동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운동의 성격을 지닐 때 가능할 것이다.

# 남북문화교류의 현황과 문제점

이 헌 경  
(민족통일연구원)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Ⅲ. 남북문화교류·협력의 문제점 |
| Ⅱ. 남북문화교류·협력의 전개과정과<br>현황 | Ⅳ. 맺음말            |

## I. 머리말

20세기에 들어서 한민족은 일본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해방이 되었을 당시 문화동질성은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체제와 이념의 차이로 야기된 국토분단과 정치적 분단으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문화를, 그리고 북한은 공산주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극적 문화구조와 사회화과정을 통해 남북주민들은 그들이 획득하는 생활방식과 사고방식 즉, 사상, 신념, 관습, 지식, 예술, 도덕, 법률, 제도 등을 달리하면서 독자적인 문화체계와 문화유형을 지닌 채 지금까지 다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 결과 남북한이 분단되기 이전까지의 동질성, 공통의

가치정향·행동정향·사물인식방법 등이 소멸되기 시작되면서 문화이질화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 이질화의 정도는 쏠문화영역에 확산되어 문화갈등 상태를 초래하였다. 「문화갈등」이란 양립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유형이 각각 정당성을 고집함으로써 문화적 마찰을 유발해 사회적 긴장이 발생하는 과정을 일컫는데, 남북한은 문화이질화 또는 문화적 격차와 함께 문화갈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지 않는 한 비록 정치·경제통합은 이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족공동체 형성과 문화통합은 결코 이를 수 없다. 이질화된 문화공동체제간의 문화통합은 문화접변을 통해 가능한데 이는 정치통합 이전이나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바로 독일통일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독일은 정치·경제통합은 이루었지만 문화통합을 이루지 못해 불완전한 통일을 이룩하였고 이러한 불완전성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질성의 정도가 더 심한 남북한의 경우 어떠한 형태의 통일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수반되는 후유증은 더 클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한민족에 주어진 사명이요 과제인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본 연구는 남북문화교류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연구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은, 남북문화교류는 구조적으로 독립체계를 가진 두 문화권의 교류이지만 한민족문화라는 근본적 테두리 안에서 이질적 두 하위문화의 접촉을 의미한다. 더불어 협력보다는 갈등을 종종 수반해 문화교류·협력의 정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문화접변을 시도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있다. 이는 곧 교류가 문화접변을 수반하지 않아 문화동질성 창출을 위한 과정이 전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근거를 두고 본 연구는 문화통합을 창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문화통합이 취할 수 있는 흡수·대치·융합·격리형태를 추구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확산·평가·통합단계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문화접변에서 요구되는 문화적 적응과 문화적 동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통합을 최종단계로 그리고 문화접변을 중간단계로 설정하여 문화접변의 기초단계로서 문화교류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된 문화교류의 현황과 각각 존재하는 상대 하위문화와 양립할 수 없는 문화관과 문화정책 등으로 야기된 문제점들을 진단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전반적 연구목적·방향과 함께 우선적으로 第2章에선 남북문화교류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통일을 위한 중요한 수단과 통일 이후 민족동질성 창출을 위한 미래의 측면에서 그동안 어떻게 남북간 문화교류가 진행되었는가를 진단하고자 한다. 여기서 요구되는 시기와 전체적인 구성은 분단 후 현재까지를 내용으로 하며 사실성에 바탕을 두고 공식적 교류에 초점을 맞추며 비공식적 교류에 관해서는 부가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남북문화교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교류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1) 대부분의 교류추진은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민간단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 2) 교류협력은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항상 종속되어 왔다.
- 3) 교류제외는 위장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을 구분해야 하며 북한의 교류제의 대부분은 위장적인 것이었다.
- 4) 교류의 추진 주체는 민간이 아니라 남북당국이었다.
- 5) 인적 문화적 교류전개의 주체는 남북당국이 아니라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었다.
- 6) 교류는 동반체나 협력체가 아닌 이질화된 두 하위문화간의 교류를 의미하며 그 구성원은 한민족이었다.
- 7) 교류에 참가한 단체는 문화단체로 마땅히 구성되어야 하나 북한의 경우 사회단체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 8) 교류의 진행은 문화접변을 추구하기보다는 문화갈등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 9) 교류내용은 수용적 또는 탈이념적이라기 보다는 때로는 과시용, 선전용 또는 이념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과 함께 남북문화교류가 진행되었는데 이를 시기별로 나누면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문화교류·협력의 정도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제1기는 국토분단으로 시작되어 민족살상으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적대관계로 고착화되면서 문화이질화가 시작되는 기간이다. 제2기는 적대관계의 연장으로 문화갈등이 고착화되는 시기를 의미하며 국제정세가 냉전구도를 형성하기까지이다. 제3기는 북한으로서는 내키지 않지만 탈냉전 시대에 고립으로 부터 탈피하고자 문화교류·협력에 동참한 시기이다. 제4기는 북한의 핵문제로 남북한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면서 교류협력이 고착상태에 빠진 기간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전반기 1·2기는 문화교류제의 기간에 속하고 후반기 3·4기는 교류협력이 미비하나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후반기를 중점으로 문화교류·협력 현황을 살펴 볼 것이다.

第3章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남북문화교류의 장애요인을 포함해 문화접변에 있어 드러나는 문제점 전반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상이한 체제, 이념, 제도 등으로 양립할 수 없는 문화의 이질적 현상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화적 이질성과 함께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존하고 아울러 문화교류의 시행이 항상 정치적 상황에 종속되었던 것이 남북문화교류협력을 진행시키는데 문제로 남아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북한의 문화관과 문화정책이 당·정의 지휘감독을 받아 움직이고 있고 문화예술 전반의 역할이 무기화된 목적 일변도를 지니고 있으며, 문예사상과 조류에 있어 자본주의 문화와 비타협성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문화접변을 시도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 파악함으로써 남북문화교류와 문화접변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第4章은 결론 부분으로 남북 문화교류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총체적으로 진단하면서 향후 취해야 할 자세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II. 남북문화교류·협력의 전개과정과 현황

남북문화교류는 그동안 문화접변을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이는 국내외정세와 상당한 연관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냉전시대에 문화이질화가 진행되었고 탈냉전시대에 들어서 고착화된 문화갈등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이러한 전개양상은 시기별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다음의 각節에서 구체화된다.

### 1. 문화이질화 시작기 (1945-1971)

분단초기 남북한은 자유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로 갈라지면서 체제대립과 갈등이 극에 달했지만 이로 인해 문화갈등을 동반하지는 않았다. 본격적으로 남북한간 문학·예술·종교·언어·언론 등 문화이질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정치·군사적 대결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러한 분단상황과 대결구도는 남북한간 불신을 증폭시키면서 적대관계를 유지했는데 한국에서는 「무력복진통일론」과 「선 건설 후 통일」 그리고 북한은 「대남 무력통일전략」등의 통일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립을 심화시켰다. 즉 한국은 통일보다는 경제건설에 목표를 둔 반면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혁명단계와 함께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통일전선을 구사하면서 한국과의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고수하려는 정책을 추구했다.

이러한 양측의 통일정책으로 인하여 함께 남북한간 문화교류는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그 당시 경제우위에 있었던 북한이 주도적으로 대남선전전략 차원에서 비실현적 문화교류를 제의하였다. 이는 주로 언론<sup>1)</sup> 부분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제의에는 구체적 실천방안이나 교류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한국과 전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선전적 차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박정희 정부의 출범과 함께 북한에서 제의했던 형태로 평양에 언론인교류를 제의했으나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이 북한에 비해 적극적으로 언론을 비롯한 문화예술교류를 제의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의 정권이 대외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 2. 문화갈등 고착기 (1972-1987)

남북한간 대결 지향적인 관계 속에 북한은 경제력우위와 함께 문화교류제의 차원에서도 큰 목소리를 냈지만 1972년 「7.4공동성명」과 「남북적십자회담」을 기점으로 전반적 힘의 방향이 남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박정희정부의 경제건설 정책이 성공과도에 돌입한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경제정책의 실패로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데서 비롯되었다. 이와 함께 정치·외교·경제분야에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한 한국은 통일정책도 「선 평화 후 통

---

1) 북한은 1957년 제2차 전국기자대회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1961년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결성대회」의 성명을 통해 남북언론인 교류를 제의하였다. 1960년엔 최용건이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회의에서 남북이 함께 관리하는 출판기관을 설립하고 각 분야에 널려있는 문제들을 보도하자는 제의를 하였다. 이후 이러한 제의는 「대남호소문」 형식이나 「담화문」을 통해 반복되었다.

일」로 바꾸면서 문화교류·협력 분야도 실질적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는데 북한을 대하는데 있어서도 과거와는 달리 좀 더 유화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을 수북통일의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에 변함이 없었고 다만 적대성향에서 대결·경쟁관계로 탈바꿈한 것이었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완전승리 및 민족통일을 위한 이중적 통일전선을 구사하면서 전반적인 주도권이 한국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화분야에 대한 형식적이고 위장적인 교류협력을 계속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정이 진전되기 보다는 경제건설, 체제의 안정, 안보에 치중하면서 쌍방 대립과 경쟁이 가속화 되었다. 이러한 대결구도는 남북한의 관계가 탈냉전의 궤도 속에 진입하게 될 때까지 계속 되었는데 이미 문화갈등이 고착화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상황속에서 남북한은 전반적인 교류를 모색했는데 한국의 제의가 보다 실천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남한에서는 언론교류를 재차 제의하면서 상호 비방방송 중지, 문물교환, 고미술품 상호 교환전시, 고고학자 교류, 그리고 영화·무대예술 교류 등을 제의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제의를 모두 묵살하였다. 이로써 1960년대 말까지의 북측의 제의는 모두 허구이며, 실천성이 내포되지 않은 선전적 차원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진행된 행사는 제8차 남북적십자 회담시 합의사항을 근거로 하여 제1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이 성사되어 1985년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남북 각 제작진 및 출연진 50여명이 민족전통

가무를 중심으로 한 예술공연을 평양과 서울에서 가진 것이었다. 이러한 예술공연은 분단 후 가진 첫 예술공연이었고,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남북 문화예술교류의 발판을 마련하려 했으나 이러한 행사는 1980년대 말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분단 후 문화갈등 교착기까지 북한은 한국에 비해 10배 정도의 문화예술교류를 제의<sup>2)</sup> 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다발성 제의에서 한국내 상황이 불안정하던 시기를 틈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을 제기하였다. 교류보다는 전략적 차원의 제의였는데 문화교류·협력을 실천에 옮겨 민족동질성을 창출하려는 의미보다는 북한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한국의 통일문화정책을 혼란에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중 북한의 제의는 위장적이고 선전적 차원이었으며, 교류협력의 전개 역시 적극성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문화교류·협력 시작기 (1988-1992)

이 단계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기간으로 동유럽공산국가들의 잇따른 몰락과 동서독의 통일 등이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 평양지도부가 취해온 폐쇄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북한은 한국과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에 부분적·제한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문화교류·협력이 교착기에 접어들 때

---

2) 김영규, “역사인식의 차이와 장기적 포석,” 『예술세계』 (1989년 여름), p. 58에 의하면 1989년까지 북한은 1백17회에 걸쳐 2백65건의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를 제의하였는데 반해 한국은 10여건에 불과했다.

까지 지속되었는데 과거에 비해 남북간 문화예술교류가 가장 활발하였던 시기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기간을 문화교류·협력 시기로 본다.

이 기간에 접어들어 국력에서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한 한국은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으며 이와 함께 통일정책과 방안 역시 변화하였다. 통일정책에서는 「민족공동체」와 「민족화합민주통일」을 추구하면서 민족적 화해와 대화를 모색하였고, 통일방안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의 체제와 이념을 강요하거나 배제시키지 않고 상호공존을 모색하면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협상의 대상으로 여기며 대결과 경쟁의 관계에서 동반자관계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한국을 적대집단으로 여기면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와 민족통일을 향한 통일전선의 전면적 전개를 모색하였고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한국과의 문화예술 교류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 경제교류와 협력은 대북원조형식으로 진행되었고, 문학·예술·언어·언론·종교 등의 교류와 협력도 과거와 같이 상징적 또는 형식적 제의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과거 보다는 실천적 성격을 지닌 문화예술행사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서로의 문화가 상당히 이질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988년 6월 3일 남북고위당국자회담시 문화예술인 교류를 제의했으나 북한은 이를 묵살하였다. 이후 한국정부는 교류와 개방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북한문화 분야에 대한 일부개방을 모색하였다. 특히 동년 「남·월북 문학인 작품 해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문

학작품과 문학이론서들이 서점에 선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7.7 선언」을 계기로 일부 북한자료를 특정기관을 통해 공개하여 「로동신문」 외 북한의 일부출판간행물, 영상자료를 희망자에게 보여주고, TV에서도 김일성·김정일의 사진을 보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종교인의 움직임은 과거에 비해 활발하였다. 1988년 한국천도교는 천도교서적을 비롯한 경전을 북한에 보냈고 북경을 통한 접촉을 모색하였으며, 7월에는 하와이 대원스님이 방북하여 남북간 불교교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놓았고, 11월에는 남북기독교인들이 스위스 글리온 제2차회의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1989년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박창득, 남해근, 조영희 신부가 미주 카톨릭신자 9명과 함께 방북하여 북한천주교인 100여명과 함께 미사를 보았으며 동년 6월과 10월에 법타스님과 대원스님이 방북하여 북한불교 실상을 파악하고 향후 남북불교협력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후 1990년 2월 11일 문화부장관이 「남북문화교류 5원칙」 - 1) 분단이전의 우리민족전통문화의 우선교류; 2) 승부 및 경쟁적 분야의 배제; 3) 전통문화의 원형을 변형, 훼손한 표현양식 지양; 4) 쉽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 5) 공동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주 - 을 천명한 이후 한국정부의 문화공동체창출을 위한 강한 실천의지가 보였으며 북한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동참하였다. 이 결과 제3국에서의 종교인의 만남과 종교인의 방북 그리고 서울, 평양, 제3국에서 남북예술공연이 이루어졌다.

먼저 종교부문을 살펴보면, 이대경목사는 1990년, 소망교회의 곽선희 목사는 1991년 9월, 그리고 권호경 목사는 1992년 1월에 각각 북한을 방문해 한반도평화와 통일문제를 논의했다. 제3국에서의 남북종교인 만남도 이루어졌는데, 1990년 12월 스위스 글리온 제3차회의에서 그리고 1991년 2월에는 호주캔버라 세계교회협의회(WCC) 7차 총회에서, 10월에는 네팔 카투만두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ACRP)에서, 11월에는 한민족불교교류추진 미주불교협의회의 주선으로 남북불교대표들이 미국LA 관음사에서 회동을 가졌다.

예술공연을 보면, 우선 1990년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평양 2·8회관을 비롯한 8곳에서 범민족통일음악회가 개최되었다. 이 공연에서 한국의 전통음악연주단, 북한의 조선평양음악단 그리고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독일, 소련거주 해외교포음악단이 연주를 하였다. 이어서 동년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남북의 민족국악연주단이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족전통음악 합동공연을 서울에서 가졌다. 또한 남북고위급회담기간 중 특별공연을 가졌는데 제1차회담(1990) 때는 9월 5일, 제2차(1990) 때는 12월 11일 그리고 제5차(1991)는 12월 11일, 제7차(1992)는 5월 6일 서울에서 남북예술단들이 전통음악과 무용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공연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제3국 개최 남북 문화예술행사도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주로 해외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등에서 개최되었다. 주로 영화, 음악, 대중가요, 무용, 서화작품 전시, 전통예술 공연 등인데 <표 1>에 잘 나타나 있다.



〈표 1〉

제3국 개최 남·북 문화예술행사

| 행 사 명                                     | 때                 | 내 용                                       | 비 고                        |
|---|-------------------|---|----------------------------|
| 「남북영화제」<br>(뉴욕)                           | 1990.<br>10.10~14 | 남북한 영화 공동시사회<br>- 남한: 8편, 북한: 7편          | 영화상영 및 남<br>북영화교류제의        |
| 「한겨레 올림」<br>(동경)                          | 1991.<br>3. 31    | 남북화합 음악제                                  | 북측 참가자는<br>조총련계임           |
| 「국제예술제」<br>(후쿠이)                          | 1991.<br>5.2~5    | 중앙국악관현악단과 평양<br>음악무용단의 합동공연               | 일본지역 개최 남<br>북예술인 합동공<br>연 |
| 「남북한 서화<br>교류전」(북경)                       | 1991.<br>5.27~29  | 남북한의 서화작품 합동<br>전시 - 남한: 45점, 북<br>한: 27점 | 남북한간 최초의<br>미술작품 교류전       |
| 「남북통일 전<br>통무용풍속예<br>술제」(사할린)             | 1991.<br>8.17~18  | 농악, 진도북춤 등 전통예<br>술 합동공연                  | 남북한 전통무용<br>민속놀이 위주의<br>공연 |
| 「통일예술제」<br>(사할린)                          | 1992.<br>8.16     | 남한의 대중가요와 북한<br>의 전통민요와 무용위주<br>의 합동공연    |                            |
| 「조선족 자치<br>주 성립 40주<br>년 경축 기념<br>행사」(연변) | 1992.<br>8.23~9.3 | 경축기념행사 계기 남북<br>공동참가 등                    |                            |
| 「한겨레 음악<br>회」(뉴욕)                         | 1992.<br>9.26     | 남북화합의 음악제                                 |                            |

이러한 예술공연과 함께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열린 통일축구 대회(1990. 9)를 계기로 남북한은 과거의 냉전관계를 청산하는 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하는 듯하면서 마침내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기간중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1991년 12월 31일)를 채택하여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다. 특히 합의서 제16조는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sup>3)</sup>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문화이질성과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는 <표 1>에서 보듯이 제3국에서의 문화예술행사가 확대되었고 동서독의 통일에서 방송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인식한 한국측은 남북방송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방송교류가 북한에 주는 부정적 여파를 실질적으로 인식한 평양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한국방송국들의 일부 제의에 대해 긍정적 검토가 있었고 일부 프로그램을 받아 들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BS와 MBC는 정무원과 노동당산하 국장급이상의 인사들과 제3국에서 만

---

3) 문화·예술·언론분야에 있어 남북간 교류 협력의 접근방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측은 “남과 북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을 통해 민족구성원들이 서로 상대방 실상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남과 북은 민족전체의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체신, 학술교육, 문화·예술, 언론·출판, 종교, 보건, 환경, 체육,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를 제시한 반면, 북한은 “북과 남은 과학, 기술,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 보도 등 각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여 협력한다”고 제시하면서 “악취풍기는 썩은 문화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 개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나 「프로그램 공동제작」, 「기타 방송관련 자료의 개방」, 「방송인력의 공동연수」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어 공보처는 비정치적성향의 방송제작에 북한이 협조해 줄 것을 모색했는데 「마의 태자의 일대기」를 북한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제의했으며 KBS는 「고구려벽화」와 「몽고말의 국내수송과정」을 현지에서 제작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MBC는 1992년 말에 「여명의 눈동자」를 비롯해 교류가 가능한 프로그램 목록집을, KBS는 대외비로 자료목록을 발간해 프로그램교환 차원에서 제시했는데 이들에 대해 북한은 선별작업을 한 뒤 상당 프로그램을 받아 들였다.

이와 함께 출판분야에서 남북협력이 전개되었는데, 1990년에 남북한 출판인들이 제3국에서 만나거나 또는 통신교류 등을 통해 출판물의 수입 또는 출판권 계약 등을 통해 한국은 북한의 출판물을 간접교류의 방식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반입된 북한의 출판물은, 총류·철학·사회과학·순수과학·기술과학·예술·어학·문학·역사 분야에서 총 5,032종(1990년 1,716종, 1991년 1,039종, 1992년 2,277종), 193,372부수(1990년 60,867부, 1991년 64,380부, 1992년 68,125부)<sup>4)</sup>에 달했다. 그러나 종교분야에서 반입된 출판물은 하나도 없었다.

방송·출판분야에서 전개된 미미한 협력과 함께 언어이질화 극복을 위한 노력도 아울러 전개되었다. 첫단계로써, 남북한언어학자들은 코펜하겐(1991. 5. 27~31)에서 만나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단일화」를 위한 회의를 가져 일부합의에 도달했으

---

4) 문화체육부, 「출판정책자료집 1993」(서울: 문화체육부, 1994), pp. 166-67.

며, 국제표준화기구(ISO) 주최로 파리(1992. 6. 16~17)에서 양일간 열린 회의에서는 북측의 자음안과 남측의 모음안을 수용하는 단일안에 합-의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올렸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남북한을 비롯한 제3국에서의 문화예술행사를 통해서 서로의 이질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이질성과 변질성에 대한 비판적 표현과 상대 문화예술에 대한 비포용성은 차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종교인의 방북과 제3국에서의 남북종교인의 만남 등은 그 빈도가 예전에 비해 증가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특히 과거에는 방송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논하는 자체가 불가능하였는데, 한국프로그램의 상당 수를 북한이 받아들인 것은 역시 변화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의 북한출판물에 대한 일부 개방으로 한국에 선을 보이게 된 것은 출판물교류라기 보다는 북한출판물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류에 앞서 개방을 추구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언어학술 회의 등을 통해서 한글 자모음의 영문표기법의 단일안을 마련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체제언어와 상관없이 냉전구도 속에서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을 여태껏 미루어 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 **4. 문화교류·협력 교착기 (1993-1994)**

변화된 국제정세 속에 발전된 남북관계는 1992년 남노당 고정간첩단 사건과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1993년 초부터 미-북간 핵문제 타결을 이룬 1994년 10월 중순까지 긴장이 재연되었는데 이시기에 양자간 정치외교마찰과 함께 문화전반에 걸친 교류와 협력은 상당

히 위촉되어 문화교류·협력 시작기에 진전되었던 사항들이 교착기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도 한겨레문화조성 및 문화공동체형성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1993년 7월에 문화체육부장관은 「남북한간의 이해증진과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남북문화교류사업의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1단계는 문화예술자료작품 및 정보교환을 위한 단계로 문화재·미술품 교환·전시, 출판목록 교환, 그리고 판문점 등에서의 통일문화정보자료센터 설립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2단계로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인 교류를 제시하고 있는데 실천사항으로는 설날, 단오, 추석 등 남북공동 민속명절을 계기로 한 남북예술단 교환공연 및 「남북문화예술축전」 개최 등이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민족동질성 회복의 실천단계로 남북언어통일회의 개최, 남북공동 문화예술단 구성·운영, 문화유적지 공동발굴조사 및 상호방문연구, 비무장지대 등 문화유적 공동조사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문화동질성 창출 차원에서 문화교류는 정치적 갈등 상황과 연계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상기와 같은 단계적 교류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교류시작기에 진행되었던 정도의 문화교류와 협력은 추진되지 않았다. 그러나 직접교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3국에서의 남북문화예술행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1993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동북아 조선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 국제학술회의를, 4월 26일에는 동경에서 「한겨레 음악회」를,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집안에서 광개토왕비의 답사 연구를 비롯한 「고구려문화」 국제학술회의를, 8월 28일부터 31

일까지 북경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세미나」를, 그리고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코리아 통일미술전」을 가졌다.

그리고 출판분야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상당히 진취적 자세를 취하였다. 문화체육부는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1993. 12. 31)을 전면 개정해 비정치적·비이념적 내용이 담긴 북한의 출판물에 대해서는 수입시판이 가능케 하고 국내출판물도 정치·이념적 내용이 아닌 출판물의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sup>5)</sup> 이에 힘입어 북한출판물은 1992년도에 이어 종교를 제외한 각분야에서 1,107종 64,161부수<sup>6)</sup>가 한국으로 반입되었다.

이상과 같이 문화교류·협력 교착기에는 시작기와는 달리 교류협력이 다양화되지도 못했고 그 빈도 역시 현저히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핵문제로 인해 남북한의 갈등상태가 재연되는 시기에도 진행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언어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제3국에서의 학술회의를 비롯해 민족문화에 관련된 학술회의, 음악회, 미술전 등의 개최 그리고 북한출판물의 한국반입 등이 이를 증명하는데 이러한 행사를 통해 앞으로 문화교류 교착기에 전개될 남북문화교류 협력의 단계별 과정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

5) 이 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추진해야 하는데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 통일원의 승인이 있어야 반출이 허락된다.

6) Ibid.

### Ⅲ. 남북문화교류·협력의 문제점

단일민족문화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전쟁, 단절, 정치적 합의 등으로 국토가 분단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문화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장기화될 때 문화이질화가 동반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접변을 시도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할 경우 문화이질화 정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진다. 남북한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 특히 상대의 체제 이념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부터 상대 문화를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문화접촉을 시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더구나 북한의 경우 문화예술영역에 대해 당·정이 지휘·감독을 하고 있고, 그 역할과 기능 역시 목적수행을 위한 수단성과 자본주의 문화예술에 대해 비타협성을 고수하고 있어 한국문화와 접촉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치적 상황에 대한 종속성은 문화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각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1. 문화이질화

문화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한민족은 분단 후 상이한 체제와 이념으로 비롯된 상이한 문화관과 문화정책으로 문화적 변질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언어·언론·문학·예술·종교 등 문화영역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는 문화교류·협력 시작기에 제3국에서 행해진 언어학술회의, 예술공연, 종교인의 만남, 그리고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행해진 예술공연, 북한신문·출판물 그리고 방송에

대한 일부개방 등을 통해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분야별로 표면화된 것을 위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언어의 이질화다. 분단 후 남북한은 다른 정치이념과 사회 체제 속에서도 언어의 이질화를 동반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북한이 1960년대 「말 다듬기 운동」과 「언어정화작업」 그리고 그 보급운동을 위한 「문화어운동」의 전개와 함께 혁명전통교양과 주체언어 이론에 바탕을 둔 언어관과 언어정책을 수행하면서 언어이질화가 전개되었다. 북한의 언어관은 「언어도구관」, 「언어사상일체관」, 「언어사상형성관」등 유물론적 언어관에 근거를 두고 사상교화와 사상교육의 주요수단으로써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건설을 위한 주요한 무기로 보면서 언어정책을 추진했는데 주체언어이론의 배경 하에 혁명전통교양을 중심으로 언어를 나름대로 발전시켰다. 그 진행을 보면 일본어의 잔재제거와 외래어, 한자어 등을 비규범적인 것으로 여겨 이를 정화하는 차원에서 어휘정리사업을 추진해 새로이 다듬은 말이 5만 단어에 이르게 되었으며, 어휘, 문법, 맞춤법, 문장의 억양이나 리듬에 있어서도 서로 이질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산업화와 개방화 그리고 다변화된 외래어의 유입으로 신조어가 탄생했다. 이 결과 남북주민들간의 의사전달은 가능할 지라도 다변화되고 전문화된 언어용어를 서로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언어이질화는 언론·문학·예술 등을 묘사하는데 있어 각자가 지니고 있는 언어표현을 구사함으로써 문화전반에 걸친 이질화를 가속화시켰다.

언론에 있어서도 남북간 상이한 언론의 역할과 기능으로 이질화



를 유발하였다. 한국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자유주의언론의 채택으로 “정보제공기능(information), 사회결합기능(correlation), 사회유지기능(continuity), 오락제공기능(entertainment), 사회동원기능(mobilization)”<sup>7)</sup> 등 사회적 기능을 다하면서 사회전반에 걸친 제반사항을 객관성과 신속성의 원칙과 함께 상업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언론매체(신문, 출판, 방송, 통신)는 (1) 사회주의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드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2)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를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 물질적 요소를 건설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며, (3) 조국통일과 남조선 혁명을 위하여 주체위업의 세계사적 승리를 위하여 투쟁<sup>8)</sup>할 것을 요구하면서 김일성부자의 이상화와 당정의 지시를 하달하는 전위대의 역할과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동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취재경쟁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뉴스전달보다는 사상주입에 우선권을 두면서 객관성, 진실성, 속보성은 찾아볼 수 없고, 범죄·비리·사건사고·부조리 등의 비판기사는 아예 없이 모범적 감동적 기사<sup>9)</sup>를 통해 인민을 교화하고 계몽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남북한 문학이 상당히 이질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문학이 순수한 예술적 욕구에 입각하여 인간 탐구를 통

---

7) Denis McQuail, *Mass Communication Theory: An Introduc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1983), pp. 76-84.

8) 유재천, 「조선일보」, 1990. 4. 10.

9) 이에 대해 김일성은, “긍정적 모범은 부정에 대한 비판으로 되며 부정을 극복하기 위한 명백한 방도를 가르쳐줌으로써 근로자들은 부정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으로 추동하는 강력한 힘으로 된다”고 한다 (1960년 노동당 제4차대회 중앙위원회에서의 연설).

한 표현론적 요건과 가치론적인 의미를 강조하면서 「순수주의」를 표명한 반면 북한은 표현에 있어 레닌, 스탈린으로부터 출전된 민족적 형식에 혁명적이고 계급주의 이념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sup>10)</sup> (Socialist Realism) 문학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사실주의는 혁명적 발전과정을 토대로 하면서 1970년부터는 「종자론」<sup>11)</sup>과 「주체문예이론」<sup>12)</sup>을 적용하면서 주체사상과 혁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의 창작방법은 혁신적인 구체성을 띄면서 가장 공산주의적인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제국주의적 사상문화의 침투를 금지하고 있다.

남북간 예술부문의 이질화는 북한이 문학과 예술을 별도로 취급하지 않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취함으로써 문학분야의 이질화 과정과 맥을 같이한다. 이것 역시 상이한 체제와 이념적 색채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생겨나고 있는 문화예술관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먼저 한국의 예술은 해방이후부터 탈이념하에 순수문화예술을 지향하면서 정치·사회적인 현실과 분리하면서 세계예술사조와 흐름을 같이했는데 이와 함께 자유민주적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자유분방한 표현론적·가치론적 요건을

10) 이에 대해서는 「문학예술사전」,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2, p. 497 참조

11) ‘종자론’이란 문학예술작품에서 소재, 주제, 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요소에 맑스-레닌주의적 지도사상, 김일성 주체사상과 혁명사상, 당·정의 정책과 노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평양: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75), pp. 172-88 참조.

12) ‘주체적 문예이론’의 개념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이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주체 사상의 요구를 구현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켜 나갈 방향과 방도”이다. Ibid., p. 7.

기반으로 하여 발전되었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예술에서 요구하는 이념성에 바탕을 두면서 종자론과 주제문예이론을 문화예술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 가치론적 차원에서 집단성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여 예술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이질성은 전통예술 뿐만아니라 현대예술에도 내포되어 있는데 이는 그동안 행해진 남북예술공연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우선 전통예술부분의 부채춤과 농악부문에는 서로 공감하면서도 「전통」<sup>13)</sup>이란 용어에 대한 인식차이로 마찰을 일어나고 있으며, 현대예술에 있어서도 쌍방이 외래의 것을 수용하여 발전시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악기는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종 관악기는 우아미를 살리기 위해 쇠에서 나무로 바꾸는가 하면 현악기인 가야금, 옥류금, 계금 등도 개량하였다. 한 예로 가야금은 명주실로 끈 줄 대신 철사 줄을 사용하고 부들을 없앴으며 12현을 13현과 19현으로 그 줄을 늘려 가야금의 조율성을 배제시켰다.<sup>14)</sup> 이는 남북예술공연에서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은 변화를 뛰어넘어 변질로 보는 반면 북한은 이를 변화로 인식하고 있다.

미술의 경우는 코리아미술전을 계기로 남북미술의 이질정도를 알 수 있었는데 한국이 색, 주제와 표현 등에 있어 다양성과 다변성을

---

13) 남북한이 인식하는 전통개념은 다르다. 남한은 선조들이 지녔던 궁중예술, 종교예술 등 모든 문화유산을 포함하는 반면 북한은 계급투쟁과 유물론의 관점에서 전통을 이해하고 있다.

14) 배영기, “체제귀속성 확보 위한 한 목소리,” 「예술세계」(1989년 여름), p. 135.

유지하면서 순수미술을 표명한 반면 북한은 선전의 색채가 짙고 획일적이며 형식도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화·연극 등에서의 이질화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영화·연극은 표현의 자유가 사상·이념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보장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는 예외없이 마르크스-레닌의 유물변증법과 사회주의 이념에 바탕을 두면서 김일성부자 우상화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문화예술 이질화의 정도는 수면 위에 드러난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 이질화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심각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이질화는 문화교류와 문화접변을 시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소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 문화에 대한 흡수형태를 취하기보다는 적응 또는 동화형태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문화영역에 대한 당·정의 지휘·감독

문화예술표현에 있어 한국정부는 사상과 이념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간섭과 통제를 가하고 있지만 그 외의 부문에서 정부가 개입한다거나 어떠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문화예술인들은 나름대로의 가치관아래 독자적인 작품선택과 자유로운 표현을 구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문화예술 전 분야에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당·정의 지시사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문화예술의 순수성과 독자성은 찾아 볼 수 없다.

체제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의 경우는 특히 심하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하에서 북한의 언론은 레닌이 규정

한 공산주의 언론관에 기초하면서 신문<sup>15)</sup>·출판<sup>16)</sup>·방송<sup>17)</sup> 등 모든 언론매체는 최종적으로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감독을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정무원의 감독에 의해 운영되면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혁명관에 기반하여 주민의 사상무장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당의 노선 및 정책 그리고 혁명사업이 결정되면 모든 언론매체는 이 구동성으로 집단적선전과 선동적 역할을 추구하면서 심지어는 당원과 근로자들의 조직동원을 담당하는 등 모든 기능과 역량을 다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통일노선과 정책을 선전하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국제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한 선전전략을 채택하기도 한다.

종교의 경우를 보면, 「조선천주교연합회」,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유교연맹」, 「조선종교인협의회」 등은 당 정의 지휘감독하에 있으며 종교단체라기보다는 사회단체로서 존재하고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산하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일전선 구축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은 종교적 자율성이 상실되어 있고 또한 종교활동에는 별 관심이 없다.

15) 신문은 당중앙위 선전선동부 신문과와 정무원출판총국 신문과의 행정적인 감시와 감독 하에 발간된다.

16) 출판물인 경우 담당부서는 형식상 정무원 직속인 출판 총국이나 실제로는 노동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출판지도국이 맡고 있다. 따라서 출판물이 기능과 계층별로 분화되고 있으며 기관지란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모든 간행물이 등록번호와 검열번호가 적혀 발간되고 있고 발행부수 역시 엄격하게 제한된다.

17) 방송의 지역체계를 보면(「중앙일보」, 1989. 6. 26), 조선중앙방송위 - 각시도방송위 - 군 읍방송위 - 유선방송중계소로 구조화되어 있고 조직편제는 정무원에 속해 있으면서 당선전선동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예술의 경우도 당·정의 지휘감독하에 있다. 작품의 주제선정과 창작방향 등 정책적인 사항은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기술적 지도를 비롯한 예술인 관리 등의 실무적인 사항은 노동당 문화예술부에서, 그리고 예술부문에 대한 행정실무는 정무원 산하 문화예술부가 담당하고 있다. 문학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창작활동은 당에 의해 통제된다. 더군다나 작가 예술인들은 중앙당 문화예술부 산하단체인 「조선문학예술총동맹」<sup>18)</sup>에 그리고 작가들은 「작가동맹」<sup>19)</sup>에 자격을 인정받아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체계 밑에서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해야 할 작품의 주제들은 1) 혁명적 전통(김일성의 항일 투쟁을 찬양함)을 다룰 것, 2) 조국 통일과 혁명 과업(6.25당시의 인민군의 활동을 찬양함)을 그릴 것, 3) 사회주의 사회 건설(북한 사회의 발전을 찬양함)의 위대성을 찬양할 것, 4) 제국주의의 부패상(한국의 현실 비판)과 통일의 당위성을 그릴 것<sup>20)</sup> 등으로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주제하

---

18)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기본입부와 사명은 “당의 사상 사업의 기본 방향에 따라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강한 사상 투쟁을 벌여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를 막아내고 북고주의적 경향을 극복함으로써 문학 예술을 사회주의적 사상 풍토 위에서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혁명의 완수를 위해 온 사회를 혁명화·노동 계급화 하는 데에 기여하는 혁명적 문예 작품을 생산하도록 사상 교양을 강화하는 데에 두고 있다.” 권영민, “북한의 문예 이론과 문예 정책,” 「북한의 문학」, 권영민(편)(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78. 그리고 이에 소속한 예술단체로는 「조선작가동맹」, 「조선미술가동맹」, 「조선음악가동맹」, 「조선영화인동맹」, 「조선연극인동맹」, 「조선무용가동맹」, 「조선사진가동맹」 등이 있다. 이외 각공장이나 기업소, 협동단체 등에 「예술소조」라는 것이 있다.

19) ‘작가 동맹’에는 소설가·시인·극작가·아동문학가·평론가·외국 문학가·문학연구자들이 모두 소속되어 있다. 이는 창작 활동을 권장하는 사회 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나 문학에 대한 통제 기구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 Ibid., p. 78.

20) Ibid., p. 79.

에 모든 작가·예술인들은 창작계획을 짜고 구체화하는데 검열<sup>21)</sup>을 받은 후에야 공연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치적 목적성을 띄지 않은 작품을 만들 수 없으며 그들의 이념이나 개성을 살린 창작활동도 할 수 없다. 오로지 당·정의 방침과 지시에 의해서만 문예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일종의 기능인이나 고용근로자에 불과한 상태다.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모든 문화예술 단체들은 기관단체로 규정되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대부분 민간단체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 문화교류가 진행되는 경우 시 민간단체와 기관단체와의 교류를 의미하게 되므로 문제가 된다. 또한 문화단체와 정부와의 체계에 있어 북한은 수직적인데 반해 한국은 수평적이며, 이로 인해 한국이 최소한의 정부개입을 필요로 하는 반면 북한은 최대한 당·정의 개입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체계 밑에서 문화교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 3. 무기화된 목적수행

북한의 문화예술전반에 걸친 역할과 기능은 무기화된 목적 수행에 있다. 이는 김일성체제유지, 당·정의 선전선동, 대남선전, 사회주의 건설 등과 관련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특히 언론이 무기화된 목적수행을 하면서 전위대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언론은 1) 김일성의 혁명사상·주체사상을, 2) 당

---

21) 검열의 내용은 1)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의 실천, 2) 국가 기밀 엄수, 3) 혁명 건설사업의 긍정적 평가, 4) 자본주의적 사상 요소 제거, 5) 대중에 대한 계몽적 가치, 6) 예술적 성과 등이다. Ibid., p. 81.

중앙의 유일지도 원칙에 따라, 3) 종자(김일성주의, 주체사상, 당의 유일사상을 의미하는 사상적 알맹이)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 원칙에 따라 보도<sup>22)</sup>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체제유지와 사회주의건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김일성부자나 당이 주민에게 알려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낄 때만 선택된 내용을 보도하기 때문에 「정치사회화의 도구」에 불과하다.

특히 신문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선전-선동자로서의 기능」, 당과 대중과의 연계를 위한 「조직자로서의 기능」, 문화적 소양과 공산주의 사상교양을 위한 「문화 교양자적인 기능」 등을 강조한 「레닌관」을 따르면서 “공산주의 이념형성 및 공고화, 당과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 고양,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정신의 고양, 반미 적대감정의 양양, 김일성부자의 세습체제 지지 및 찬양”<sup>23)</sup> 등 「이념도구」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

출판물도 예외는 아니다. 출판물은 사상적 무기와 혁명수행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당이 모색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건설을 위해 주민을 조직동원하는 유력한 무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원과 인민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김일성부자 우상화에 만전을 기하고, 당정책을 인민들에게 교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당출판물의 경우는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면서 “수령의

---

22)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 해설」(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5), pp. 5-81.

23) 「서울신문」, 1990. 4. 5.



사상을 전하고 옹호고수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는데 참답게 이바지”<sup>24)</sup>하고자 하며 당건설과 당사업문제를 취급함으로써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건설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남혁명통일과 대외선전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對敵투쟁의 무기로서, 인민들을 교양하는 강력한 사상적 무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전파매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방송은 국가방송으로 일정한 선전목적을 실현하는 보도선전, 혁명사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사상문화교양 수단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김일성우상화와 유일체제를 강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체사상을 방송에서 구현해야 하며, 방송담당자들이 당에 의거하여 모든 활동을 해나가야 하며,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 제작시 김일성주의를 표방하는 좋은 내용을 골라 이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최단기간내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효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sup>25)</sup>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다.

특히 김일성 사망후 북한의 방송은 김정일의 이미지 고양을 하면서 김일성과 같은 우상화작업과 그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선전에 돌입했다. 1994년 7월 21일 평양방송에 의하면 김정일이 “인민을 위해서라면 들 위에도 꽃을 피워야 하고 인민이 바라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고, 이에 “북한주민들은 김정일의 이같은 점에 매

---

24) 김용학, 「로동신문」, 1990. 10. 23.

25) 안춘옥, “북한의 TV 프로그램 편성전략” (한국방송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1994. 5. 14), pp. 116-17.

혹돼 그를 하늘처럼 숭배하고 있다”<sup>26)</sup>고 하면서 주민들의 시선이 김정일에 향하도록 하고 있다.

문학예술의 경우를 보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같이 문학예술을 통하여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합리화하는 선전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은 “국가는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sup>27)</sup>고 명시한 사회주의 헌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북한에서의 문학예술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창조적로동과 새생활창조어로 힘있게 고무하는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sup>28)</sup>을 다하는 「혁명의 무기」와 「대중교양의 수단」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문예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화된 목적수행을 위해 문예정책<sup>29)</sup>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종자론과 주체문예이론을 바탕으로 1) 당정책의 구현 및 선

---

26) 「평양방송」, 1994. 7. 21. 같은 날 중앙방송도 “김정일 동지는 영도자가 지녀야 할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높이에서 완전무결하게 체험한 절세의 위인이며 위대한 인간”이라고 칭송하면서 김정일이 인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위대한 영도자이며 인민들 역시 그를 하늘로 숭배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27)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45조.

28) 「조선중앙년감, 1981」, p. 37.

29) 북한의 문예정책은 1960년대 김일성의 혁명사상이 주축이 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항일유격대의 활동사실을 모범화한 혁명전통교양을 체계화함으로써 김일성 혁명사상을 고조시키고 우상화작업을 시도하면서 함께 추진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종자론과 주체문예이론을 확립하면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고조시키고 당정책을 선전하고 미화시키는 작업을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목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예술전반에 걸친 노력이 진행되었는데 특히 혁명가극을 비롯하여 김부자 우상화에 이바지한 작품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전 1) 김일성부자에 대한 이상화작업, 2) 당 정의 선전 및 정책구현 3) 공산주의 사상교양 및 인간개조, 5) 사회주의 건설에 요구되는 동원 및 근로의욕 고취에 주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김일성은, “사람들을 혁명정신으로 교양 하는데서 문학 영화 연극 음악 무용과 같은 문예부문일군들의 역할은 너무 큼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북부해야 할뿐 아니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에 북부해야 한다”<sup>30)</sup>면서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사업을 위해 주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작가와 예술인들에게, “반동적 부르주아문학예술의 온갖 독소를 반대하여 단호하게 투쟁하여야 하며 우리의 붉은 문학예술을 더욱 전투적이고 풍부한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재능과 창작적 열정을 바쳐야 할 것”<sup>31)</sup>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주의문예에 대한 투쟁적 방향을 설정해 놓고 문예정책을 결정하고 있는데 작가·예술인들에게 이러한 정책을 따르도록 하고 주민들을 교화시키는 작품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문예작품들이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장편소설 「아침해」, 「뜨거운 심장」, 「빈터우에서」, 「철의 신념」, 서사시 「불타는 해」, 서정시 「어머니」, 가요 「세상에 부림없어라」,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 「김정일화」, 「빛나라 정일봉」, 「주체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한길로」,

30) 「김일성저작선집 4」, p. 144.

31) 陳繼法, 「사회주의 문학예술론」, 業成義(역)(서울: 일월서각, 1979), p. 225.

영화 「청춘의 심장」, 「평범한 사람」, 「군대책임비서」, 「보증」, 가극 「피바다」, 「성황당」 등이 있다. 이밖에도 미술계통으로 회화, 기념비조각, 출판화, 수공예 등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언론·문예정책은 체제강화와 공산주의선전을 위해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주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기화된 목적일변도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한국문화예술이 순조롭게 교류협력을 진행시킬 수 있는가는 사실상 의문이다.

#### 4. 비타협성

북한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과 함께 문예작품 내용에 있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본적 요소 외에 「온갖 반동적 문예 조류 및 반혁명적 문예사상과의 비타협성」<sup>32)</sup>이라는 요소를 추가시키면서 사회주의적인 내용과 민족적인 형식 이외의 작품을 창작하지 못하게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여기서 「비타협성」이란 “적대주의적인 역사 발전의 법칙성에 근거를 두는 것이고 이것은 세계가 공산주의로 통합된다면 당연히 소멸할 수밖에 없는 상대주의적 모순을 바탕으로 정착되는 이론”인데, 즉 “부르조아 예술에 대한 적대 개념없이 북한의 문예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문예를 위하여 그 적대적 위치에서는 각종 「반동적 문예」의 존재가 필요하고 그것과 싸울 수 있을 때 문예는 마침내 「힘있는 무기」의 기능”<sup>33)</sup>을

32) 「김일성 저작선집 1」, p. 380.

33) 홍기삼, 「북한의 문예이론」(서울: 평민사, 1981), p. 43.

다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혁명의 리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하여서도 안된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 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교양 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 수 있다”<sup>34)</sup>고 한 김일성의 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주체예술만이 최고이며 그 외의 어떤 사상이나 사조 모두 「이질문화」라 여기면서 “넓은 사상과 문화예술이 생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은 없다”<sup>35)</sup>고 단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문예건설에 방해되는 요인으로 자본주의(그리고 제국주의)사회로부터의 부르조아사상문화의 침투라고 여기고 있다. 즉 부르조아사상문화는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정신적 마약이며 민족문화의 발전을 쪼먹는 유해로운 독소이며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타락시키고 그들을 정신적 불구자로 만드는 도구로써 특히 청년들은 부패타락시키는 해독적 작용을 한다”<sup>36)</sup>고 한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사회주의적 예술의 당성·계급성·인민성<sup>37)</sup>의 원칙을 철저히 강조하면서 초당성, 무계급성, 허무주의, 복고주의, 유교적 전통 사상, 부르조아적 사상 등의 문예

34) 「김일성 저작선집 2」, p. 597.

35)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op. cit., p. 97.

36) 박문성, 「로동신문」, 1990. 11. 1.

37) 즉 당성은 당의 노선과 정책에 입각해서 작품의 소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고, 계급성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투쟁을 소재로 해야 한다는 것이며, 인민성은 작품을 통해 인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영규, “역사인식의 차이와 장기적 포석,” 「예술세계」(1989년 여름), p. 56.

적 경향을 거부하고 부패하고 반동적인 사상문화의 침투적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혁명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적대되는 자연주의, 예술지상주의, 형식주의 등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하고 이와 같은 「관념론 철학과 부르조아 사상」에 의해서 생겨난 문예 조류, 가령 「순수문학, 예술을 위한 예술, 무사상성 등 잡다한 구호」 또는 「생활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는 명목 밑에 비본질적이며 의의 없는 잡다한 생활적 사실 등을 기계적으로 복사」”<sup>38)</sup>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이러한 자연주의문학과는 일말의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적 비타협성은 바로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모든 문예가 퇴폐적이며 부화방탕하다고 매도하면서 이를 부정하고 타도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한국의 문예도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 5.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남북한 서로는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반하여 상호비방을 계속하여 왔다. 예를 들면 한국은 반공이념과 함께 1·2·3공 시대에는, 북한에 대해 「빨갱이 집단」, 「침략자」, 「적」 등으로 은유하고, 체제에 대해서는 「북괴 김일성괴뢰집단」으로, 통치자는 「김일성 괴수」, 그리고 「체제부정 수복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했다.<sup>39)</sup> 그리고

38)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p. 99.

39) 유영옥, “통일정책의 상징작용에 관한 시대별 분석,” 「극동문제」(1994년 1월), pp. 23-30.

4·5공화국시대에는 「살인마」, 「전쟁광」, 「테러집단」으로, 「김일성」, 「북괴 북한」(4공화국)과 「북한」(5공화국), 그리고 「실체인정 대화협상의 대상」으로 여겼다.<sup>40)</sup>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6공화국에 들어서 바뀌기 시작했는데 한민족 공동체방안을 천명하면서 북한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한을 동족 한민족으로써 여기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체제호칭을 사용했으며, 통치자에 대해서도 「김일성 주석」으로 호칭하였다.

북한의 경우는 분단 후 지금까지 대남비방의 정도가 강했고 대남정책의 불변화와 함께 대남체제비방도 변화가 없었다. 주로 체제에 대한 비방을 강화했는데 예를 들자면, 「도당」, 「괴뢰」, 「불망나니」, 「얼뚜기」, 「인간쓰레기」, 「백치」, 「악마」... 등으로 표현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현상은 대남 대북비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중지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분명 「남북기본합의서」에 상호비방중지 사항이 포함되어 상대방에 대한 재인식의 측면에서 획기적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국이 이를 공감하고 수용할 의지를 보인데 반해 북한은 이를 묵살한데서 합의 사항은 무효화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상호비방은 계속되었는데 주로 언론매체, 특히 신문 방송을 통해 행해지고 있다.

먼저 한국의 경우를 보면 언론이 반공이념을 전면적으로 등장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남북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거시적이고 포괄적

---

40) Ibid.

인 시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지엽적으로 취급하여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갈등과 대결구도로 몰아 가면서 여전히 멸공 내지 반공식의 냉전적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을 성취하려는 한국측 의도의 표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남혁명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대남비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예를 들자면, 인쇄매체의 경우 북한신문을 대표하는 「로동신문」의 5면은 한국관련 기사를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서 대남비방을 강화하고 있고, 「남조선문제」는 대남혁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매체의 대남비방은 인쇄매체보다 그 정도가 더 심한데 라디오의 경우 「구국의 소리방송」은 대남 흑색선전방송으로 그리고 「평양 FM방송」은 한국과 동일한 밴드 88-108MHZ를 사용하면서 한국사회의 비리와 부조리 등을 풍자하면서 대남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TV의 경우 「중앙 TV」와 「만수대 TV」<sup>41)</sup> 등은 방송내용에 대남 대미 비난이 포함되어 있고, 「개성 TV」는 아예 한국과 같은 NTSC송출방식(주사선 525)을 채택하면서 대남선전용 방송을 매일 내보내고 있다. 전파를 발사하는데 있어서도 북한은 국제협약을 무시하면서 대남비방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본질적으로 150kW이상의 대출력은 국제적전파협약에 의해 발사하기로 되어 있으나 북한은 이러한 국제관행을 무시하고 300kW이상의 대출력으로 전파를 발사하면서 대남비방을 강화하고 있다.<sup>42)</sup>

41) 「중앙TV」와 「만수대TV」는 유럽식이며 독일의 텔레폰켄사가 개발한 주사선 625인 PAL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42) 박종수,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사업부 제5차 Workshop, 1994. 10. 11). 반면 남한은 저출력으로 기껏해야 100kW정도의 중파시설을 이용해서 북한에 전파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상 효과가 없다.



그리고 상대문화예술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태도 역시 문제다. 이러한 점은 남북예술공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선 북한은 한국의 전통무용에 대해 1) 복고주의, 2) 궁중에서 공연, 3) 불교나 굿 등 종교적인 내용, 4) 미풍량속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것은 “지나간 시대의 오물로 되어 버리고 이미 오래 전에 자취를 감춘 너절한 것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대무용에 대해서는 미국식이며 퇴폐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를 향하여」라는 근대무용에 대해서는, “벌거벗은 35명의 젊은 여자들이 나와 미국식음악에 맞춰 영덩이를 휘둘러대는 추태를 부리게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팔과 다리를 내뻗치며 광란을 부리게 하였다”<sup>43)</sup>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반면 한국은 북한의 민속무용에 대해 비록 고유의상과 주제를 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는 힘과 조직을 과시하려는 군대식 집단체조를 연상케하며 또한 중국과 소련풍을 많이 모방 또는 수용하여 많이 변질<sup>44)</sup>되었다고 결론 짓고 있다.

그리고 재담 중에 고속도로에 관한 성대묘사에 대해 북한은 북침용이라고 하였고, 친근감을 위해 함경도지방의 방언을 구사한데 대해서는 「가사 전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발성법」이라면서 비난을 가하였다. 공연의 마지막 순서에서 한국측이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무대배경의 영상에 대해 북한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였다.

또한 접근방법론에 있어 상대를 인식하지 않은 채 접근을 모색한

43) 「조선예술」(1985년 11월)

44) 실지 북한의 대표적 가극인 「피바다」와 「꽃파는 처녀」 등에서 표현된 무용형식은 울동의 아름다움이나 섬세함 대신 힘의 규모, 조직을 표현하고 있다.

것 역시 문제였다. 1990년 초에 KBS와 MBC가 교류가능한 프로그램목록집을 제시했는데 북한이 선별작업한 뒤 상당 프로그램을 받아들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으나, SBS가 북한측에 백두산 꼭대기에 태극기와 SBS깃발을 휘날리자고 한 제안<sup>45)</sup>은 곧 한라산에 인공기를 꼽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바로 북한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은 태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세미나」(1993. 8. 28-31)에서 한국언어학자들이 보여준 태도 역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의는 이례적으로 핵문제의 와중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개최되었고 참석자 또한 정치인이 아닌 학자들로 구성되어 논의 또한 정치적 개입요소가 없었고 주제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 학술대회에 읍저버 자격으로 참석한 도쿄외국어대학 오오에 다카오 교수에 의하면 남측 참가인들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당히 공격적이었다는 것이다. 비록 언어관과 언어정책의 변화로 인해 언어이질화가 시작되었지만 남북이 50년 동안 언어의 왕래없이 생활한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언어이질화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공격하였다는 것은 향후 과정에 있어 분명 문제시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 서로가 자기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상대를 무시한 처신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비발전적 태도와 자기위주의 태도를 수정하지 않을 때 비록 문화교류가 전개된다 하더라도 기대의 성과는 거둘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존

---

45) 박종수,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사업부 제5차 Workshop, 1994. 10. 11).

중에 입각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진실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 6. 정치적 요인의 종속적 역할

그동안 진행된 남북문화교류는 사실상 정치적 상황에 종속되어 왔다. 국내외 정치·군사적 상황에 유화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교류·협력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는 반면 극단적 갈등관계로 전개되면 이에 연동되어 진행과정이 축소 또는 중단되곤 하였다. 이는 남북당국의 정책결정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점은 그동안 진행된 문화교류의 성사와 진행 또는 축소와 중단이 어떻게 정치적 상황에 종속되었는지 분단 후 경험적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먼저 국토분단과 정치적 분단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민족분단 기간은 아예 냉전의 회오리와 함께 남북은 상호적대관계를 유지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문화교류는 전무했으며, 교류제외는 남북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전략적 의미에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1971년 말까지 이어졌는데 7.4공동성명을 계기로 상호인식이 변화했으며, 특히 이기간 동안 베트남전쟁의 여파로 북한의 통일노선이 혁명전략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한국과 정치·외교적인 소모경쟁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 북한은 문화교류의 실천보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제의를 했었다. 더구나 아프가니스탄戰으로 인해 美·蘇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솟아 東西간의 대결이 냉전초기 못지 않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던 북한은 이러한 냉전구도에 동참하면서 한국과의 대립경쟁을 가속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적 냉전분위기는 남북문화교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는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동유럽의 몰락은 물론 소련마저 해체되는 도미노 현상을 자아냈다. 중국·쿠바·베트남의 존속과 함께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절대적 후원자였던 거대한 공룡 소련의 지원이 끊어졌고 현대화를 모색하던 중국마저 경제위조에 인색하여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체제유지를 위해 개방을 극단적으로 꺼렸던 북한이지만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中·蘇의 대남 인식에서의 전환과 관계개선 그리고 탈냉전정세 등은 대남전략을 수정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한국과 교역을 추진했으며 어쩔 수 없이 인적·문화적 교류에도 제한적으로 동참하였다. 따라서 분단 후 전 기간을 통해 볼 때 문화교류·협력은 이기간 동안에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은 평양정책결정자들이 정치·군사·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핵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남북간 문화교류·협력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동안 행해진 남북 문화교류·협력은 민족동질성창출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기 보다는 대내외를 향한 이미지 선전 차원에서 체제 홍보적 성격을 띄면서 진행되었으며, 정치적 상황에 종속되어 전개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향후 문화교류·협력 역시 정치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IV. 맺음말

남북간 문화적 이질성은 본질적으로 상이한 문화의 충돌로 야기되었지만 엄밀히 말해서 양립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의 대립과 갈등으로 비롯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문화적 단절을 초래했고 상이한 사회체제와 문화구조의 차이로 인해 문화이질화가 가속화 되었다. 남북한은 유교문화의 내면화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은 개방에 따른 서구문화의 과다한 유입으로 그리고 북한은 폐쇄체제하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주체사상에 입각한 문화발전을 모색함으로써 서로간 공감대를 찾기란 사실상 어렵게 되었으며 서로 추구하는 가치관 역시 달라 서로에 대해 배타적이 되었다.

이와 같이 남북간의 문화적 이질성이 지속될 때 통일민족문화 형성은 어렵게 되고 정치·경제통합을 달성한다 할지라도 민족통합은 단시일내에 이를 수 없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민족통합은 민족동질성이 회복될 때 가능하게 될 것이다. 타분야의 교류와는 달리 문화교류·협력은 문화동질성 창출차원에서 중단되어서는 안되는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 문화동질성 창출은 동질성 회복과는 다른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로는 상이한 체제 이념으로 인하여 이미 남북한간 문화의 이질화가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으므로 통일문화는 과거의 회복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창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동질성 창출의 과정은 바로 문화접촉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활발한 문화교류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행해진 문화교류·협력은 민족적 사명감이나 필요성 또는 당위성을 바탕

으로 추진되어 왔다기 보다는 상황적 변화에 따라 일회적으로 추진되어 온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은 양자관계를 적대·갈등 또는 협력·진전 등의 상호 이율배반적 특성을 지니면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점은 第2章에 잘 나타나 있다.

요약하자면, 분단과 전쟁의 시작으로 문화이질화가 시작되었고, 북한체제가 안정의 궤도에 접어들게 되자 문화이질화가 진행되면서 문화갈등이 고착화되었는데 이는 냉전체제가 존속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이기간 동안 실질적인 남북간 문화교류·협력의 진전은 없었다. 그러나 탈냉전의 회오리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외면당하고 있던 문화교류·협력이 제한적·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서 탈피하고 한국과 유화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위장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명목상이나마 북한의 정책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이 기간이 바로 문화교류·협력의 시작기라고 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볼 때 남북한간에 수행되었던 문화교류·협력의 전부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조차도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거의 중단되어 문화교류·협력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전반적 교류협력의 과정은 실지로 전개·경색·교착상태의 형태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남북한이 각각 처해있는 현실과 자기본위의 문화관과 문화정책 상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第3章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 결론적으로 문화교류협력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는 남북한 모두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우선 분단의 고착화는 상대방에 대한 상호불신과 부정적 인식을 낳았으며, 문화의 이질성이 문화영역전반, 언어, 언론, 문학, 예술, 종교

등에 걸쳐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이질성은 상호가 극복해야 할 문제인데 특히 북한의 문화체제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이 남북 문화교류협력을 막고 있는 근본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문화 전영역에 대한 북한당국의 지휘·감독과 문화관과 문화정책이 무기화된 목적 일변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이 추구하는 김일성부자 우상화, 당·정의 선전선동, 사회주의 혁명 건설, 대남선전 등의 목적을 위해 문화에 대한 당·정의 통제가 수반되어 왔다. 그리고 북한의 문화단체들은 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위대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불과하며 여기에 속해 있는 언론인, 작가, 예술인, 종교인들은 당·정의 노선과 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꼭두각시에 불과해 남북문화교류가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의 문예사상과 문예조류의 비타협성은 문예교류를 통해 예술적 가치의 공감대와 조화를 창출할 수 없다. 북한에서는 한국을 겨냥해 자본주의 문화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되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주체문예이론관만을 따르도록 하여 국수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한국의 문예를 북한에서 절대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문예 교류는 진행중에도 항상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류를 성사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는 정치적으로 요인에 대한 남북문화행사의 종속성이었다. 냉전의 지속으로 남북관계는 경색되었고 탈냉전의 기류에도 양자관계는 명목상으로만 유화적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양자

관계는 또다시 악화되었으며 문화교류는 거의 중단되었다. 이러한 과거의 패턴은 북한의 태도와 문화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문화적 접촉은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설사 남북문화교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갖는 한계성으로 인하여 큰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교류협력에서 정치적 요소가 과도하게 개입되는 상황이 전개될 때에는 문화접촉은 계속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민족동질성 창출은 커녕 문화적 적응이나 문화적 동화는 시도되지도 못하고 정치적 갈등과 함께 상대 문화에 대한 비방만 증대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남북문화교류에서의 실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정치적 요소의 개입 없이 문화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비정치화·비이념화·비군사화 등이 극복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상적·추상적인 방안에 불과할 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남북한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사안들이다.

일부 학자와 각분야의 문화관련 인사들은 남북 문화교류·협력에 있어 「한국정부의 불개입」, 「보안법 제7조의 고무찬양조항의 삭제」, 「언론취재의 경우 통일원장관의 사후승인 요구」, 「문화예술의 교류와 자유적 접촉을 제약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의 문화관과 문화정책을 염두에 두지 않은 발상이고 문화적 갈등요소가 정치적 갈등요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를 순리적·논리적으로 풀어 나간다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문화 교류협력을 근거없이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에 의하면 “교류의 목적이 순수하고 국가 안전보장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민간차원의 각종 교류를 제한할 근거가 사실상 없어진다”<sup>46)</sup>고 밝히고 있는데 곧 북한과의 문화교류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교류를 권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힘들면 제3국에서의 문화예술 행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교류에 있어서의 정치적 요소의 개입을 문제삼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대북 문화교류를 추진시키는 데 있어 정부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민간단체들은 그들이 추진하는 교류내용이 북한의 선전에 이용될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 국가이익에 손실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문화접변과 민족동질성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정부에 건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하자가 없으면 이를 즉각 허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 쪽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남북문화교류를 총괄하는 곳은 통일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통일원과 문화체육부로 실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지침방안이 포괄적일 뿐 세부적이지 못해 민간단체에서 남북 문화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하여 업무일원화와 세부지침방안을 마련하는

---

46) 「한국일보」, 1994. 11. 8.

작업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제시 되는 것은 한국언론의 대북 보도자세이다. 상대에 대한 자극적이고 비판적 보도는 상대를 자극할 뿐 상호관계를 전진시키는 데는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할 뿐이다. 비록 북한이 언론, 문학, 예술, 등을 통해 한국을 자극하는 노골적 표현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이에 편승해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상대성의 원리가 아닌 포용의 원리를 적용해 보도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북 보도에 있어 편견을 버리고 비판보다는 객관적인 사실보도를 하는 것이 기본적 실천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결론은 냉전이 남북간 문화교류를 정지시켰다고 한다면 탈냉전은 이를 재개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냉전체제하에서 북한은 한국과의 문화교류를 원하지 않았고 실제로 실천에 옮기지 못했으나,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 남북한의 문화교류가 국내외 정세에 영향을 받아 부분적·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탈냉전적 시대상황하에서도 남북관계는 여전히 냉전상태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국을 통해 소규모나마 문화교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며, 향후 전개될 남북간 문화교류·협력에 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간 문화교류상의 장애는 상이한 체제·이념·제도와 서로가 용인할 수 없는 문화예술관과 정책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는 상호존중의 상실에 따른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기인하는 점이었는데 정치적 요소와 맞물려 그 심각성이 한층 심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지휘감독, 역할과 기능의 목적일변도 그리고 문예사상과 조

류에 대한 비타협성 등도 근본적으로 한국과의 교류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향후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인 바, 북한의 문예정책변화를 무작정 기대하기보다는 상호타협 또는 절충에 의해 교류와 협력의 지속성과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문화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독일 사례를 통해 본 문화적 이질성 극복 방향

김 학 성  
(민족통일연구원)

##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II. 내적 통합의 문제를 초래한 배경     |
| II. 내적 통합의 관점에서 독일<br>통일의 재조명 | IV. 문화적 이질성 극복을 위한<br>접근방법 |

## I. 문제제기

냉전시기동안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기존 정책과 연구는 두 가지 특성을 보여왔다. 첫째, 영토분단이라는 외형적 현실 극복의 당위성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주도적이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은 대부분 규범적이며 제도 중심적 - 특히 정치제도적 - 차원의 인식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전쟁이후 경쟁적으로 제시되어온 남북한의 통일방안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집약화된 통일정책들에서 그러한 특성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분단현실을 규범적,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냉전적인 국내외 정치질서의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써, 통일의 실현가능성이 암담

한 국내의 정치환경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 하에서 상황적으로 강요된 선택의 결과였다.

그러나 1990년을 전후하여 국내외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통일의 실현가능성 증대와 더불어 통일논의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당위론에 의거한 제도 중심적 전략 못지 않게 남북한 체제의 사회관계 및 가치체계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내적 통합을 도출할 수 있는 실천전략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분단이래 남북한간에 형성된 흔히 이질성으로 불려지는 문화적 차이의 극복이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차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과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교류를 통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남북한 상호간의 문화적 동질화를 유도하는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현 상황에서 그러한 방법이 실현되기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지만, 이에 대한 노력은 결코 포기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와 사회는 북한의 자발적 변화에 대한 기대나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만 머물기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질성 극복을 위한 폭넓은 대비책의 마련과 남한 내에서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부추긴 배경들 중에 독일통일의 경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독일통일은 제도 중심적인 통일이 미친 파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반도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태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즉 북한정권은 동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게 되었으며, 남한에서는 통일을 당위적 차원을 넘어

현실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특히 남한내에서는 남한주도의 통일가능성을 확신하는 동시에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통일후 유증에 대한 우려가 만연하는 경향이 초래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통일문제연구는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 구체적으로 말해서 넓은 의미의 통일비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요청 받게 되었다.

독일과 한반도의 상이한 역사, 문화, 국내외적 환경, 그리고 더욱 결정적인 문제로서 통일의 방법을 고려하면, 독일사례를 한반도에 적용시키려 할 때 적실성의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상황의 유사성이라는 점에서 독일통일은 한반도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독일의 경험이 통일문제연구에 창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모델로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정책 및 사건들을 일면적 내지 단편적으로 살펴보기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역사적, 상황적 문맥(context)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통일이후의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과 인과성을 갖는 통일이전 동서독의 분단상황에 대한 종합적 시각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독일의 통일후유증이 상당부분 분단기간동안 생성되었던 문화적 이질화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독일통일의 사례분석은 남북한간 문화적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직접적인 준거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먼저 내적 통합의 측면에서 독일의 통일후유증을 조감하고,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독일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통하여 남북한간의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

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내적 통합의 관점에서 독일통일의 재조명

### 1. 통일후유증에 대한 인식태도

통일이후 독일의 국내적 현실은 애초의 기대 내지 희망과 달리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통일비용과 관련한 독일정부의 재정압박, 구동독지역의 사회경제적·사회심리적 혼란, 서독지역주민들의 과도한 통일비용부담에 대한 불만, 동·서독지역 주민들간의 반목 및 동질성회복의 어려움, 독일민족의 정체성(identity) 위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소위 통일후유증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후유증은 과거 서독사회가 구가했던 정치 및 사회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안정기반을 뒤흔들어 놓았다. 더욱 큰 문제는 비단 국내적 통합과정의 현실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과정과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혼란스러운 평가들이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통일후유증이 쉽사리 해결되기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통일이 가져온 사회문제는 상당부분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동독지역에서의 급격한 탈산업화와 그에 따른 대량실업사태의 전개, 동서독지역간의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 그리고 서독지역에서의 통일비용부담을 둘러싼 계층간의 갈등은 통일독일의 사회문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서독정부는 이미 통일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예상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수 있는 과도기적 혼란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이면에 작동하는 사회심리적 갈등에 대하여 결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어떠한 대안적 처방도 가지지 못했다. 동서독지역간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마음의 벽(Mauer im Kopf)” 혹은 “한 국가내의 두 사회(zwei Gesellschaften in einem Staat)” 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동·서독 주민들 사이에 서로를 비하해서 부르는 표현 - 즉 ‘서쪽 것들(Wessis)’, ‘동쪽 것들(Ossis)’ - 은 현재 통일독일의 사회가 사회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심리적 분열에 직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통일독일의 경제적 상황변화를 살펴보면 독일의 통일후유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경제적 차원에 국한된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즉 통일된지 4년이 지난 현재 통일직후에 급속도로 전개되었던 동독지역의 경제적 황폐화는 최저바닥국면을 지나 점차 극복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서독 지역간의 임금차 완화, 동독지역에서 실업률의 점진적 감소, 동독지역주민 개개인의 생활 수준향상 등은 그러한 추세를 입증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지역간에 사회적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증폭되는 듯한 현상을 보인다.<sup>1)</sup> 이는 사회경제적 차원 이외

---

1) 독일의 시사주간지 <Der Spiegel>은 1990년 가을, 1991년 중반, 그리고 1992년 말 각각 설문조사전문기관인 ‘Emnid-Institut’에 용역의뢰한 조사보고를 바탕으로 동서독 주민들간에 ‘새로운 장벽’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첫번째 조사 결과 동서독주민들은 40여년간의 다른 체제에 익숙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많은 점에서 일치성을 보였으나, 두 번째 조사 때는 이견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며, 세 번째의 설문조사에서는 반목이 첨예화되는 경향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Die neue Mauer wächst”, *Der Spiegel*, Nr.3 (1993), p.52-59.



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서독지역에서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가 조만간에 해결되면 사회통합이 그에 따라 저절로 달성될 것이라는 희망은 엄청난 오해가 아닐 수 없다.

## 2. 통일독일의 사회현실과 내적 통합의 어려움

실제로 내적 통합과 관련된 통일독일의 사회적 문제는 발생요인과 내용상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사회문화 및 심리적 차원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목요연하게 분석, 정리하기란 쉽지 않다. 예컨대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불만은 단순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거나 내용상 일관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교육적, 심리적 등의 모든 사회적 차원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 이율배반적 내용들을 동시에 내포하기도 한다.<sup>2)</sup> 그러므로 어떠한 특정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면 자칫 단편적인 현실이해의 수준에 머무를 수가 있다. 보다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 바람직하기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통일독일의 사회문제를 조감하는 것이다. 이는 비록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몇 가지 커다란 주제를 중심으로 현실상황을 정리해본다면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

2) 특히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의 설문 결과들이 수미일관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데, 그 원인은 대체로 설문환경이 너무 급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 가. 통일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

통일독일의 사회심리적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독일국민들의 일반적 평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일이 기쁨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근심을 주는 것인지를 묻는 설문을 통하여 동서독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동서독주민들간에 상당한 견해차이가 나타나며, 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sup>3)</sup> 즉 구동독지역에서 통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겪게 된 구동독의 지배계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주민들은 통일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반면에 서독주민들의 과반수는 불만을 표출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서독지역주민들도 통일이 실현된 당시를 전후해서 통일에 대해 환호와 열광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기쁨은 잠시동안 이었고, 통일은 곧바로 근심거리를 제공하는 사건으로 다가왔다.

서독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이들은 통일비용과 관련하여 서독사회에서 여태껏 누리왔던 사회보장적 혜택의 감소라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물론이고 간접세의 형태를 띤 통일세를 부담해야만 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만족도를 설명하는 기준으로 단지 경제적 요소만을 내세운다면 동독지역주민들의 견해

---

3)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Gerhard Herdegen & M. Schultz, "Einstellungen zur deutschen Einheit",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hrsg. von W. Weidenfeld & K.-R. Korte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3), p.264. Karsten Pöhl, "Integrating the German Mind", Paper presented at the Tenth German-Korean Conference on Integration and Disintegration in Europe and Northeast Asia (Seoul, Oct. 1993), chart 5.

를 이해하기 힘들어진다. 통일이 가져다준 경제적 어려움은 오히려 동독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절실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동독산업의 경쟁력 부재로 인한 탈산업화, 실업율의 급속한 증대, 실질임금의 감소 등 동독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문제는 서독지역주민들의 통일비용부담 정도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동서독지역주민들의 만족도 차이는 기본적으로 경제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양 지역주민들의 상이한 반응은 각각 구동독체제에 대한 혐오감에서,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부족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 나. 구동독지역주민들의 사회심리적 상태

통일독일의 사회문제들중 조만 간에 해결되기 힘든 것으로서 동독지역주민들의 사회심리적 불안정 내지 혼란상은 매우 심각하다. 비록 동독지역주민들이 통일에 대해 대체로 만족을 느끼고 있지만, 구동독체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서 얻는 만족과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동독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현상으로써 주민들의 노이로제적 증상을 들 수 있다.<sup>4)</sup> 이들이 느끼는 불안은 생활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서 실업, 사회보장, 시장경제체제에 요구되는 경쟁능력 및 직업전환교육, 가치관의

---

4) 체제전환기의 동독지역에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현상을 분석한 대표적 저작으로 다음 책을 참조. Hans-Joachim Maaz, *Der Gef hlsstau: Ein Psychogramm der DDR* (Berlin: Argon Verlag, 1990)

급격한 변화 및 방향성상실, 점증하는 범죄율, 사회적 적대감의 증대,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엄청난 환경파괴, 구체제에서 공산당 내지 비밀경찰(Stasi)에 대한 협력의혹, 새로운 사회체제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강요에 대한 불안을 열거할 수 있다.<sup>5)</sup>

동독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의 원인은 상당히 복잡적이거나, 근본적으로는 급작스러운 체제변화로 말미암아 과거의 극복도,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결과의 산물이다. 적응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동독지역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통일이후 냉혹해진 사회적 환경, 유대감의 상실, 가족 및 친지간에 느꼈던 포근함의 상실, 분주함과 스트레스 등으로 요약된다.<sup>6)</sup>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문제는 대개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적응력에 있어서 개개인은 물론 세대간, 계층간에 차이가 나타나며, 설령 적응도가 높다고 할지라도 무의식세계에 잔존하는 기존의 심리구조를 극복하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통일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당수의 동독지역주민들은 점점 새로운 생활여건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up>7)</sup>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모든 세대와 계층에 일률

---

5) Hans-Joachim Maaz, "Psychosoziale Aspekte im deutschen Einigungsprozeß",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19 (1991), p.5.

6) Ulrich Becker, H. Becker & W. Ruhland, *Zwischen Angst und Aufbruch: Das Lebensgefühl der Deutschen in Ost und West nach der Wiedervereinigung* (Düsseldorf: ECON Verlag, 1992), p.54.

7) 1993년의 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73%의 동독지역주민들은 새로운 체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는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Es wächst zusammen", *Die Zeit* (1. Okt. 1993)

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응을 잘하고 있는 주민들의 대다수는 40대 미만의 인구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이상 나이群에서는 적응이 쉽지 않다.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체제변화가 어떠한 충격을 가져다주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나찌시대에서 성장하여 동독체제에서 적응을 강요당한 이들에게 통일은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얼마 남지 않는 여생동안 또다시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것은 전혀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체제변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 정도는 기본적으로 매우 낮다.

통일에 의해 가장 사회적 충격을 많이 받은 세대는 50대를 전후한 주민들이다. 구동독체제하에 사회화과정을 겪었으며, 구동독사회의 각분야에서 지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이들은 구체제에 매우 익숙해 있어서 새로운 체제가치에 적응하기 가장 힘들다. 설령 적응할 수 있다하더라도 새로운 사회적 삶을 출발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 이에 비해 청소년과 젊은 세대는 새로운 체제하에서 보다 많은 사회적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직업전환 측면에서도 큰 어려움을 가지지 않는다. 특히 동독지역 청소년의 경우 가치판단, 행위정향, 그리고 삶에 대한 흥밋거리나 생각 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서독지역의 청소년과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보고서도 나오고 있다.

미래사회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청소년 특유의 적응력과 동서독지역 청소년간의 가치 및 행위정향적 유사성에 대한 조사보고를 바탕으로 내적 통합의 긍정적 미래에 대해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동독지역의 청소년들은 본질적으로 서독지역의 동년배와 다른 심리적,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통일을 통해 자유를 얻

었지만 구체제에서 습득된 의식구조 - 예컨대 국가와 제도에 대한 불신 - 는 여전히 내면에 남아있다. 그러면서도 장래의 직업과 사회 진출과 관련하여 새로운 체제가치에 입각한 교육내용을 의무적이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sup>8)</sup> 나아가 동서독지역의 경제적 하부구조 차이를 비롯하여 장래문제 등은 동독지역 청소년들이 서독지역의 청소년보다 훨씬 물질적 가치에 매달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해 비록 높은 적응도를 보이고 있으나 동독지역 청소년들 역시 실제로는 새로운 사회에서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 다. 구동서독지역간의 상호불신

통일 이후 독일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동서독지역간의 상호불신이다. 상호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 동질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45년간 서로 다른 체제에 익숙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호이해과정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통일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호이해의 폭이 좁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상호간에 마음의 벽이 높아 가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1993년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독지역주민들의 22%, 동독지역주민들의 11%만이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는 동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각각 71%, 85%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별개의 독일인들로 생각하

---

8) Mary Fulbrook, "Aspects of Society and Identity in the New Germany", *Daedalus*, Vol.123, no.1 (Winter 1994), p.223.

고 있다는 결과<sup>9)</sup>는 상호간에 엄청난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동서독지역주민들의 갈등은 각각 상대방을 범주화시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서 뚜렷이 나타난다. 소위 Wessi와 Ossi라는 상대방에 대한 비하적 호칭에는 각각 거만함, 신뢰성이 낮음, 이기적이며 기회주의적이라는 의미와 게으름, 무능함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외에도 상호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편견들은 통합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원인들에 대한 양지역주민들의 발언들 곳곳에서 드러난다.<sup>10)</sup>

동서독지역주민들간의 상호이해정도는 통일후유증에 대한 독일국민들의 인식태도를 분석한 한 조사연구의 결과<sup>11)</sup>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된다. 이에 따르면 통일후유증의 일차적 원인에 대하여 우선 동서독지역 공히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눈에 띈다. 즉 상호이해를 위한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통일후유증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자가

---

9)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 Mai 1993)

10) 동독지역주민의 편견으로는 “서독인들은 구동독지역을 식민지 형태로 정복했다”, “서독인들은 복지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나누어 가지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서독인들은 구동독지역을 단지 상품시장으로만 간주하며, 생산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너무나 적게 투자한다”, “서독지역에는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길 원하는 자들이 있다”, “연방정부는 구동독의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하는 일이 거의 없다”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서독지역주민들의 편견은 “구동독주민들은 너무나 단순하게 행동한다. 즉 그들은 서독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원하는 반면 구동독에서 처럼 일하려 한다”, “구동독인들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구동독의 노동자와 사무원들은 서독수준의 노동성과를 별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 등이다. Max Kaase, “Innere Einheit”,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p.379

11) *ibid.*, p.381.

서독지역보다 동독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 사실은 동독지역주민들이 보다 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상호불신의 벽이 쌓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45년간의 이질적 체제하에 생활해온 결과 각각 서로 다른 생활양식에 익숙해지고, 이로 말미암아 양지역에 상이한 人性(Mentalität)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보편적으로 통일 당시 서독주민들은 정치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본주의 및 복지사회 체제하에 개인주의, 비공식적 행위양식, 쾌락주의 등의 현대적 생활양식에 익숙한 반면, 동독지역주민들은 보다 독일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생활양식은 마치 서독의 50년대 분위기를 연상시켰다. 청소년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이미 1970년대 중반이래 동독청소년들사이에 개인주의, 쾌락주의, 비공식문화의 만연이 감지되었고, 그러한 경향은 점증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던 생활양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분단기간에 상이한 인성이 형성되었다는 단정으로 귀결시키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최근의 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보다 현대적이냐, 혹은 전통적이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45년간의 분단에도 불구하고 - 또한 동서독지역 주민들의 60-70%가 이 기간 동안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 양지역주민들간에 인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sup>12)</sup> 이 결과를 수긍한다면 사회문화적 동질화

---

12) 이 결과는 1991년 겨울에 동서독지역에서 인구 1,100명 정도의 산업화된 읍단위 지역공동체를 각각 선택하여 이루어진 현장조사보고에 근거한 것이다. Winfried Gebhardt & Georg Kamphausen, "Mentalitätsunterschiede im wiedervereinigten Deutschland? Das Beispiel zweier ländlicher Gemeinde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16 (1994), pp.29-39.



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라. 정체성(identity)의 위기와 정치문화적 혼란

통일 이후 나타난 정치문화의 혼란상태는 독일의 내적 통합을 저해하는 큰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정치문화의 혼란상태를 야기하는 주요인은 통일독일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의 위기와 동서독지역간에 접충하는 이념적 가치의 양극화현상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갑작스러운 체제붕괴를 경험한 동독지역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의 위기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문제는 서독지역주민들도 정체성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독일통일이 서독체제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통일로 말미암아 과거 서독사회에 정체성을 부여했던 바탕이 흔들리게 된 데 연유한다. 서독은 예외적으로 국가공동체의 정체성 기반을 민족의식에서 찾지 않았다. 오히려 2차세계대전 이후 나찌의 과오에 대해 철저히 반성한다는 태도에서 민족주의를 금기시해왔다. 실제로 서독인들의 민족적 자긍심은 서유럽국가들 중에 가장 낮은 정도를 보였다.<sup>1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의 서독국민들로 하여금 독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긍지와 애국심을 느끼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서독의 눈부신 경제발전 및 복

---

13) 1980년대 후반의 한 설문조사결과 서독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가진 자들은 37%에 불과했으며, 주변서유럽국가들에서 나타나는 50-80%의 결과에 비교할 때 독일적 특수성이 부각된다. Werner Weidenfeld, "Politische Kultur und deutsche Frage", *Politische Kultur und deutsche Frage*, hrsg. von W. Weidenfeld (Köln: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1989), p.33.

지정책의 성과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구현하는 안정된 헌법적 질서에 대한 국민적 합의였다. 따라서 통일이후 통일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헌법적 합의의 붕괴현상이 대두되면서 구서독주민들의 정체성 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헌법적 합의의 붕괴현상은 정당구조의 파편화 경향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구서독에서 기민당(CDU)/기사당(CSU), 사민당(SPD), 자민당(FDP)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정당구조가 통일이후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통일이후 실시된 최초의 연방의회선거와 구동독지역의 지방의회선거 결과는 구서독의 정당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의 폭은 커지고 있다. 한 예로 민사당(PDS)은 최근의 유럽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괄목할 만큼 세력이 증대되었다. 즉 구동독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정당으로 대두되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다득표정당으로 부상하였다.

민사당의 비약적 도약에 대한 우려는 단지 이 정당이 구동독공산당의 후신이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구서독지역에서는 1%미만의 지지율을 얻는다는 점에 있다.<sup>14)</sup> 이처럼 극단적인 지지율 격차는 동서독지역간의 이념적 가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구동독지역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으며, 동독지역주민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유보다 평등이 더욱 중

---

14) Andre Brie, "Null-Komma-Partei im Westen, Interessenpartei im Osten", *Frankfurter Rundschau* (6. Juli 1994)

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추세를 보인다.<sup>15)</sup> 이념적 가치의 양극화추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양지역주민들의 통일독일의 체제에 대한 만족도 변화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즉 서독지역주민들의 70% 정도는 지속적으로 체제에 만족하는 반면, 동독지역에서 체제만족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sup>16)</sup>

통일독일사회의 정치·사회문화적 병리현상 - 즉 극우세력의 득세 및 반외국인 감정의 고조 - 은 동서독 양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정체성위기와 이념적 가치의 양극화추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매우 제한된 부류에서 나타나며 발흥 배경에는 사회환경의 해체에 따른 사회경제적 요인이 보다 직접적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심리적 불안을 포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치문화적 바탕이 굳건했었다면, 나찌즘이라는 전체주의적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민족적 동질성 혹은 인종적 귀속성의 신화에 매몰되는 일부의 일탈적 행태는 최소한으로 억제될 수 있었을 것이다.

---

15) “사회주의는 좋은 이념이며 단지 시행상의 잘못이 있었다”라는 질문에 대해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한 결과 구동독지역주민의 약 60% 정도가 변함없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또한 통일당시 동독주민들의 46%는 자유를, 43%는 평등을 더욱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데 반하여, 1992년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35%가 자유를, 53%가 평등을 더욱 중요시한다.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IfD-Umfragen; Karsten Pöhl, op cit., chart 15에서 재인용.

16) 설문조사에 의하면 통일직후 41%의 동독지역주민들은 현 정치체제에 만족하였고 39%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원했던 데 반해서, 1992년 말에는 각각 33%로 감소, 47%로 증가하였다. *ibid.*, Chart 13

### Ⅲ. 내적 통합의 문제를 초래한 배경

통일독일에서 내적 통합문제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내적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분단시기에 형성되었던 상호편견, 이질적 체제 속에서 형성되었던 삶의 양식차이, 민족공동체적 정체성의不在, 통일이후 통합과정에서 노정된 사회경제적 및 사회심리적 불안 등이 손꼽힌다.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서 문제를 야기하는 이 요인들의 발생배경은 분단상황하의 동서독에서 각각 잉태되고 구조화된 정치·사회문화적 문제, 그리고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만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흔히 제기되는 의문, 즉 통일이전 내독관계 및 양독간 교류가 비교적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간 문화적이질성이 왜 극복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설명도 통일이후 내적 통합문제를 초래한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히 요청되는 부분이다.

#### 1. 서독의 분단질서(Teilordnung) 관리정책의 明暗

소련의 개혁정치와 동구공산권의 붕괴가 독일통일을 가능케 한 직접적인 동기라고 흔히들 말한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동독정권의 붕괴와 급속한 통일의 이면에는 본질적으로 서독의 분단질서관리정책적 영향력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결코 간과될 수 없다. 즉 효율적인 분단질서관리의 결과로 외적으로는 독일문제에 대한 전승 4대국 유보권 포기가

가능했으며, 내적으로는 동독정권의 내적 붕괴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동독공산정권의 붕괴와 통일의 실현이 동일한 연장선상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동독내부에 미친 분단질서관리정책의 영향력 덕분이었다. 만약 동독주민들의 통일요구가 그렇게 극화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동독은 사회주의 개혁을 통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독의 분단질서관리정책이 독일통일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 브란트(W. Brandt)의 동방정책과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에 의해 전기가 마련되었던 내독관계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통일환경의 조성, 즉 통일의 조건을 하나씩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를 띤 서독의 분단질서관리정책은 단지 내독관계의 차원에만 국한시켜 이해될 수 없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분단질서의 관리는 내독관계, 서독국내, 그리고 유럽질서의 각 차원을 포괄하며, 내용이나 실천면에서 세차원이 삼위일체적인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서독의 국내정치, 경제, 사회 및 외교적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내독관계의 발전을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바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면 분단질서관리정책은 통일이후 내적 통합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통일을 향한 최적의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서 서독에게 요구되는 바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었다.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통하여 서구체제에 확실히 편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긴장완화와 상호협조를 통한 유럽분단의 극복과 중국에는 독일이

범유럽체제의 유익한 일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통일을 향한 선결과제였다.

그러므로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서독의 서구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민족주의적 의식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으며, 심지어 민족주의는 금기시되었다. 물론 서독체제하에서 과거의 민족의식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주의와 탈민족주의에 역점을 둔 시민정치교육의 결과가 가시화 되었다. 즉 1960년대 말에 이르러 고도의 산업화와 복지정책의 실현과 함께 서독에서 사회적 가치체계의 대변혁을 초래하였다.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를 기점으로 서독에서 나타난 일종의 문화혁명적 형태의 가치변화는 포스트모던적인 가치가 근대적 가치를 대신하기 시작하는 특징을 보였다.<sup>17)</sup> 즉 복종이나 예속 대신 독립과 자유의지가 강조되었으며, 환경운동, 여성해방운동, 풀뿌리민주주의운동, 평화운동 등 신사회운동의 맹아가 여기서 탄생했다.

새로운 정치 및 사회문화는 문화적 다양화를 가속시켰으며, 비록 현실정치를 주도하지는 못했지만 사회전반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됨으로써 기존의 정치세력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다. 문화적 변화를 겪으면서 근대적 의미의 민족국가에 대한 의지는 더욱 퇴색되었으며, 오히려 서유럽통합의 진전과 함께 사해동포주의(cosmopolitanism)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서독사회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찾는 노력이 결코 소홀했던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정체성문제에 대한 논의가 서독의

---

17) Werner Weidenfeld, *op cit.*, pp.18-20.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1980년대 중반, 특히 1986년 역사논쟁(Historikerstreit)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새롭게 나타난 민족적 정체성논의는 서독사회가 자원문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물질적 가치의 만연에 대한 반발로부터 시작하여 문화적, 정신적 가치에 입각한 독일인의 위상을 찾고자하는 의도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서독사회에서 정체성의 추구는 서독 내부적 국가의식과 전독일적 민족의식간에 긴장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내재적 한계를 가졌다. 독일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위 “헌법에 국주의(Verfassungspatriotismus)”, “경제애국주의(Wirtschaftspatriotismus)”, 그리고 “탈민족적 민주주의(postnationale Demokratie)”라는 말들은 그러한 한계를 단적으로 입증한다.<sup>18)</sup>

포스트모던 내지 탈민족주의적 정치·사회문화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깊이 내면화되었다. 통일이전 분단의식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젊은 세대에 속할수록 동독을 외국으로 간주하며, 동독주민들을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sup>19)</sup> 이러한 경향은 통일이후 서독지역에서 통일에 대한 불만이 청소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과 직결된다. 물론 불만을 표출하는 청소년들이 절대다수는 아니지만, 이들은 애초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가 통일로 인

---

18) 이러한 표현들은 서독의 국가공동체적 정체성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적 체계와 경제적 발전 및 복지에 대한 긍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bid.*, p.34; Ulrich Becker, H. Becker & Walter Ruhland, *op cit.*, p.41; Heinrich August Winkler, *Rebuilding of a Nation: The Germans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Daedalus*, Vol.123 (Winter 1994), p.107.

19) Gerhard Herdegen & M. Schultz, *op cit.*, p.261

해 야기된 사회보장, 경제적 불안, 장래 직업문제 등의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매우 감정적인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분단시기 서독에서 민족의식이 강조되는 정치·사회문화는 공식화되기 어려웠으며, 만약 그러한 것이 가능했다면, 독일통일은 아마도 지금과 같이 실현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분단질서관리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정치·사회문화의 한 특징이 통일 이후 독일사회의 내적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서독의 정치·사회문화가 비록 독일민족의식 내지 민족공동체적 정체성확립에 부정적 역할을 하였지만, 민주주의적 가치의 확립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 측면 역시 가지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분단시기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병존하는 가운데 서독사회가 발전적 역량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나라들보다 민주주의적 갈등문화(demokratische Streitkultur)가 잘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서독주민들은 문화적 갈등을 민주주의를 중심축으로 해결하는 데 매우 익숙해 있다. 실제로 통일이후 내적 통합의 문제가 사회적 위기상황으로까지 치닫지 않는 배경에는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교육이 큰 힘으로 작용한다.

## 2. 동독의 ‘현존사회주의’의 유산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분단시기 동독사회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적 면모를 보였다. 즉 사회심리적 변형 및 왜곡, 그리고 공적 문화와 사적 문화의 괴리라는 의미에서 문화적 이중성이다. 이러한 특징은 사회주의적 근대화 전략의 맥락에서 추구되었던 동독정권의



체제발전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되지 않았던 억압적, 권위적인 당국가(Parteistaat) 지배체제구조의 산물이다.

당국가적 체제하에서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가치와 이익은 항상 당의 기본원칙과 목표에 부합되어야만 했다. 그렇지 못한 개인과 집단의 이익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서 국가의 통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철저히 위에서 아래로 하달되는 당 독재지배체제하에서 동독주민 개개인들은 모든 사적, 공적 생활면에서 당의 권위에 예속되기를 강요받았다. 당의 권위주의적 지배는 한편으로 당의 지휘를 받는 사회단체들을 매개로, 다른 한편으로 사회의 각 부분 및 개인의 사생활에까지 침투한 비밀경찰(Stasi)의 활동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개개인들은 심적, 육체적으로 일방적인 적응을 강요받았으며, 당이 요구하는 규율, 질서, 의무감에 눌러 자신들의 심리적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가졌다.

그러한 체제특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심리적으로 만성적 결핍증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소외와 주민들 사이에 불안감, 자신감부재, 종속성을 부추기고 동시에 신뢰성, 확실성, 내적 안정과 자긍심을 소멸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불만과 분노가 잠재화된 형태의 긴장상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바탕이 되었다. 그 결과 동독사회는 왜곡된 형태로 변형(Deformation)되었으며, 비정상적 행위유형이 일반화되었다.<sup>20)</sup> 일부 당관료 중심의 ‘붉은 귀족(Nomenklatur)’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주민과 일부 하급간부들은

---

20) Hans-Joachim Maaz, "Psychosoziale Aspekte im deutschen Einigungs-proze", pp.19-20.

사회심리적 좌절, 불안감, 자결성부족, 고립감 등으로 말미암아 생계 유지와 주변의 일상생활에만 침잠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경우에 따라 국가에 대해 소극적이며 보이지 않는 저항으로 일관하였다. 즉 이들은 동독사회에서 정치적 소외를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당이 시키는 것에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왜곡현상과 더불어 동독사회발전의 전 과정에서 정치·사회문화의 이중성이란 특징이 뚜렷이 부각된다. 동독정권은 체제성립이후 사회주의체제기반의 확립과정에서 사회주의적 인간개조에 역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어느 정도 사회주의적 가치가 동독주민들에게 내면화되었다. 예컨대 동독주민들은 공적 생활에서 강조되는 평등의 가치에 점점 익숙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주민들을 사회주의적 가치에 전적으로 동화시키기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으로 동독의 공식적 정치 및 사회문화는 전통적 가치와 사회주의적 가치가 공존하는 형태를 보였다.<sup>21)</sup> 그러나 공적 생활에서 동독주민들의 문화적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를 가진다. 이들은 사실상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억압과 통제로 일관된 공적 생활에서 도피하

---

21) 동독의 정치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해보면 크게 세가지 요소가 혼재해 있다. 첫째, 독일의 전통적인 절대관료국가(Obrigkeitsstaat)적 요소로서 국민의 복종과 예속을 미덕으로 삼는 것이다. 둘째, 전통적인 독일의 노동자문화적 요소로서 이는 동독정권의 근면과 규율을 강조하는 공적 문화에 흡수되었다. 셋째, 공산주의사회의 실현을 지향하여 동독정권에 의해 강조된 문화혁명적 요소이다. Gert-Joachim Glaessner, "Politische Kultur und nationales Erbe in der DDR", *Einheit-Freiheit-Selbstbestimmung: Die Deutsche Frage im historisch-politischen Bewußtsein*, hrsg. von Karl-Ernst Jeismann (Frankfurt a.M.: Campus Verlag, 1988), p.127.

여 사적 생활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사적 생활에서의 행위정향은 공적 가치와 유리된 보다 전통적 맥락에 가까웠으며, 가족이나 친지들 사이에서 독일의 전통적 미덕인 친숙함, 이웃 사랑, 정확성, 청결, 근검 등이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졌다.<sup>22)</sup>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동독정권의 근대화 전략에 의거한 체제 발전정책은 사회구조변화를 야기시켰으며, 그에 따라 문화적 이중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동독사회의 곳곳에는 공적 가치와는 전혀 별개의 문화양식을 가진 사적 영역들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동독사회는 소위 “니셴게젤샤프트(Nischengesellschaft)”로 통칭되었다.

사적 영역의 문화는 자유와 자본주의적 소비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특징을 지을 수 있다. 동독주민들 서독체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할수록 그러한 경향은 심화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소련의 개혁 여파로 인하여 자신들이 동경하는 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체제저항의지도 증대되었다. 결국 개혁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동독정권의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동독주민들의 서독이주신청이 급증하였다.<sup>23)</sup> 그러나 동독정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1989년 여름 본격적인 대탈출이 시작되었고, 그 여파로 ‘숨을 쉬기 위한 공기(Luft zum Atmen)’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시위는 마침내 ‘10월 혁명’으로 이어졌다.

---

22) Winfried Gebhardt & G. Kamphausen, op cit., p.34.

23) Alberto O. Hirschman, “Exit, Voice, and The Fat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World Politics*, Vol.45 (Jan, 1993), p.179; Walt Sßü, “Perestrojka oder Ausreise”, *Deutschland Archiv*, Nr.3 (1989), p.297.

애초에 개혁을 요구한 시위가 통일에 대한 요구로 변하면서 사태는 채 1년도 못되는 기간 안에 통일의 실현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동독주민들의 통일의지가 진정한 민족의식의 발로라기보다 주민들의 동독체제에 대한 혐오와 동경해오던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서독에서 얻을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에 기인했다는 점이다. 동독주민들은 분단체제 속에서 형성되었던 생활양식의 차이가 가져다줄 문제에 대해 결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지난 40여년간 익숙해왔던 삶의 양식과 사회심리적 왜곡상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새로운 환경에 뛰어든 동독주민들이 새로운 체제에 금방 적응할 수 있거란 거의 불가능하며, 오히려 적응과정에서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했다. 따라서 극복되지 않은 채 동독지역주민들의 심리와 생활양식에 여전히 잔존하는 구체제의 사회문화적 유산은 통일 이후 내적 통합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한 주요 요인으로서 결코 간과될 수 없다.

### 3. 내독관계의 허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의도되었던 혹은 그렇지 않았던 지를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독일통일에서 내독관계가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 통일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없다. 그러나 단순한 통일의 달성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질성극복이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통일독일이 겪고 있는 내적 통합의 문제와 관련하여 내독관계가 이루어놓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분

단시기 양독간에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동서독사회간의 이질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다.

문화적 이질성문제와 관련하여 내독관계가 기여한 바는 주로 인적 교류, 문학·예술작품의 교류와 방송청취의 차원에서 조명될 수 있다. 인적 교류는 한편으로 일반주민들간의 상호방문을 통하여 서로의 문화를 접함으로써 이질성의 극복 내지 최소한의 동질성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분단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진 지식인들의 교류를 가능케 했다. 또한 문학·예술작품의 교류는 상호간에 문화적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방송청취 역시 상대방 체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동서독간에 이루어졌던 인적 교류는 규모 면에서 방대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분단초기부터 지속적으로 - 비록 동독측의 끊임없는 제한조치가 있었지만 - 이루어졌다. 인적 교류의 규모<sup>24)</sup>나 내용은 동서독간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변화를 보여왔다. 1950년대 비교적 자유로웠던 인적 교류는 베를린장벽이 생기면서 제한되었다. 이후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여행자 수는 매년 약 100만,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약 150만에서 250만 정도였다. 그러나 1972년 기본조약의 체결이후 여행자 수는 급증하였다. 동독으로 여행한 서독주

---

24) 이하에서 제시된 인적 교류와 관련된 통계수치는 모두 다음 자료들에서 인용한 것이다.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Zahlenspiegel: Ein Vergleich - Bundesrepublik Deutschland/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Bonn: Gesamtdeutsche Institut, 1988), p.124; Walt Süß, *op cit.*, p.296.

민의 수는 매년 500만에서 750만 정도로 추산되며, 동독주민의 서독여행은 1970년대 평균 130만, 1980년대 중반까지 약 160만, 그리고 이후에는 200만을 넘는 점진적 증가추세를 보였다. 동독주민의 서독여행의 경우 한가지 특기할만한 사실은 증가추세보다 여행자의 성격과 구성에 있다. 즉 기본조약체결이전에는 연금수혜자에 한해서 서독방문이 허용되었으나 조약체결이후 긴급한 가사 사유의 경우에도 방문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긴급한 가사 사유에서 서독으로의 여행자수는 80년 중반까지 대략 4만에서 6만 정도에 이르렀다. 80년대 중반이후 친척뿐만 아니라 친지까지 적용범위가 넓혀지고, 또 양독간의 청소년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체여행자수에서 비연금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대하였다. 1987년과 1988년에는 서독을 방문한 비연금수혜자의 수는 매년 약 120만에 달했다.

방대한 인적 교류에 비해 문화, 예술분야의 교류는 양적으로 뒤떨어지지만 결코 무시될 수 없다. 공식적인 차원에서 양독간에 문화교류는 1986년 양독간의 문화협정체결이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비공식적 차원에서 문화교류는 공연예술의 경우 인적 교류의 틀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70년대 후반부터 상호교류의 횟수는 증가추세를 보였다. 삶의 양식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이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문학작품의 경우에도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 교류가 있었다. 동독주민들의 서독작품에 대한 접근기회는 매우 제한되었지만, 동독의 문학작품들은 1960년대부터 서독에서 출판되었고, 일부 동독의 작가들은 서독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었다. 서독주민들에게 있어서 동

독작품들은 대개의 경우 문학으로서 수용되기보다 동독의 생활환경을 엿볼 수 있는 읽을거리로 간주되는 경향을 보였다.<sup>25)</sup>

동서독 양국은 이미 기본조약에서 공식적 문화교류의 증진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협정이 한동안 체결되지 못한 것은 문화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견해차이 때문이었다. 즉 서독정부는 인위적 국경을 초월하는 문화민족(Kulturnation)의 개념을 바탕으로 동서독간에 문화적 공통성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인데 반해, 동독정권은 사회주의문화의 독창성과 이념성을 강조하고 서독과의 문화교류를 외국과의 교류로 간주하였다. 사실상 동독정권은 문화교류가 체제유지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그러나 국제적 고립문제와 폐쇄정책으로 인한 내적 불만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인 형태에서 문화교류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문학작품이나 공연예술에 비해 전파매체를 통한 양독간의 문화교류는 오히려 손쉬웠다. 특히 TV를 통한 문화교류는, 비록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동서독주민들이 서로의 생활을 아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 경우도 프로그램의 성격상 일방적인 교류형태를 띠었다. 즉 서독인들의 동독방송청취는 매우 미미한 데 반해 동독인들은 동독방송보다 서독방송을 즐겨 시청했다. 호네커의 등장이 전까지 동독내에서 서독방송의 청취에 대한 통제가 있었지만, 70년대에 들어오면서 통제는 상당히 완화되었다.<sup>26)</sup> 70년대 대형의 공동안테나의 설치가 제약을 받지 않게 되자 케이블을 통해 동독가정은

---

25) Karl-Rudolf Korte, "Literatur",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p.449

26) Manfred Rexin, "Massenmedien in der DDR", *Deutschland Handbuch* (München: Carl Hanser Verlag, 1989), p.402

서독방송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었다. 물론 방영방식의 차이, 즉 서독의 PAL, 동독의 SECAM이라는 차이가 있었지만 겸용 데코더(Decoder)가 동독내에서 개발되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80년대의 통계에 의하면 서독방송의 가시청지역에서 수상기를 가진 동독인구의 약 90%가 서독방송을 시청하였다고 한다.<sup>27)</sup> 지역적 문제로 인하여 드레스덴(Dresden)과 멜켄부르크(Melkenburg)일부에서 서독방송청취는 불가능하였으나, 이를 제외하고 전 동독지역의 99%가 서독 TV의 가시청지역이었다.

이상의 인적 교류, 문화·예술교류, 방송교류의 예에서 보듯이 분단 기간동안 동서독간 문화적 이질화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이질성문제는 통일독일의 사회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문화적 이질성극복과 관련하여 통일이전 동서독간의 교류가 기여한 바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러나 통일이후에 나타난 상황을 감안할 때 그러한 교류의 기여정도는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매우 방대한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교류의 문화적 차원에 미친 영향력이 그리 크지 못했던 이유는 교류의 진면목, 즉 형태, 질, 그리고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다.

첫째, 동서독간의 교류는 매우 일방적인 형태를 띠었다. 앞에서 언급했던 교류의 구체적 사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동독정권은 서독 문화의 유입을 가능한 차단(Abgrenzung)하려고 노력했다. 동독정

---

27)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사례집], 통일과정연구 93-V (1993), p.688; Kurt R. Hesse, "Mediennutzung in der DDR", *Deutschland Archiv*, 10 (Okt. 1988), pp.1103-1105.



권은 체제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양독간의 교류를 허용했다. 즉 체제불만의 폭발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 내지 서독의 경제적 원조에 대한 최소한의 양보 혹은 협정이나 조약의 준수라는 맥락에서 교류의 범위가 정해졌다. 따라서 방대한 교류의 양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교류 자체가 일방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기 때문에 문화적 이질성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균형적인 상호이해의 폭은 넓지 못했다.

둘째, 질적 차원에서 볼 때 동서독간의 교류가 문화적 이질성의 극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의외로 낮았다. 대표적인 한 예로써 동독정권이 허용한 서독방문은 주로 연금수혜자들에게 국한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이미 분단이전에 사회화과정을 부분적이거나 겪었고, 대체로 동독의 사회주의적 문화보다 독일의 전통적 문화에 더욱 익숙했던 세대에 속했다. 사실상 문화적 이질화문제는 분단이후 이질적 체제하에 사회화과정을 겪은 청·장년 층에 집중되는 것으로서 비교적 이질화정도가 낮은 이들의 서독방문이 동서독간의 문화적 이질성 극복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었던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1980년대 후반 동독정권은 비연금수혜자의 여행기회를 대폭 넓힘으로써 교류의 질이 향상될 수 있었다. 80년대 후반 동독정권의 교류정책적 변화는 기본적으로 소련의 개혁정책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써 서독여행을 대폭자유화함으로써 개혁거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려 했다.<sup>28)</sup> 그러나 이러

---

28) Walt Süß, *op cit.*, pp.286-301; Ernest D. Plock, *East German-West German Relations and the Fall of the GDR* (Boulder: Westview Press, 1993), pp.82-83.

한 변화는 통일의 시기에 비추어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 즉 비록 새로운 차원의 교류확대가 통일을 촉진시킨 요인이 되었음은 분명하지만, 문화적 이질성의 극복에 사실상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란 시간적으로 너무 짧았다.

셋째, 교류의 질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교류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그러한 내용이 과연 얼마만큼 문화적 이질화의 극복에 기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될 수 있다. 흔히 독일통일에 있어 문화적 차원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방송의 역할을 손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방송이 동독주민들에 미친 직접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미 통일이전부터 서독에서는 내독관계에서 방송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혹자는 서독체제에 대한 홍보차원의 맥락에서 동독주민들의 서독방송청취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말하며, 심지어 동독정권을 안정시키는 데 일조한다는 가설까지 나왔다.<sup>29)</sup> 이러한 주장은 서독방송을 통하여 동독주민들이 접하게 되는 실업문제, 가정문제, 범죄를 등 서구산업사회의 어두운 면이 동독체제의 정치적 자유, 인권, 경제적 낙후성 등에 대한 부정적 차원을 상쇄시킨다는 점을 논거로 든다. 나아가 동독정권을 안정시킨다는 생각은 서독방송에서 나타나는 서독의 사회현실이 동독주민들에게는 단지 환상의 세계로만 비춰지며, 따라서 그러한 방송과는 완전히 유리되어 정치적, 경제적 결핍이 지배하는 자신들의

---

29) Ernest D. Plock, *East German-West German Relations and the Fall of the GDR* (Boulder: Westview Press, 1993), pp.90-93.

현실세계에 대해 더욱더 체념적일 수밖에 없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주장이나 생각은 단순한 가정의 차원을 넘어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되었다. 즉 동독주민들의 서독이주자들 중 지역적인 이유 때문에 서독방송이 시청불가능한 드레스덴지역으로부터의 이주자의 수가 오히려 타지역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sup>30)</sup> 물론 이러한 사실 한가지만으로 서독방송의 영향력이 결코 과소평가될 수는 없다.

이러한 논의가 공통적으로 문제삼는 바는 기본적으로 방송내용 자체가 동독주민들에게 여과되지 않은 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즉 서독방송의 영향력은 직접적으로 행사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인식을 매개로 재구성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서독방송이 미친 영향력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서독방송은 동독주민들에게 소비자사회(consumer society)에 대한 매력을 심어 주었고, 둘째, 동독에서 보도되지 않았던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셋째, 동독체제와 비교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러움을 더욱 유발시켰다는 점이다.<sup>31)</sup>

그러나 이러한 영향력이 곧 서독의 전반적 사회문화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동화가능성을 높여주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즉 방송을 통하여 서독의 자본주의적 문화현실이 일반 동독주민들에게 이해되거나 직접적으로 수용되었다든지, 또 이를 통해 서독의 문화

---

30) Kurt R. Hesse, *op cit.*, p.1105.

31) Ernest D. Plock, *op cit.*, p.92.

가 동독주민의 생활양식에 용해되어 침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일반성 면에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1985년 250명의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동독주민들의 서독방송시청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즉 동독으로부터의 이주자들은 대체로 서독방송에서 뉴스나 정치관련 특집물에 높은 시청률을 보였으나, 오락물이나 상업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실제생활과 동떨어져 있고 과장이 심하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나타내었다.<sup>32)</sup> 물론 일부 청소년들은 예외적으로 서독의 대중문화에 매력을 느끼기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서독으로 이주를 결행한 자들의 설문대답을 미루어볼 때 문화적 동질화측면에서 일반적 동독주민들에게 미친 서독방송의 직접적 영향력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통일이후 비로소 실증된 현실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분단시기 양독간의 교류가 사회문화적 동질화에 기여한 바는 아마도 주민들 개개인의 차원에서 느낀 민족적 유대감의 재확인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것도 동서독 공히 세대간, 사회계층간에 적지 않은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들의 경우는 민족적 애환으로서보다 비교의 관점에서 서로의 생활을 객관적 현실로 바라보는 경향이 높았다. 기성세대의 경우도 사회계층간에 차이는 있지만 민족적 유대감과는 별개로 서로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인적 교류는 양독간에 전통적인 삶의 양식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통한 유

---

32)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사례집」, 통일과정연구 93-V (1993), p.698.

대감을 발견하는데 기여를 했지만, 교류의 실제적 한계로 말미암아 각 체제가 생성한 이질적 생활양식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1982년에 이미 서독작가 페트쉬나이더(Peter Schneider)에 의해 날카롭게 지적되었다. 분단의 비극을 다룬 자신의 소설 ‘장벽을 넘는 자(Mauerspringer)’를 통하여 동서독의 사회문화 및 심리적 상황을 해부하면서 부숴지기 힘든 마음의 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으며,<sup>33)</sup> 이는 통일 이후 현실로 나타났다.

#### 4.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의 문제

독일의 통일후유증을 말할 때 예외없이 통일방법에 대한 비판이 따른다. 이미 통일과정상에서도 단기간내 체제흡수적 형태의 통일이 초래할 문제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되던 당시 독일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면 모든 점을 고려하는 가운데 통일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찾기로 매우 힘들었다. 사실 독일의 통일방법은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 아니라 상황적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였다. 이는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직후 서독총리 콜이 제안했던 향후 독일문제에 대한 ‘10개항 계획’의 어디에도 급속한 통일의 구상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채택된 통일방법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각

---

33) “마음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될 보이는 장벽의 붕괴에 필요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Karl-Rudolf Korte, *op cit.*, p. 452 에서 재인용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생시켰으며, 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현실화된 것이 바로 내적 통합의 어려움이란 결과이다. 특히 분단시기에 동서독에서 생성되었던 이질적 삶의 양식을 감안할 때, 급속한 체제흡수적 통일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동서독 주민들 모두가 통일에 대한 단단한 마음의 각오를 갖출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동서독주민들은 대개 통일이 가져다줄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통일을 주도한 서독정부의 약속과 통일독일의 밝은 장래를 너무 쉽게 믿었다. 그러나 막상 통일이후 서독정부의 예상은 상당부분 오판에 근거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특히 통일비용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된 사회보장비의 감축으로 말미암아 계층간에 불균형한 비용부담이 야기되면서 서독의 중간 및 중하층을 중심으로 통일의 결과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민족적 정체성이 취약한 정치 및 사회문화에 익숙해왔던 서독주민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질적인 동독지역주민들의 삶의 양식을 포용할만한 심적 여유를 가지기란 힘들며, 오히려 불만을 가진 서독주민들의 눈에 동독주민들의 생활양식은 부정적으로 비춰졌다.

급속한 체제흡수적 통일은 동독지역주민들에게 더욱 큰 문제를 안겨주었다. 사실 통일의 기반이 되었던 1989년 10월 동독주민의 평화적 혁명은, 비록 공산당지배체제를 붕괴시키긴 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정치적 투쟁이 아니었다. 구동독체제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경제적 실패, 기만, 불

신, 편협성의 결과로 와해된 것이었다.<sup>34)</sup> 동독주민들은 자유를 부르짖었지만, 그 자유를 구체제하에서 형성되었던 자신들의 내적 민주화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소비재구입, 여행의 자유, 서독화폐에 대한 동경, 동독에서 경제적 기적에 대한 희망 등 외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실제로 1990년 3월 동독의 민주선거는 동독사회의 내적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였다. 그러나 동독주민들은 이 기회를 놓쳤다. 통일의 결과에 대한 환상이 선거에 임하는 동독주민들의 자세를 결정지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유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적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 구체제하에서 형성되었던 정치·사회문화 및 사회심리적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자명하다. 동독주민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회피하고 서독이 40여년간 애써 이루어 놓은 것을 단시간 내에 쉽게 받아들이는 길을 택했다. 이 길은 쉬울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통일독일에서 내적 통합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기본 가치를 토대로 하여 분단기간동안 이질화되었던 생활양식이 수렴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의 공유화나 생활양식의 수렴화를 위해서 구동서독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면에서 구동독주민의 서독체제로의 동화가 강요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통일방법상에서 연유하는 이러한 상

---

34) Hans-Joachim Maaz, "Psychosoziale Aspekte im deutschen Einigungs-prozess", p.4.

황이 변화할 수 있기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그러한 동화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물질적 가치 면에서 우월한 입장에 서있는 서독지역주민들의 ‘나눔을 통한 분단의 극복(Uberwindung der Teilung durch Teilen)’에 대한 마음자세와 동독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심리적인 과거청산 노력이다.

이러한 당위적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민족적 유대감의 증대가 요구된다. 독일정부나 사회각계는 경제성장과 생활의 질적 향상, 교육을 통한 가치의 동질화, 올바른 역사관의 정립, 동서독지역간의 상호이해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통합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물론 그 결과는 단기간 내에 나타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러한 통합노력이 얼마나 효율적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통일독일의 공동체유지를 위한 구심력을 찾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통일독일에서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갑론을박이 거듭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독일민족사의 비극적 운명<sup>35)</sup> 인 동시에 유럽통합에 대한 독일의 입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독특한 역사적 경험으로 말미암아 독일은 통일이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적 응집력의 필요성에

35) 독일의 철학자 니체(F. Nietzsche)는 ‘선과 악의 저편(Jenseits von Gut und Böse)’라는 저술에서 독일인의 특징은 끊임없이 독일(deutsch)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eter Pulzer, “Unified Germany: A Normal State?”, *German Politics*, Vol.3, no.1 (April 1994), p. 16에서 재인용.



대하여 공감대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혹자는 통일독일의 정체성을 구태의연한 민족의식에서 찾는 것을 탈피하여 과거와 단절된 열려진 미래를 향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 동질성의 요구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6)</sup> 이에 반해 중도 우파적 정치성향을 지닌 자들은 공동체적 기반으로서의 민족의식과 역사적 과오에 연결되는 민족국가재건을 구분하면서 민족의식의 중요성과 필연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독일민족국가의 역사는 끝났지만 독일인의 역사는 살아있다”라는 1960년 야스퍼스(Karl Jaspers)의 지적은 다시금 각광을 받는다.<sup>37)</sup> 물론 이러한 입장에서라도 다양한 하위문화를 가진 현대의 서구산업사회에서 전통적인 사회통합적 구심력이 와해되는 공통적 현상이나 유럽통합의 대과제가 결코 무시되는 것은 아니며 민족적 통합과 유럽통합의 균형이 강조된다.

이처럼 공동체의 구심력을 민족의식의 고양에서 찾을 것인지 혹은 탈민족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의 구심력을 찾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 차원의 논란은 내적 통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통일독일이 피하기 힘든 딜레마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 4주년의 기념사에서 독일연방대통령인 로만 헤르쾅(Roman Herzog)의 다음과 같은 말은 매우 시사적이다. 나는, 고유한 ‘민족적 동질성’, 즉 우리에게 표면상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우리에게

---

36) Mary Fulbrook, *op cit.*, p.232. 이러한 주장은 독일의 진보주의적 지식인 내지 좌파 정치세력에 의해서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37) Karl Jaspers, *Freiheit und Wiedervereinigung. Über Aufgaben deutscher Politik*, (München: Piper Verlag, 1960), p.53.

그토록 긴요한 ‘민족적 동질성’이 과연 무엇인지 나에게 명쾌하게 설명할 만한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다)…”<sup>38)</sup> 물론 내적 통합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민의 관용, 상호이해, 그리고 합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그러나 민족의식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당위성은 실천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질성의 극복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 IV. 문화적 이질성 극복을 위한 접근방법

독일사례는 정치적 통일이 이질성 극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반세기 가까이 상이한 체제하에서 형성된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기란 통일방법과 상관없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독일사례분석의 의미는 단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한반도에 있어서 독일사례분석은 오히려 문화적 이질성의 진면모를 밝히는 데 유용성을 가진다.

현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독일과 같은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독일경험을 토대로 우선 남북한간 문화적 이질성의 배경과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올바른 처방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일 것이다. 그러므로

---

38) Bundespräsidialamt, Ansprache von Bundespräsident Roman Herzog bei einem Festakt aus Anlaß des Tages der Deutschen Einheit in Congress-Centrum Bremen (3. Okt. 1994)

여기서는 일차적으로 접근방법 내지 인식방법이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규명과 이질성 극복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1. 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방법

독일사례는 분단기간동안 진행되었던 문화적 이질화의 진면모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비록 한반도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독일식 통일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있지만, 그러한 실증적 경험은 한반도에서의 문화적 이질화에 대한 인식들을 마련해주는 바탕이 아닐 수 없다.

통일독일에서 내적 통합의 문제를 야기한 문화적 이질성은 분단기간동안 형성되었던 이질적 가치체계 및 생활양식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문화적 이질화를 단지 각 주민들의 체제이념순종적 삶의 양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는 역사성과 보편성을 가지는 문화 고유의 성격과 인류의 문명사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이중성 - 즉 규범적 이상으로서의 문화와 실제 행해지는 문화사이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항상 명백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sup>39)</sup> - 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바이며, 독일사례분석에서 이미 실증되었다.

남북한의 문화적 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문화의 역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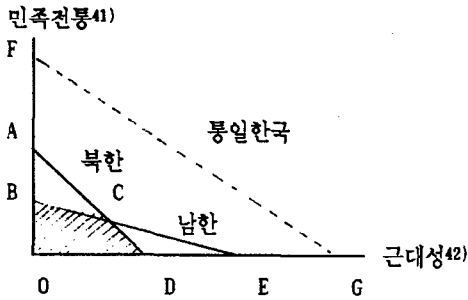
39) Benjamin I. Schwartz, "Culture, Modernity, and Nationalism - Further Reflections", *Daedalus*, Vol.122, no.3 (Summer 1993), p.212.

성, 보편성, 그리고 이중성의 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남북한 문화에는 공히 전통적, 근대적 삶의 양식이 공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분에서 체제의 지도원리 내지 이념이 표방하는 규범적 문화와 실천적 문화사이에 분명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후 탈식민화를 경험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비록 정도와 형태 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근대화과정에서 민족전통과 근대적 문화가 혼재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일종의 문화적 전이(transfer)현상은 남북한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의 문화현실은 각각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와 인민민주주의/사회주의체제의 상이한 근대화 전략<sup>40)</sup>에 따른 결과로서 파악될 수 있다. <그림 1>은 민족전통과 근대성의 상이한 공존상태에 기인하는 이질성이라는 측면에서 남북한의 문화현실에 대한 인식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

40) 사회주의체제를 근대화의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70년대 서구에서 공산권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다.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공산권연구가 방법론적 다양화를 보이기는 했지만, 내용상 근대화의 특성들이 여전히 분석의 중요한 기반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1990년을 전후한 소련 및 동구권의 몰락은 근대화적 접근의 유용성을 확인해주었다.



\*〈그림 1〉은 민족전통과 근대성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문화현실을 일반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사회 각 부분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문화현상은 여기서 도식된 기울기와 다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여기서 예시된 남북한의 기울기가 뒤바뀔 수도 있다.

〈그림 1〉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화\*

△ AOD는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근대화 전략에 의해 이루어진 북한의 문화현실이며, △ BOE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근대화 전략으로 삼은 남한의 문화현실을 의미한다. 위의 두 부분의 겹쳐지지 않는 부분이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겹쳐지는 □ BODC는 남북한간에 동질적 문화의 기반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 BODC의 확장은 분단

41) 여기서 말하는 민족전통은 남북한의 체제가치를 바탕으로 창조 혹은 재해석된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유교적 공동체윤리, 샤머니즘적 종교관 등과 같이 민족구성원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스며들어 있는 전통적 생활양식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한민족 고유의 인성을 결정짓는 틀을 통칭하는 것이다.

42) ‘근대성’이란 단어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개념이며, 포괄적 의미를 가진 범주적 개념이다. 그러나 사회학의 중요한 지적 전통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특징적인 면을 찾아 낼 수 있다. Durkheim, Marx, Weber의 전통에 따르면 근대화는 각각 ‘분화(differentiation)’, ‘상품화(commodification)’, ‘합리화(rationalization)’의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근대성이란 이러한 근대화 과정에 기인하는 개인주의, 사회구조의 분화, 문화적 다원주의, 분업의 발달 및 산업화, 대량생산, 도시화, 매스미디어의 발달, 관료주의, 민족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고도로 일반화된 이념과 가치의 등장 등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Stephen Crook, J. Pakulski & M. Waters, *Postmodernization: Change in Advanced Society* (London: Sage Publications, 1992), pp.3-6. 참조

상황에서 이질성의 극복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 FOG는 통일이 실현될 경우 바람직한 문화현실을 의미한다.

물론 분단이후 이질화과정을 겪어온 남북한의 문화적 현실 자체만을 두고 보면, 이질화된 결과가 인식방법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질성 극복을 위한 실천방향을 염두에 두면 이질성에 대한 인식방법의 차이는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만약 문화적 이질성을 체제이념순종적인 삶의 양식으로 귀결시키는 인식태도를 강조하면, 문화적 동질화를 통한 정치적 통일의 추구라는 목표의 달성은 매우 회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인식태도의 이면에는 체제 중심적 사고, 즉 체제대결 내지 경쟁이라는 입장이 전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통일후유증은 문화적 이질성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 상대체제를 범주화시켜 바라보았던 결과 생성된 상호편견으로 인하여 증폭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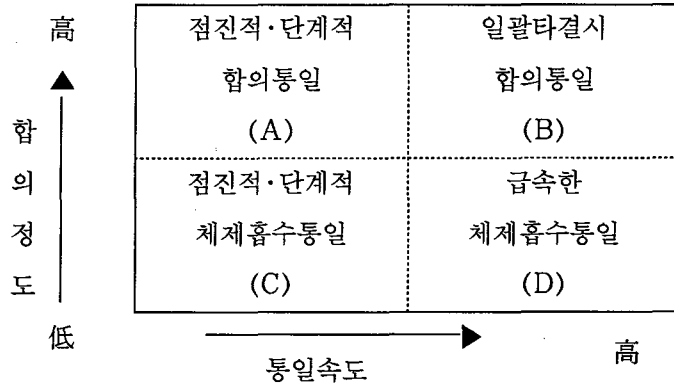
## 2. 문화적 이질성의 극복 방향

이질성의 극복은 단순히 동질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동질성의 창조를 의미한다. 동질성의 회복과 창조는 곧 객관적 역사인식과 긍정적인 미래상의 정립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이질성극복을 위한 방향 모색과정에서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이에 걸맞는 통일문화상은 필수적으로 전제된다. 더 나은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문화규범으로서 통일문화를 상징하고 이를 실현시키려는 노력과 방법의 제시는 우리들의 피할 수 없는 의무일 것이다. <그림 1>에서 통일한국의 문화가 △ AOE가 아닌 △ FOG로 예시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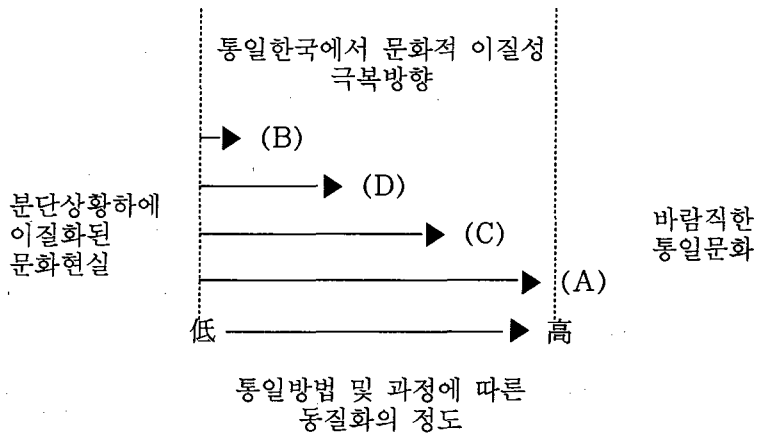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문화를 규범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이는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하다. 사회 및 문화변동의 실태와 분단현실을 감안하면 규범적으로 틀 지워진 통일문화는 자칫하면 현실과 괴리된 이상적 차원에 머물고 말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한 미래상이나 통일문화규범의 창출에 매달리기보다 통일문화를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것으로 보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서 최소한의 규범성조차 배제된다는 것은 아니다. 통일한국의 효율적인 사회통합에 필요한 가치의 추구는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시대정신(Zeitgeist)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문화는 평화, 복지,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과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렇듯 당위성을 떠는 이질성 극복의 지향점에 대하여 한국내에서는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실천 방향은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방법과 과정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며, 다양한 가능성의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림 2>와 <그림 2-1>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통일의 방법과 과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각각 다른 통일한국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며, 바람직한 통일문화를 향한 이질성 극복과정도 달라질 것이다.



〈그림 2〉 통일방법 및 과정에 따른 이질성 극복의 문제<sup>43)</sup>



〈그림 2-1〉 통일방법 및 과정에 따른 이질성 극복 방향과 동질화 정도

43) 〈그림 2〉는 합의의 정도와 통일속도에 따라 생각해볼 수 있는 통일방법상의 극단적인 예이며, 실제상황에서는 아마도 서로 겹쳐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제시된 네 가지 모델을 이질성 극복과정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A)형은 문화적 동질화를 통한 정치적 통일의 실현을 의미한다. (B)형은 예멘식 통일을 연상시키는 것으로서 이질성을 극복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모델이다. (C)형은 남북한 정부의 통일정책기저에 암묵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모델로서 독일통일의 경우보다는 정도가 덜하겠지만, 통일이후 이질성극복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D)형은 독일식 통일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미 앞에서 문제점들이 언급되었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A)형의 통일방법과 과정은 통일후유증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 모델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모델이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남한의 문화현실, 북한의 문화현실, 그리고 양자간을 연결해주는 남북한관계의 세가지 영역에서 통일한국의 미래를 향한 조화로운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상황을 고려하면 그러한 전제조건의 충족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즉 북한의 문화현실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는 의문스러우며, 설령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북한정권이 나 주민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질화된 문화간에 발생할 마찰손실을 최소화하는 통일을 지향할 경우 이질성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는 남한사회의 몫으로 남게 된다. 남북한의 어느 편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질성 극복이 전제된 통일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일방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남한만이라도 내용적으로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걸맞는 문화를 지향한다면, 통일의 방법과 과정에 구애받지 않고 이질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즉 <그림 1>의 선분 BE가 점선 FG로 확장된다는 의미에서 남한사회가 북한의 문화까지도 담을 수 있는 문화적 포용성을 가진다면, 한반도통일이 어떠한 방법과 과정을 겪게 되더라도 북한의 이질적 문화로 인한 내적 통합문제는 최소화될 수 있다.

주어진 한반도 현실상황내에서 이질성 극복을 향한 실천 방향이 남한사회에서부터 출발할 때, 그 여파는 남북한관계에도 미치게 될 것이다. 물론 독일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정권이 변화를 향한 적극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남북한관계가 장차 발전된다고 할지라도

문화적 이질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의 폐쇄성을 감안할 때, 인적·문화적 교류는 최소한의 상호이해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남북한교류의 확대, 발전을 독일의 경우에 비추어 북한정권의 내적 붕괴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선부른 전략은 금물이다. 이는 북한정권이 남북한관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로서 남북한관계의 발전가능성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결과적으로는 의도대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내독관계에 대한 서독의 기본태도는 남북한관계에 대한 남한의 정책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즉 남북한 관계발전의 기본목표는 예측할 수 없는 통일의 그날까지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며, 북한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북한내부 환경의 조성에 두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문화적 이질성 극복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통일문제를 논의하는 자체가 이미 중·장기적 시각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와 실행가능한 부분에서부터의 점진적 실천이다. 즉 현재 북한정권이나 북한사회의 변화가 남한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독일의 통일후유증과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문화적 이질성 극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태도는 인내심과 굳건한 실천의지를 갖는 것이다. 그 바탕 위에 과연 한국사회의 문화현실이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미래에 걸맞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한반도정책이 남북한관계의 확대·발전을 위해 효율성을 갖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터 출발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급선무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Ⅱ. 綜 合 討 論

빈 면

## 綜 合 討 論

### 〈 토 론 〉

- 사회자: 유재천 (서강대 교수)
- 토론자: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백경남 (동국대 교수)  
윤경태 (통일연수원 교수)  
임희섭 (고려대 교수)

유재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계신 네 분 선생님께서 한 10분씩 토론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발표하신 세 분께서 응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께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전 발표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남북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정책방안, 그리고 그 실천적인 프로그램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풍부하게 서로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론하러 나온 선생님들께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말씀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까닭에 토론을 해주실 분들에게서는 한 10분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의 순서는 없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의 김호기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우선 세 분 선생님의 귀중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사회학에서도 통일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특히 통합이라는 시각에서 이제까지 통일문제를 다루어왔던 정치경제적 시각과는 다른 사회문화적 시각에서 통일문제를 접근하신 세 분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시간관계상 대략 다섯 가지정도 문제를 제기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사회학의 시각에서 말씀드리자면 사회학의 주제중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의 하나가 다름아닌 한 사회의 질서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좀 추상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학에서는 이러한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두 가지 수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가 체계통합, 그리고 다른 하나가 사회통합입니다. 체계통합이 정치경제적 통합이라고 한다면 소위 사회통합은 사회문화적 통합, 즉 오늘 세 분 선생님께서 다루어주신 공통의 정체성(Identity)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오늘 세 분 선생님의 발표는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유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제가 세 분 선생님들 발표에 사실 비판할 정도로 통일문제를 깊이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고 생각되는 점들, 네 가지 정도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체계통합과 사회통합이 구분되어질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정

치경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체계통합과 사회문화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통합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문화를 달성해 내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통일을 경험한 국가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독일이나 베트남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볼 때 사실 사회문화적 통합이라는 것이 개별 국가가 놓여져 있는 조건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해당국가의 국가형성의 단계 및 수준이라든지, 분단상황, 혹은 통합과정, 혹은 통일이후의 상황,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경제적 조건이기는 하지만 사회문화적 통합이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사회문화적 통합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여타의 정치경제적 통합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문화문제를 다룰 때, 특히 통일문화를 다룰 때 상당히 이률배반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통일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공통으로 지향해야 될 신념, 가치체계, 행동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문화의 또다른 본질이 공통으로 지향해야 할 다분히 규범적인 부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공간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가치체계나 행동양식을 문화라고 할 때 이 문화가 정치나 경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다양성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다양성들이 규제되면 그 문화의 생명력이 상실됩니다. 남북한 양국에 있어서 이제까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가 남북한의 양국이 장기간의 대치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분히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사실 양쪽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는 자본주의적인 권위주의 문화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적인 권위주의 문화인데 권위주의적인 문화의 속성에서 보면 대단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지나치게 문화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규제가 크기 때문에 그 문화의 생명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규범적 차원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문화라고 하는 것은 남북간의 문화적인 이질성을 극복하고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될 그 무엇인데,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적인, 일반적인 속성과 통일문화가 갖추어야 할 가치판단적이고 규범적인 성격,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긴장관계를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規範的인 수준에서 통일문화를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남북한 문화의 이질적인 차별성에만 주목한 나머지 개별문화, 즉 개별국가내에 존재하는 세대, 직업, 교육수준에 따른 문화적 차이가 상대적으로 간과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사회만 대상으로 놓고 볼 때 한국사회에도 현재 관찰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화적인 변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대에 따른 문화적 차이가 대단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신세대'니 하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을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근대사회가 지향하는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에서 탈물질적 가치, 경제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가 훨씬 더 강조되는 이러한 탈물질적 가치로 이동하는 즉, 산업사회가 後期 産業社會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서 문화적 가치까지도 변화하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변동과정에 우리 사회가 놓여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 세대와 장년 세대 사이에 대단히 커다란 문화적 격차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두 국가사이의 문화적 이질성 못지않게 한 국가내에서 관찰되고 있는 문화적 차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일문화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미래의 문화상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개별국가내에서 관찰될 수 이러한 차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통일문화와 세계화(Globalization)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일문화를 형성해나간다고 할 때 남북한 사이의 이질적인 문화적 차이 못지않게 남북한 외부에 존재하는 대단히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남한사회가 주도해서 통일을 달성했을 경우 북한주민이 겪게 될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는 이중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남한사회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이고, 두번째는 세계화에 따른 통일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보편적인 서구문화가 확산되면서 비서구국가들에게 여러가지 문화적 충격을 주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구문화가 그대로 이식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인 문화적 정체성이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이란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여기에 대항해서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화적 전지구화, 문화적 세계화가 현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문화를 구성해내는데 있어서 세계화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윤덕희 선생님은 주로 이론적인 논의를 다루어주셨고, 이현경 선생님은 우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어주셨으며, 김학성 선생님은 독일의 사례를 다루어주셨는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통일문제에 있어서 정치경제적인 문제들은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문화적인 통일문제는 대단히 적게 다루어졌는데 오늘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 분 선생님의 귀중한 발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예,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한 10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고려대학교의 임희섭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임희섭: 저는 이현경 박사님의 발표를 중심으로 논평(Comment)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즈음 조금 바빠서 다른 두 분의 발표는 미리 읽지는 못하고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세 분의 논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통일문화 분야에서 이 정도의 깊이있는 논의는 처음이 아니었는가 하는 점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현경 박사님의 논문을 읽은 소

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사소한 것으로부터 해서 꼭 비판이라기보다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적인 수준에서 제가 느낀 것은 문화교류, 문화접변, 문화갈등, 문화통합 등 社會學的 概念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들을 조금 과용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구분을 할 때 첫번째와 두번째 시기를 이야기하시면서 두번째 시기는 문화갈등 고착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별다른 문화교류도 없이 별개의 독립적인 문화체계로 존재하면서 체제경쟁을 벌여왔던 그런 상황에서 두 문화가 갈등을 이룰만큼 접촉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첫번째, 두번째의 시기를 합해서 이질화의 시기로 보고, 세번째, 네번째의 시기를 합해서 제한된 교류가 시작되는 시기로 보시는 것이 읽는 사람들에게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기별로 문화교류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읽으면서 문화갈등 고착기라는 제목에 자꾸 마음이 걸려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번째로 제가 느낀 것은 이현경 박사님이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가지고 계신 틀이 문화교류에서 시작해서 문화접변(文化接變)을 거치면서 문화통합으로 가는 이러한 과정을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러한 개념적인 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과정이 통일전과 통일후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통일전의 경우에 한국과 북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아주 제한적인 문화교류 수준에서 지금까지 더이상 나가지 못하였고 문화접변의 단계에까지는 지금까지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그렇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일에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든 통일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독립된 문화체계로서의 상호교류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곧바로 문화접변으로 들어가서 인적, 문화적 교류 등 광범위한 접촉을 통해서 광범위한 문화접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화통합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여러가지 문화교류·협력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여섯 가지로 지적하셨는데 그 문제점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읽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문화가 많이 이질화된 것이 문제라는 첫번째의 것을 제외하고는 두번째부터 여섯번째까지의 문제점들은 기본적으로 체제의 문제가 아닌가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이쪽 체제와 저쪽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체제의 차이에서 문화정책이나 문화관이나 문화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념 등의 차이가 온 것이지 근본적으로 양쪽 문화자체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이런 장애요인들이 대부분 체제, 특히 정치체제에서 오는 것이라면 정치체제의 차이가 어떤 형태로든 극복될 수 있다면 문화이질성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발표에서 독일의 경우에 대해서 상세히 들었습니다만 그 경우에 여러가지 문화이질성의 문제와 사회심리적 갈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계몽을 받았습시다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같은 민족이고 오히려 독일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민족의 동질성과 전통문화의 동질성이 더 강한 측면도 있다고 볼 때는 정치체제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문

화동질성 회복과 통일문화 달성, 또는 문화통합을 달성하는데 적지 않은 가능성이 우리앞에 있지 않느냐하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북한측의 문제점들이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남한쪽에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고 여러 군데에서 지적하셨는데 읽는 사이에 하여간 북한쪽 체제의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동질성 회복과 창출을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북한이 더 많이 변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쪽도 많이 변해야 되겠지만, 저쪽이 많이 변화되어야 하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유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북한을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북한의 변화를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해본 것은, 이현경 박사의 논문에서는 논문주제 자체가 문제점, 장애요인을 부각시키는데 있었기 때문에 문화동질성 창출의 측면에서는 별로 많이 이야기하시지 않았는데 저 나름대로 생각해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북한과 남한사이에 문화적인 동질성의 요소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봤는데 적어도 세 가지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동일민족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같은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남한이나 북한이나 결국 지구촌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체제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인 가치의 수준에서 공통점을 찾아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단계에서 문화동질성 창출 전략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이 없습니다만 발표하신 내용 가운데, 특히 제3국에서 연변이나 미국, 일본같은 곳에서 교포들과 함께 공동 문화행사를 하는 것 등이 민족차원에서의 동질성회복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통문화는 양쪽이 다 많이 변질되었습니다만 마지막 발표하신 선생님께서도 그런 논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많이 변질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국민들의 일상생활, 즉 기층문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많은 전통적인 요소가 양쪽에 다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보편문화의 수준에서 공통점을 우리가 많이 발견을 해서 북한을 어떻게 그 보편문화속으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앞으로 통일문화의 창출을 위해서는 북한을 보편문화로 끌어들이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윤덕희 박사님의 발표에서 양쪽 다 문화구조를 개조해야 한다는 주장 가운데 市民文化의 활성화라든지, 힘의 문화를 극복해야 된다는지, 인간화를 추구해야 된다는지 등등의 여러가지 보편문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서로 다른 체제이면서도 서로 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또 북한에게도 필요하고 앞으로 추구해 나가도록 유도할 수 있는 보편가치의 영역들을 많이 발견해서 그런 점에서 교류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쪽이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북한측이 변화한다면 무엇을 변화시키는 것이 문화동질성 회복에 중요한 것

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북한의 체제가 바뀌면 가장 쉽게 문화동질성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할 때 보편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북한이 최소한도 개방화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남한쪽에서는 우리의 안보가 위협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북한과의 문화교류와 협력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우리측의 변화가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동국대학교의 백경남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백경남: 문화가 통일을 완성시키고 통일의 실효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때는 정치적인 통일보다도 문화통일이 어찌면 더 중요하지 않은가하는 감도 느꼈습니다. 앞에서 토론하신 선생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세 논문이 나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논문을 발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개별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논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통일방안을 전제로 해서 어떤 단계에서 문화교류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측면에서 통일문화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하는가하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서 이 세 논문이 나왔으면 서로 논문이 어우러져서 짜임새있는 완벽에 가까운 체계가 되지 않았겠는가하는 그러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학성 박사님의 논문에서는 통일방안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때 아주 뚜렷하게 점진적이고 단계적 합



의 통일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통일의 개념도 어느정도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독일통일 사례를 주요 토론의 대상으로 맡았는데 나머지 분들의 발표에 대해서도 짧게 논평하겠습니다.

윤덕희 박사님의 통일문화의 개념인데 본인의 지적대로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성격을 띠지 않았나 또한 지금까지 사실은 통일문화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일문화 형성에 있어서 남한의 包容力을 제시했는데 아주 돋보이는 면입니다. 남한의 포용력과 관련해서 이현경 박사님의 논문에서는 우리의 포용력이 적게 부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어떠한 단계에서의 통일문화이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가하는 것이 나왔다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일문화의 전반적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그것도 당위적인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겠지만 두 문화를 통합해서 서로 닮아가는 적응가능한 문화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적인 문화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우리의 전통문화도 변한 상황에서 그 출발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제기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17에 의하면 북한에서 가치체계의 변화 조짐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그러면 가치체계의 변화 조짐이 우리의 통일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의 조짐인가 아닌가하는 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현경 박

사님의 발표에서 시기 구분을 하셨는데 돋보인다는 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임희섭 교수님 지적대로 시기를 통합하셨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의 이질화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공통적으로 남아있는 문화의 요소를 극대화시켜서 이를 기반으로 서로 닮아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로 북한문제만 많이 지적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상업주의적이고 무제한적인 소비문화, 퇴폐적인 문화 그 자체가 우리 내부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도 우리문화의 보편성이 북한보다 더 많기 때문에 포용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문화의 普遍性, 包容性으로부터 우리민족의 文化能力을 극대화해서 정치전략적인 측면의 결여를 보완한다면 분단극복에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하는 부분이 제시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p.17의 남북문화의 교류는 우리가 자신이 있고 포용력을 과시해야 되고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뛰어난 문화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문화능력에 기반하여 좀더 자유롭게 문화교류를 허용해도 좋지 않나하는 의견이 우리사회에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김학성 박사님의 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독일통일과 관련한 부분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독일통일이 어떤 후유증과 어려움을 겪어왔는가 하는 점을 이렇게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고찰한 경우는 드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의 과정에서 후유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더 멋진 통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험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단점을 없애고 장점을 부각시켜서 단계적으로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은 많은 독일사람들도 부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이 논문의 의의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 박사님의 발표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합의통일의 방법, 즉 (A)의 방법에서 논문을 전개해 간 것 같고, 그리고 (A)의 방법을 통일의 후유증을 피할 수 있는 이상적이고 과학적인 모델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또한 통합을 볼 때 각자의 이미지와 상대방의 이미지가 서로 일치할 때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文化統合이라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이라서 세 분 박사님이 논문을 쓰시는데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김학성 박사님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질화의 정도와 어려움을 논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독의 경우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東獨은 나찌즘의 청산없이 그 위에 스탈린주의가 덮어씌워져서 그러한 이질화가 나타났고, 서독의 경우는 나찌즘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국민정치교육을 통해서 이미 민주주의를 정착한 상황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적, 탈민족주의적인 문화양태가 나타났고, 그러므로 두 가지 극단적인 인간의 행위양식이 어우러질 수 없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동독은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사회주의로 대치해서 말살했고, 서독의 경우는 국민들에게 초국가적인 공동체의식을 교육을 시켜서 국적정체불명의 국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겠는가? 결국에 민족주의가 없는 통일이 되어 양측의 동포들이 동포

의 운명에 무관심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통일은 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통일, 즉 문화적인 통일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을 이루는데 30년 이상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통일을 했다하더라도 동독시민들은 “서독 너희가 우리를 흡수통일했으니까 먹여살려라,” 서독시민들은 “동독 시민, 당신네들이 통일하자고 했지, 우리가 언제 통일하자고 했느냐? 당신들은 일은 안하고 돈만 달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독시민들은 높은 임금을 기대하고 있는데 두 가지 상이한 이미지 즉 가치체계는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족주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성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족주의가 있었으면 통일이 안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나타난 문제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민족주의가 통일문화에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인가? 우리도 사실 그동안 민족주의 문제를 등한시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독일의 경우처럼 민족주의가 등한시될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등한시된 것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통일문화를 형성하는데 이 민족주의가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점이 앞으로 깊이있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통일이 두번째인데 1872년의 비스마르크에 의한 통일을 보면 그 당시에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민족주의 그 자체를 위해서 수십개의 연방국가로 분열되었던 독일이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전쟁을 하여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등의 이데올로기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스마르크가 세상에 나와있는 그 많은 主義를

민족통일이라는 큰 용광로에 합쳐서 통일을 이룩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사적인 경험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민족주의를 다루어가면서 통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통일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민족주의가 가운데로 나와야 통일문화가 형성될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논의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재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윤경태 교수님께서 토론힬주시겠습니까.

윤경태: 이러한 연구는 오늘로서 그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 공부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러한 연구가 처음 제기된 시점과 배경을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방식, 특히 정부가 정한 통일방식과 통일문화의 형성과의 關係를 먼저 말씀드리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통일문제를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통일원이 발족한 후부터입니다. 통일원이 발족한 이래 구호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통일을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크게 보면 통일문제, 조금 나누면 북한문제까지 포함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연구를 하는데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다음의 것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통일이 되었을 때 이 민족사회를 하나의 민족사회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남북한간에는 정치, 이념, 제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한 남북한간의 이질화가 아닌  
 가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를 두고 정치적 통일을 하였다고  
 하여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외형적  
 인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내면적인 통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고 볼 수 있겠는가? 오히려 외형적 통일보다는 내면적 통일에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독일통일의 교  
 훈을 보고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통일문제를 연구하면  
 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한간에  
 어느 정도 이질화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을 이미 77년부터 구체  
 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77년 10월에 있  
 었던 남북한 이질화 학술회의입니다. 이것은 월남하신 분들을 대상  
 으로 이질화 현상을 조사한 것입니다. 북한의 음악, 영화, 연극 등  
 을 집중적으로 연구해보았습시다만 이러한 연구를 하는 가운데 우  
 리가 이질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동질화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습  
 니다.

정치적 통일은 좀 미루어 두더라도 우선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동  
 질화 시키는 민족통일을 선결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런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 건설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두개의 정치체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  
 더라도 하나의 민족생활권을 형성 발전시키나 하는 과제가 아닌가  
 보아진다. 이런점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통일문화 공동체를 논의한  
 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현재의 통일방안을 어떻게 하  
 면 좀더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보  
 아진다. 그런 점에서 논문을 보고 느낀 점은 과연 통일문화라는 개

념이 우리가 협의해서 이야기하는 문화인가. 그렇지 않으면 통일문화가 정치적 측면을 뺀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어떤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우선 우리가 민족적 통일을 위해서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매개체로서 작용하는 것이 통일문화라면 이 통일문화를 통일문화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 측면을 빼놓더라도 경제·사회·문화, 이런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우리의 생활방식·가치관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통일문화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인상을 받았다.

예를 들어 윤덕희박사의 발표논문 2page를 보면 ‘관련분야’라는 용어를 썼을때 광의의 문화 용어인지 협의의 용어인지 알 수 없었던 점이 있었다. 또한 31page를 보면 남북한 문화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원적인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합리주의, 인간주의 문화의식 등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북한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인가. 또 우리 사회를 두고 하는것인지, 제목을 보면 북한도 함께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통일방식이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통일이라면 이 ‘공동체’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설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6page에 보면 민족공동체의 개념을 민족국가와 동일시하는 점을 제가 발견했는데 민족국가와 민족공동체는 다르다고 보아진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때, 삼국시대를 백제·신라·고구려로 나눌때 그것은 각각의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시점에서 삼국시대를 각각의 나라로 보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민족공동체 의식을 갖고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다시 말해 외형상 국가는 따로 형성되어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민족공동체 의식이 흘러 있었다. 민족공동체는 내면적인 것이고 국가는 외형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이헌경박사께서 많은 논문을 쓰셨는데 남·북문화교류의 장애요소로서 여섯가지를 제기했다. 37page에 보면 남북 문화교류의 장애를 해소하려면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들었다. 우리가 정치적 공동체를 이루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것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우선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민족공동체를 형성해가자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정치적 공동체로 되어야한다는 것은 앞서의 이야기와 모순이 된다고 느꼈다. 그리고 추가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결국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나중에 통일이전이든, 통일이후든 문제가 제기 되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의 歷史觀이 아닌가 한다. 우리가 민족사관 입장에서 역사를 본다면 북한은 유물사관에서 역사를 봐왔고 또 오늘 북한의 시점에서 보면, 김일성의 혁명사상, 혁명전통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봐진다.

제가 최근에 별목공으로 있다가 귀순한 여섯사람을 몇번 접촉한 적이 있다. 그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느낀점은 이미 그사람들이 여기에 올때는 대한민국의 자유사회가 좋아서 별목장을 탈피했지만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낀 첫째는 정신적으로 혁명 역사관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령 예를 들어 그들에게 우리 삼일운동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그사람들은 “삼일운동, 그것은 김일성



의 아버지 김영주가 국민을 조직해서 한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역사다. 우리 3·1운동은 삼십삼인이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런것이 어디있나, 그책을 좀 보자” 이런식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완전히 일방적으로 김일성 혁명 전통에, 혁명사상에 젖은 이사람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교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보아진다.

유재천: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분 선생님들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은 아마도 주제발표 내용을 보완하는 좋은 의견의 제시가 있었다고 여긴다. 세분 발표자에게 골고루 질문도 있었고 논평도 있었다. 제가 정리한 바로는 김호기 교수께서는 주로 윤덕희 박사에게 대해 질문하신게 아닌가 생각한다. 김호기교수의 질문에 대해서는 윤박사께서 집중적으로 해답을 해주시고 다른 두분 선생님께서도 해결점이 있으시면 같이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임희섭교수께서는 집중적으로 이현경 박사의 논문에 관해서 답변하면 되겠고, 백경남교수께서는 윤덕희박사에게도 질문이 있었고, 이현경박사, 김학성 위원께도 골고루 한가지씩 질문이 있었다.

윤덕희박사에게 북한의 가치체제 변화 조짐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시고 그것이 통일문화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줄것인가의 질문을 한 것 같고, 이현경박사에게 남한의 자신감과 관련해 문화개념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 했었고, 김학성박사에게 민족주의 문제를 제기했으니 각각 답변을 해주시고, 윤경태위원장께서는 윤덕희박사께 질문이 세가지 정도 있는것 같다. 통일문화의 개념 문제,

다원주의, 시민사회 등이 북한에 적용가능한가, 그리고 공동체 개념 정의가 조금 애매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이헌경박사께서는 남북교류 장애극복을 위해 정치적 타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해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던것 같은데, 세분이 각각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한다.

먼저 윤덕희박사부터 시작하시죠.

**윤덕희:** 우선 김호기교수께서 네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은 세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시하는것 같다. 첫째, 체계통합과 사회통합간의 관계 설정, 그것도 전체적인 구도의 문제이고 두번째, 통일 문화와 문화의 본질인 문화의 다양성과의 관계문제, 세번째는 통일 문화가 지향해야되는 이념이 민족주의나 세계화나, 그리고 그것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하는 질문인것 같다.

체계통합과 사회통합간의 관계설정문제는 사실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정치통합문제, 경제통합문제 그리고 저희 팀에서의 연구가 일단락 지어져서 세가지 연구가 나오게 되면 보다 체계통합과 사회통합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리라 생각한다.

두번째,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인데, 사실 남북한 문화에 대한 비교 분석적 측면에 중점을 둔것도 사실이다. 이는 규범적인 측면을 제거하고 현실적인 객관적 인식을 통해서 남북한이 문화통합을 통해 어느 한쪽도 소외되지 않을뿐 만 아니라 각 사회내에서의 어떤 계층도 되도록이면 완전히 소외되지 않는다는 데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였다. 일반적으로 두개의 사회통합과정에서 문화적 흡수, 문화적 통합현상이 일어나면서 문화적 획일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제

거하기 위해 통일문화라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통일문화를 통해 문화적 포용성, 다양성에 대한 인정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사회통합에서 흡수, 문화적 동화, 문화적 획일화를 지양하는 것이 통일문화의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세번째, 세대에 따른 문화적 격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보다 구체적 정책방안 연구에 있어서 좋은 연구과제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통일문화와 세계화의 문제는 통일이나 분열등의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겪는 지역에서는 바로 이런 민족주의화와 세계화가 충돌하는 현상을 많이 보고 있다. 동구라파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과연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내적인 통합을 이뤄야 하느냐, 아니면 세계화, 지역 공동체라든지, 보다 넓은 탈민족주의를 통해서 민족의 발전을 기해야 하느냐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저희 통일문화도 이러한 민족주의와 세계화의 문제를 좀더 깊이 설정함으로써 민족주의를 통한 내적인 통합과 세계화를 통한 민족의 발전이 조화롭게 되도록 고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임희섭 교수의 말중 특히 남북한 통일문화가 나가야할 방향은 북한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한 문화적 특수성을 완화하고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북한이 나아간다면 통일문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말을 했는데, 매우 공감한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백경남 교수가 질문한 북한의 가치체계의 변화조짐이 통일문화 형성에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조짐은 귀순자들의 인터뷰나, 소설, 영화등을 통해 예시가 되고 있다. 특히 젊은세대의 관료, 인텔리 계층에서 실용주의적이고, 물질추구적이고, 산업화로 인한 문

화현상이 북한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많이 나와 있다. 물론 산업화 문화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확일성을 완화해 간다는 측면에서 통일 문화 형성에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윤경태교수의 꼼꼼한 지적에 감사드린다. 문화개념을 말씀하셨는데 통일문화에서의 문화개념을 제가 4page에서 간단하게 정의해 봤다. 사회과학에서 흔히 쓰는 총체적 관점에서의 문화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윤교수께서 말한 포괄적 의미의 문화개념과 제가 제시한 문화개념이 상당히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은 시민사회로의 남북한 문화가 개조화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북한에서 가능한 것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에서 통일문화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다같이 변화하는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지금 통일문화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은 대북정책의 차원이라기 보다는 남한의 자기 변화, 남한의 통일대비 차원에서 자기 개혁적인 관점을 제기한다고 했다. 바로 그런점에서 시민사회로의 개조와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공동체 개념도 제가 5page에서 민족공동체와 민족국가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의하였다. 민족공동체란 단순한 민족국가가 아니라 그안에 민족의식에 대한 일치가 있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정치에 대한 공감대적 가치관이 형성될때 민족공동체가 가능하다고 했다. 따라서 단순한 민족국가가 아니라 윤교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적 의식, 즉 민족의식과 현실지향에 대한 공감대적 가치관 두가지를 포함하는 공동체의식을 가질때 갖는 민족국가가 민족공동체라고 제가 정의했기 때문에 윤교수께서 말씀하신 의견과 제생각이 상당히 일치한다고 봅니다.

이현경: 오늘 참석하신 토론자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통일문화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임희섭교수께 감사드린다. 주로 세계 지적된 상황은 용어 및 시기 구분의 문제다. 그리고 다른 토론자가 언급해 준것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하겠다. 우선 체제문제와 관련해서 김호기교수께서 우리의 identity를 위해 우리의 정치·경제적 통합과 사회통합을 이야기해 주었고, 임희섭교수께서는 문화적 통합은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는데 저는 이점에 있어서 조금은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 정치통합이 민족통합을 저절로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것은 독일과 예멘의 통일의 경우로부터 잘 얻어질수가 있는데, 독일의 경우는 우리 남북한 경우와 비교해 볼때 동질성 정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적 통합을 이룩했을때 상당한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해 소외됐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는 지금도 민족 통합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것이며, 예멘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가정의 절차도 없이 정치적 합의에 의해 통일을 했다. 그래서 민족통합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분단의 차원에 지금 놓여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정치적 통합을 이룩했다 하더라도 다시 분단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했기 때문에 민족통합이라는 것은 정치통합 이후에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밝히고 싶다. 그리고 시기구분에 있어서는 임교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했다. 제1기와 2

기, 문화이질화 시작기와 문화활동 고착기를 구분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간까지는, 1987년 까지는 문화교류가 없었다. 이 기간에 문화이질화가 진행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두개를 합쳐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제가 이걸 구분한 이유는 문화교류차원에서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제1기는 주로 북한이 주도적으로 문화교류를 제의한 시기를 의미한다. 이 시기는 주로 박정희정부의 정통성 문제라든지 국력의 차이로 남한이 문화교류에 있어서 열세에 놓여 있었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자신들의 정권에 대한 자신감, 국력에 대한 우세함으로 상당한 다발성 제의를 한 것이다. 그래서 제1기로 구분하였고 그 다음 제가 문화활동 고착기로 갈라놓은 것은 1972년을 기준으로 국력의 차가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의 先경제성장정책이 효과를 발휘를 했기 때문에 문화교류의 차원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걸 두단계로 구분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구태여 두단계로 구분했던 것은 우리가 용어의 차이로서 발생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문화·통일문화·통합·통일 그리고 문화갈등·접변등 여러가지 용어가 있는데, 우리 인문과학 계통에서 용어를 정의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뚜렷한 정의가 없는데 각자 총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제가 내릴수 있는 정의도 어떤 복잡성을 띠고 있지만 문화갈등이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복수의 문화유형이 각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긴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접변이라는 것은 두개 이상의 독자적인 문화체계가 결합되면서 일어나는 문화 변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남북한의 문화상황을 살펴볼때 1945년 남북분단 당시 북한은 공산주의문화, 남한은 자유주의문화를 받아들였지만 실질적으로 문화동질성은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1950년대와서 북한이 말다듬기 운동이나 언어정화작업과 보급을 주로 한 문화운동을 시작으로 상당한 문화이질화를 가져왔다. 이것의 여파로 언론·문학·예술 여러 분야에 퍼져나감에 따라 모든 분야의 이질화가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제가 판단하기에 문화적 갈등이 촉발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기서 용어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는게 문화통합, 문화통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문화란 개념과 통합이란 개념, 통일개념을 구분할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 통합과 통일에 있어서 통합을 연구하는 정치학자에 있어서도 통합과 통일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은 통합이란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통일이란 이미 통합의 상태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그래서 문화통합이라 하는 것은 통일이 만들어내는 상황이고, 통일 이후에도 계속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문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 두 문화가 결합해서 하나의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민족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문화통합을 이룩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윤경태교수와 임희섭교수께서 말씀하신 문화동질성 창출이 되어야하지 않느냐 했는데, 제 논문은 어떤 문화동질성을 창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어떤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있다. 굳이 여기에 대해 언급하자면 우리는 남북문화교류 현황에 대해서

문화동질성 회복이라기 보다는 창출이라는 의미를 쓰는데, 회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분단이전의 문화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남북한에는 문화이질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창출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 방안으로써 제3국에서의 우회적 접근이라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백경남교수가 말씀해주신 것과 연결해서 말하겠다. 백경남교수께서는 상당히 제가 발표한 사항에 대해 정치적 방안, 폭력적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우리가 남북 문화교류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너무 낙관적이고 희망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제가 제시한 여섯가지 문제점으로인해 남북한이 문화교류를 원활히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질화가 되어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류 진행에 있어서 정치적 목적이 가미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문화교류를 한다고 할때, 우리가 순수한 의미, 즉 예를 들어 민족공동체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문화교류를 실시한다고 하나 북한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실시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문화교류를 원하지 않는다. 남북한간의 경제적 접촉을 하고는 있지만 경제란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쓰여지고 인력의 이동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발전과 경제를 윤택하게 하기위해 경제교류를



성취할 수 있지만, 문화교류란 인력이 필요하므로 북한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동안의 문화교류를 살펴보면 주로 직접교류의 남북예술 교류를 생각할 수 있다. 서울, 평양, 제3국에서 진행됐다. 이 과정을 지켜볼때 상당히 비판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의 전통문화는 서로가 주장하면서도 한국에서는 전통예술에 궁중예술, 종교 예술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는 유물론적 계급적 시각에서 보기때문에 전통적 관념에서도 접근하기 힘들것이며 또한 이 과정에 있어 과거에 체육인이 망명해서 체육교류가 중단된적이 있다. 문화교류에 있어서도 어떤 불상사로 인해 문화교류가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족공동체 창출에 있어서 서로 포용력을 가져야 문화국가이론을 성취시키는데 있어서 순조롭게 이를 수 있다고 본다.

**김학성:** 시간이 없고 저에게 던져진 질문이 적은면이 약간은 섭섭하기도 하지만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주어진 질문은 백경남교수께서 하신 질문밖에 없지만 그전에 김호기교수가 던진 질문이 저희 모두에게 한 포괄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답변하겠다. 김호기교수가 지적한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고민했다. 제글에 밝혀진 그림들 세개가 부분적으로나마 김호기교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나 생각한다.

김호기교수가 처음 던진 말이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체계통합과 사회통합을 구분해서 봤는데 체계이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스트모던 논쟁이나, 탈코트 파슨즈의 체계

이론을 보면 문화란 것이 항상 매개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문화라는 것은 체계자체에서 이미 그 가운데 만져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화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느정도 관계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되고 있지 않는가 싶다.

그리고 백경남교수가 질문한 부분을 이야기하겠다. 백경남교수가 제가 발표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완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여기서 a형의 모델, 점진적 단계적 합의통일을 이상형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제가 이 이론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한 게 아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 방법과는 상관없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통일문화형성을 위한 문화적 이질성 극복을 위한 방향은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제가 그림 1에서 보듯이 고차원적인 통일문화를 생각해 본 것이다. 물론 이상형이긴 하지만 저는 그 한계도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백경남교수가 민족주의 역할에 대해 지적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 민족주의에 대해 제가 잘 아는 바는 없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독일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역할을 했다.

만약 민족주의가 통일이전에 서독에서 되살아 났다면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보권을 가지고 있던 주변 4강이 통일을 반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2+4조약'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결과 통일 후유증이라는 것, 민족적 유대감이나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는 딜레마를 낳게 된 것이다. 그런데 독일의 과거 민족국가, 과거 비스마르크 통일이후의 정치적 민족주의 자체가 나치즘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본다면, 민족주의가 세계사에 미친 영향은 민족주의 그 자체가 미친 영향이 아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민족주의는 껍데기 뿐이고, 외형적으로 민족주의지만 속알맹이는 다른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다. 나치즘이 그렇지 않습니까? 속알맹이에는 단체주의가 들어가 있고, 밖은 민족주의로 싸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혹자는 한국적 민족주의라 이야기하고 탈식민화를 위한 저항민족주의라고 한다. 물론 저도 민족전통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지만, 민족주의, 민족개념이 중요하기도 하다.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때 항상 민족통일이라는 말을 항상 붙인다. 최근에 제가 느낀 바로는 민족주의가 현재 한국에서는 어느 수준에 있는가, 모든 사람이 민족이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회의를 느낀적이 있다. 한·중관계 개선이후 중국 교포들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민족간의 상봉에 대해 기뻐하고 환영했다. 하지만 일년도 못가서 사회문제가 되었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독일 통일 원년에는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 서독에서도 환호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거리가 되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민족이라는 것은 말로만이 아닌 개개인이 느끼는 민족정체성, 민족공동체 의식이라든가 하는것이 어느정도 있는가 하는 측면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찾아보아야 한다. 당위적으로 민족통일을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그 당위와 실체가 일치하고 있는 것인가? 그점에서 윤경태교수가 민족국가와 민족공동체를 구분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에 저는 제3의 개념을 던지고 싶다. 과연 국가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남한에서 무엇인가? 이상이다.

사회자: 네. 토론에 대한 세분 발표자에 답변이 있었다. 사실은 원탁토론회 같으면 발표자와 토론자 사이에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어서 나중에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자리는 원탁토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표자, 토론자사이에 의견교환이 허용되기 힘든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토론자들이 가지는 이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주면 고맙겠다.

아마 안계신것 같다. 이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다. 저희들이 토론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말씀하실 분들은 어디에 계신 누구인가 신분을 말씀해주시고, 토론하다 보면 긴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약해서 3분이내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평통사무처 근무자: 아까 사회자께서도 토론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통일문화의 지역특화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써서 이것을 실제 실천해 보고 있다. 제가 평통에서 강원도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강원도지역에는 평통위원이 약 500명정도 있다. 이 500명이 박정희대통령시대부터 정권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일해 왔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사람들에게 무슨일을 시켜야 할까 고민한 끝에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현학적면을 떠나서 실제 통일문화를 어떻게 창조해 나갈것인가하는 것을 연구 해봤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원도 지역의 통일문화를 특화하는 예를 들어

보면, 태백시에서는 매년 10월 3일날 태백산 천제를 지내는데 그 목적은 앞으로 통일한국의 기본인성을 어디서 찾을것인가, 이런 점에 착안해서 개국신화에 포함된 한국적 신인간주의 이것에 대해 자세히 사상적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서 북한의 선민문화적인 문화요 남한의 좋게 말해서 시민문화적인 상황을 종합해가는 이러한 통일문화 그래서 태백산 천제를 지내는데 여기에는 기독교인, 불교인들, 신부도 위원이 되서 천제를 지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이 되면 또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태백산 천제의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들이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지금 실천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정선에서 하고 있는 것은 통일문화 백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시·군만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북쪽 강원도 사람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폭을 열어놓고 지금 2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평화통일 지향의 한시(漢詩),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 참여해서 보통 한번에 150명씩 참여하고, 그 가족분들이 수행해주셔서 통일문화를 실제 창조·실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철원군 같은 곳은 철원군과 휴전선을 인접한 북강원도에 군이 세군데가 있다. 북강원도의 철원군, 김화군, 평강군이 있는데, 삼통시대(통행·통신·통상시대)가 오면 지금까지 우리가 통일운동을 하는 것은 선언적이고 수사적인 통일사업을 해왔는데 실제 지금 문민시대에 와서 우리가 펼것은 구체적인 통일추진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해서 쌀 3,500석 모으기 시작했다.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100석에 불과하지만 쌀이라고 하는것은 이웃을 돕고 베푸는 민족정서이기 때문에 단순한 쌀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

으로 실천함으로써 통일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전에 사회자가 오늘 토론회가 통일문화의 시작이라는 말을 했는데 실제 통일문화의 지역특화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 착안할때 오늘 윤박사를 비롯한 세분의 연구와 저회처럼 실제 이런일을 실천할 수 있는 두기관이 연계해서 앞으로 통일문화 창조에 기여했으면 하는것을 제의드리고 사회자에게는 실제 일선에서 통일문화 창조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사회자: 예 고맙다. 그리고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먼저 발언하셨는데 기회가 없으셨던 분 말씀해주십시오.

김경태: 저는 통일연수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2년전 퇴직한 김경태올시다. 오늘 통일문화 개념정립이 꽤 어려운데 윤덕희박사께서 정확하게 분류를 해주시고 개념정의를 내려주시고 특히 제가 감명받은것은 결국은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남쪽에서 먼저 완성하는 것이 통일의 준거가 되고 포용력이 된다는 그런 논리에서 우리 통일문화 정립을 위해 먼저 남쪽에서 시도하자는 점에 감명을 받았다.

앞으로 통일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다원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것을 암시해 준것에 대해서는 꽤 인상깊고 감명깊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이런 기회에 건의하고 싶은것은 북한과 우리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천년 역사를 가진 한 민족이니까 민족문화적 차원에서 문화교류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 문화계에서 많이 제기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체제를 뒷받침해주는 문화가 있다. 정치문화, 사회문화, 교육문화 거기에 독특한 그것을 지탱해주는 문화가 있고 공산주의, 김일성체제를 지금까지 지탱해온 것은 또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부터 접근하자는 얘기는 북한체제 붕괴하라는 얘기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은 2차적인 것으로 놔두고 먼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경제적인 접근, 교류, 교역, 협력, 이쪽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가서 북한과 하나의 민족이란 차원의 문화적 영역을 협력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아까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것중 지적하고 싶은 의의가 있는바, 남북한에 문화적 갈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문화적 접촉도 없었다. 그래서 사실 갈등이라는 표현은 빠른 얘기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점은 앞으로 더 남북간 사회개방이 되고 접촉이 될때 나타날 수 있고 제기될 수 있는 분야이지, 지금은 완전한 단절, 이질화단계이지 갈등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사회자: 플로어에 계신 구중서박사께서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구중서: 네 고맙다. 뭐 특별히 질문할 것이나 미심쩍은 것은 없다. 좋은 토론들 좋은 발표들 잘해주셔서 공부 많이 되었다. 제가 들으면서 느낀것은 통일문화가 주제니까 문화에 역점을 두시는 것은 당연한 것 같다. 그러나 통일하면 권력통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쉽다.

사실 김호기선생께서 체계통일과 사회통합을 두가지로 분류를 하

셨는데 그것보다 구별되고 선행되는 것은 권력통일이다. 권력통일이 있으면 그 권력에 따라서 제도통일이 온다. 그다음에는 정신통일, 이견 통합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국내에서 저절로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를 허용하는 나라에서는 모두다 분명히 이데올로기가 전혀 다른 국민과 단체가 한 사회안에서 통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뭐니뭐니해도 권력통일이 가장 선행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독일통일이 그럭저럭 성공하고, 예멘통일은 잘못되었다는 것은 마치 문화적 교류가 선행되었기 때문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통일이 성공하고 못하고는 어느 한쪽에 우월한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대등한 힘속에서 대화에 의해 서로 이권을 나눠먹는 식의 예멘같은 경우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통일의 역사를 보면 1871년에 독일통일의 경우에도, 페르시아의 월등한 힘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졌다. 지난번 독일통일의 경우도 서독의 우월한 힘에 의해 되었다. 우리 삼국통일의 경우도 신라가 비록 외세를 끌어들이었지만 정신적으로 분열된 백제, 고구려보다 우월한 힘이 있었고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할 때도 우월한 힘을 가지고 말 안듣는 백제는 무력통일하고 말 잘듣는 신라는 흡수 통일한 것 아닌가. 베트남도 마찬가지구요. 이렇게 어느 일방의 우월한 통일이 있으면 되는 거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예멘통일이 실패한 거다. 그 두가지는 지적하고 싶다.

사회자: 네 고맙다. 오세웅의원님 말씀하시죠.

오세웅: 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 통일된 후의 문화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은게 아니라 민족공동체 건설을 하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측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면 득과 실이 되는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간단히 말해 ‘남북의 창’같은 프로그램을 중간에서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듣게 하는것이 남북통일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일부 여론이 있다. 저 자신도 결론을 못짓고 있는데……. 지금 먼저 말씀하신분들이 여러가지 문화에 대해 말씀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남북회담때 상대방이 이야기 할 때는 박수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 예술단이 왔다갔다 하면 박수치는 사람이 좀 있다. 평양에 가서 우리나라 무용하면 박수도 치고, 이쪽에 그쪽사람 오면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이견을 조금이라도 덜 가질 수 있는게 문화면이 아닌가 싶다. 또 다른 한가지는 이북의 방송을 듣게 한다는 것은 다시말해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되게 있기 때문에 통일이 늦춰지고 있으니 우리의 가치관을 고치기 위해 그사람들의 방송을 들어야 한다는 논리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쪽에선 우리방송을 듣지않게 할테니까. 만일 그런것을 정부측에서 허락한다면 우리의 득과 실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이북에도 그쪽은 막으니까 실은 없을 것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쪽에도 실이 있을지? 좀 답변이 길어질지도 모르겠지만 특히 독일에 의해서 동독 TV에 방영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김선생은 그쪽에 전문가이시니까 그정도 참작해서 말씀해주시죠.

유재천: 대답해 주실분을 지명하셨기 때문에 김선생께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죠.

김학성: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할때 이야기를 했다.

서독의 방송이 동독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은 결국 체제붕괴를 일으키는데 즉 동독 주민들이 동독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독 체제를 동경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문화적으로 동독주민이 서독 주민의 문화를 부러워해서 간 것이 아니고 자체 붕괴를 하는등 이바지를 했고, 문화적으로는 서독의 문화를 동독 주민들이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세계와는 달리 서독의 자본주의세계는 이질적인 것이고 환상의 세계였기 때문이다. 어린애들이 만화나 영화를 보면서 저건 환상의 세계라면서 자신들의 세계와는 분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혹자는 서독의 방송이 동독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은 동독체제를 안정시키는데 이바지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 호네커가 1970년 들어서면서 서독 방송을 그대로 보게 했다. 모두 다 볼 수 있게 됐다. 그 자체가 결국, 서독방송이 동독에 방송됨으로써 동독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동질화되는 부분에서는 크게 이바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자체 붕괴하는데에는 크게 이바지했다. 그건 분명하다.

그와 반대로 서독주민들은 동독방송을 볼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게 세감하고 팔(PAL) 방식이 달랐다. 사실 서로 맞지 않았다. 그러나 동독에서는 서독방송을 보려고 테코오즈라는 것을 개발해서 부착해가지고 봤다.

만약, 북한방송을 우리가 본다면 그것은 우리세계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물론, 혹자가 이야기하듯이 북한사회를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문제는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북한에서 방송하는 것이 북한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인가, 즉 실제문화냐 아니면 정권적 차원에서 반영한 것이냐, 그 두 부분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실제 문화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북한문화를 그대로 본다고 해도 북한 문화의 실제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부분에 있어서는 효용성이 그렇게 없지 않나 생각한다.

**유재천:** 북한방송을 완전히 개방할때 득과 실이 무엇인가, 또 북한쪽에서 그렇게 한다면 득과 실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나중에 민족통일연구원이 원탁토론회를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정책 결정하는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리를 다시 마련해야할 것 같다.

오늘 통일문화의 포석을 놓는 출발점이 되는 모임을 가졌다. 세 분께서 좋은 내용의 발표를 해주셨고 또 네분께서 도움이 되는 발표를 해주셨다. 앞으로 민족통일연구원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민족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통일문화 형성을 위해 정책 대안도 만들고 실천 프로그램도 제시하는 그런쪽으로 계속 나갔으면 하는것이 바램이다. 오랫동안 이자리에 앉아 경청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주제발표, 토론해 주신 여러선생들께 감사드린다. 학술회의 마치겠다.

〈附錄〉會議日程

- 13:30~14:00    登 錄
- 14:00~14:05    開會辭：李秉龍(民族統一研究院 院長)
- 14:05~14:45    主題發表
  - 사 회：유재천(서강대 교수)
  - 발 표：윤덕희 박사(통일문화연구사업부)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 이현경 박사(통일문화연구사업부)  
          “남북한 문화교류의 현황과 문제점”
  - 김학성(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독일사례를 통해 본 문화적 이질성 극복 방향”
- 14:45~15:00    Coffee Break
- 15:00~17:00    討 論：김호기(연세대 교수)  
                  임희섭(고려대 교수)  
                  백경남(동국대 교수)  
                  윤경태(통일연수원 교수)

---

---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세미나시리즈 94-05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5,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4年 12月 日

發行日 1994年 12月 日

---

---